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312-01



윤석열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9 791163 576105
ISBN 979-11-6357-610-5

윤석열정부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국정과제 추진 개요

국정과제 추진 경과 010

국정과제 체계 010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2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013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14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15

[국정목표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016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017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020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025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30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035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37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04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044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048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051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055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058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063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068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074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078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084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089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094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099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103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107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11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15

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19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23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29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33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38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42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47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52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56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60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64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68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70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73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76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81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85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89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96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1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205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209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214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219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22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28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33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38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43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48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52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57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62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67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72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277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81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85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90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95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300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304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309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313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317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322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326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331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36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40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46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50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56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61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66
79.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72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76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81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86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90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93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97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401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406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410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414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418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423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427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432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436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42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46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52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58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63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68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72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76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차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79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84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89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94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97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502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506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509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514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518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523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526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531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534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537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542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546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550

01 국정과제 추진 경과

-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안)를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표, 23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는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12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과제 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간 유기적 협조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2 국정과제 체계

국정비전 - 6대 국정목표 - 23개 약속 - 120대 국정과제 - 574개 실천과제

-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당초 120대 국정과제를 576개 실천과제로 구체화했고, 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실천과제를 수정·보완해 2024년 5월 현재 총 574개 실천과제로 구성했습니다.

국정비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 원칙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7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03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약속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방통위)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10	촉촉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약속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26개)	[약속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약속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약속07]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약속0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국정목표 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약속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약속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국가유산청·문체부)
	[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약속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국정목표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약속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약속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국정목표 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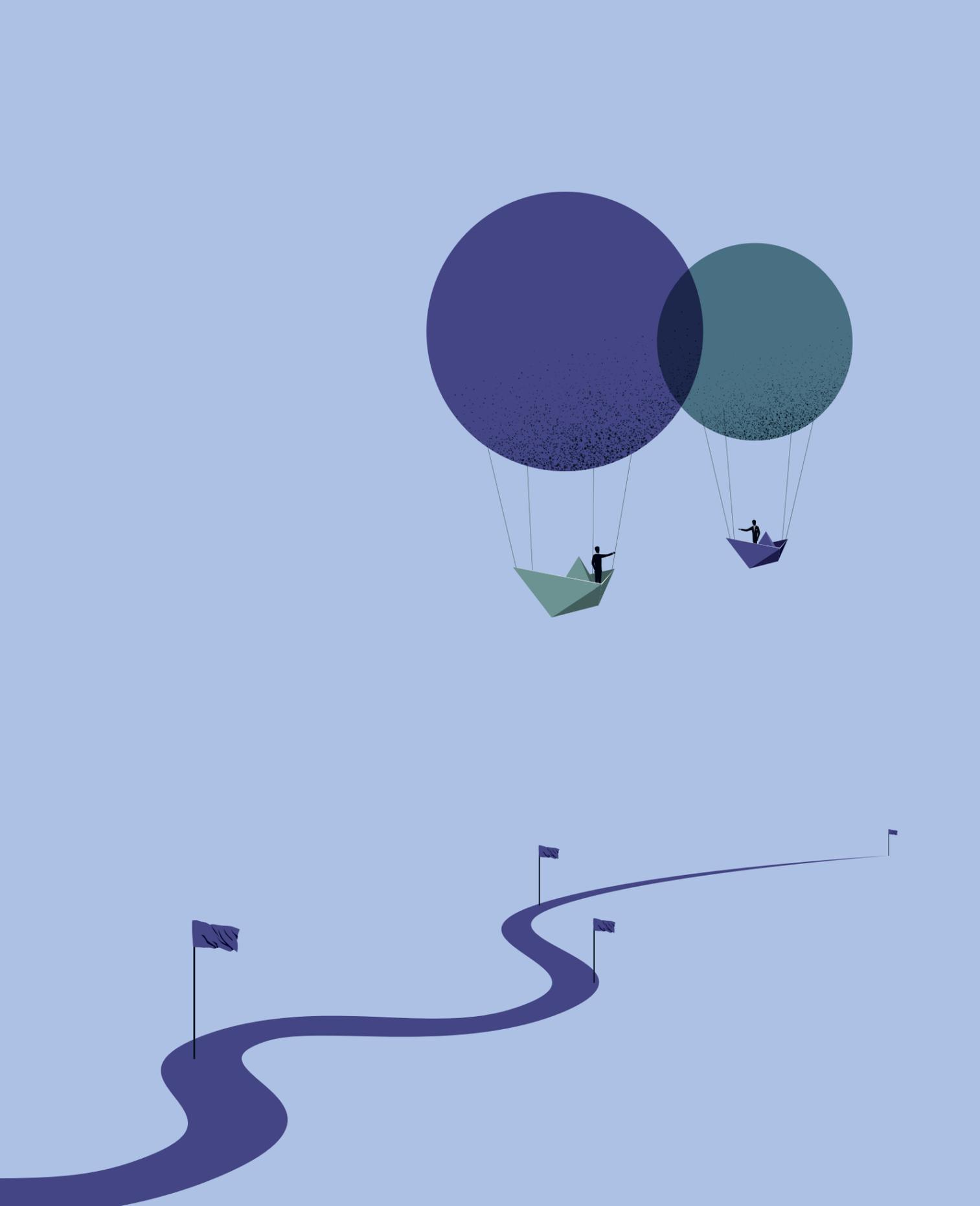
-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약속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약속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약속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차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부)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부)	

국정목표 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행안부)
	[약속22]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약속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행안부)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손실보상금 8조 5,000억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권 이자환급도 신설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었으며, 폐업·재취업·재창업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들이 주도하는 상권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랜기간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0%(733만 개), 전체 고용의 45.8%(1,046만 개)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주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뒤이은 고금리·고물가 등의 3고(高) 위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등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외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민간주도의 지역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련 청소년 신분확인 불합리한 규제개선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했습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8일 개최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한 결과입니다. 식약처의 민생토론회 당일 조치를 시작으로,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행정, 법령개정, 현장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업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내용을 기초지자체에 신속히 전파했고, 경찰청도 현장협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 주무부처인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 문체부와 함께 4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입법절차를 총괄 지원했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 4월까지 모두 개정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은 4월 기준 조회수 730만회를 돌파하고, 다수의 긍정적인 언론기사가 보도되는 등 정부의 노력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황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이 입을 피해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손실보상’을 총 8조 5,000억 원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이중 7조 2,644억 원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신청 익일 지급되는 신속지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미신청자가 최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문자·유선·SNS 안내를 월 2~3회 진행했으며 그 결과 미신청자 수가 26만 5,000개(2022년 11월) → 22만 5,000개(2022년 12월) → 7만 8,000개(2023년 12월)로 감소했습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방문,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소통을 강화했으며, 24시간·365일 헬프데스크 서비스 등을 신규로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도 출범 16년만에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을 8개로 대폭 확대*하고, 재난 등 일시적인 위기에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2022년 11월 이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2022년 11월 24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소상공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2023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만 8,000여 명으로 전년(4만 3,000여 명)과 비교해 10.4% 증가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같은 기간 1만 8,000여 명에서 1만 9,000여 명으로 6% 증가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2024년 1월 9일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관련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

정부는 2023년 코로나19 직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했으며, 2024년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신설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자금 중심으로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2023년 3조 원 → 2024년 3조 7,000억 원)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3,000억 원)을 신설해, 5~7% 중소기업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자차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시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9조 5,000억 원)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 확대, 가계대출 대환대상 포함 등의 제도개편을 했으며, 올해 3월에는 지원대상과 혜택을 강화(2024년 3월 18일~)해 고금리 차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대상) 20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20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혜택)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총 △1.2%p 비용절감 효과

대출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출범(2022년 10월 4일)해 원리금 감면,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월 12일 보다 신속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정보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성실상환기간을 단축(2년 → 1년)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기준) 코로나19 직접피해 입증 → (확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폐업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재기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경영위기 → 폐업 → 재도전 단계별 패키지를 제공해, 2023년말 기준 총 8만 7,749개사에 1,46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패키지 지원 중 맞춤형 취업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54.4%)보다 높은 재취업률(61.8%)을 기록했으며, 재창업률(29.6%)의 경우는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상 신생률(14.1%)에 비해 약 2.1배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라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한국전력,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24년 2월 신청·접수를 개시

해 3월 말 기준 52만 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70%까지 확대(2022년 34개, 2023년 75개 법령 공포·시행)하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을 유예(2023년 15개 법률 국회 제출, 4개 대통령령 공포·시행)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 영업기준을 개선하고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022년 8월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과 2023년 5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비롯해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선정해 스타트업·창업자와 협업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34개사, 2023년에는 105개사를 선발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투자' 등 민간자금 투융자 시스템을 구축(2023년, 430억 원)해 민간투자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해 졸업 기업의 생존율이 82.0%(2023년말 기준)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이 창업 후 사업화를 통해 성장하고 지역의 앵커 스토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통해 고객편의와 경영효율을 높이는 무인 단말기·서빙로봇 등의 스마트 기술을 보급(9,543개 상점)하고,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를 도입(4,158개 소상공인)해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혁신에 필요한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보급사업'을 고도화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빙로봇·무인주문단말기 위주로 보급기술을 개편(서빙로봇 보급 : 2022년 165대 → 2023년 479대)하고, 대기업 등과 협력해 민간에서 검증된 '스마트기술 패키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등을 연계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각화했습니다. 향후에는 업종별 우수 스마트상점 모델을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매출 관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 보급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했습니다. 교육, 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통한 역량강화, 다양한 온라인 채널입점 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인프라 구축·운영으로, 2022년에는 10만 3,000명, 2023년에는 11만 5,000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민간채널과 협력 강화를 통한 성과 극대화와 지원 사업 내실화를 통해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 개사 양성을 목표로 해 온라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50곳에 공동배송센터 구축을 지원했으며, 시장별 배송인력 100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1만 4,112명에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SNS 활용 마케팅 교육 등 디지털화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전통시장 내 공동배송센터 250곳 구축, 배송인력 500곳에 공급을 목표로 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연간 1만 명에게 O2O 입점 등 디지털화 교육 등을 지원해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 내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트랙(2022년 170개사, 2023년 100개사)과 로컬간 또는 선도기업과 아이디어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원하는 협업 트랙(2022년 12개 과제, 2023년 12개 과제)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와 노포 등이 서로의 아이템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지역정체성을 담은 로컬브랜드 창출사업(2023년)을 신설해 4개 지역을 지원하고,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을 위해 6개 권역별로 로컬페스타를 개최해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시행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한 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상공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지역상권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마스크 착용,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한편,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비롯한 상시 감염병, 결핵, 의료감염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양상은 변화하며 장기화됐습니다. 이에 방역 및 의료 대응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상존하는 넥스트팬데믹 위험*과 상시 감염병의 발생·유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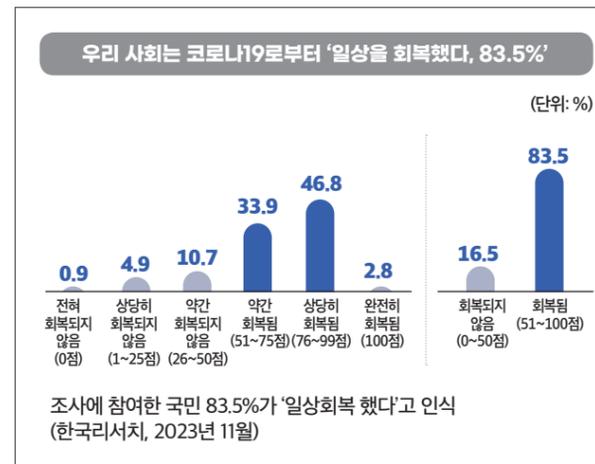
* 전 세계적 규모의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가 2~5년으로 짧아지는 추세(WHO 사스(2003년) →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6) → 메르스(2015년, +6) → 코로나(2020년, +5)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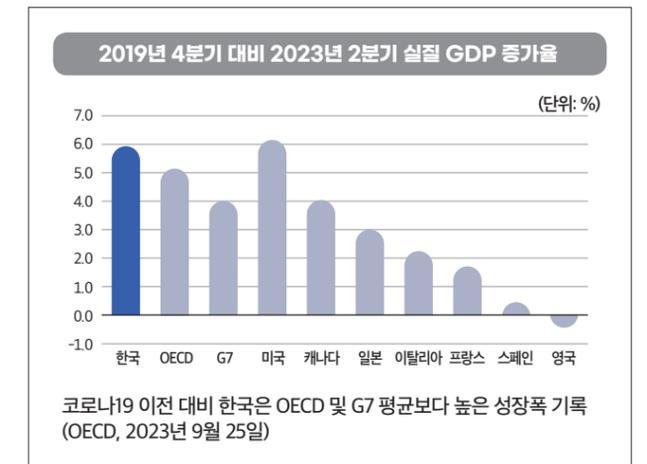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2023년 6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같은 해 8월에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치료제·백신 지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유지하는 한편,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했으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회복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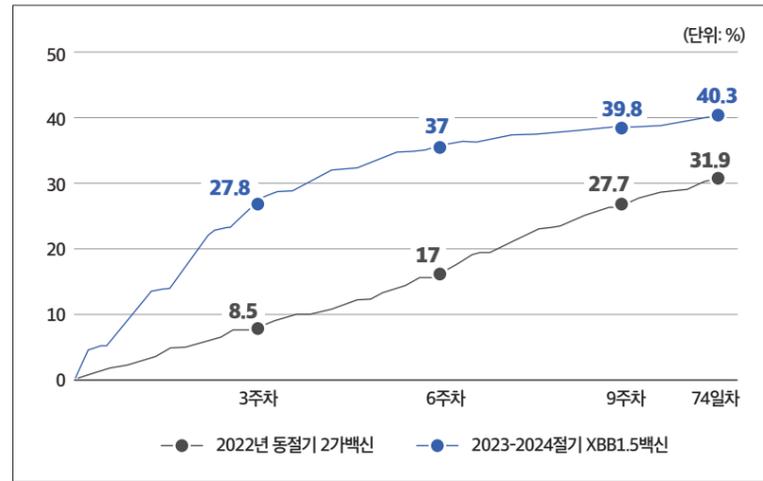
<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 인식 >



< 실질 GDP 증가율 >



< 2022년 동절기 추가접종 및 2023-2024절기 65세 이상 접종률 비교 >



또한, 접종·감염 경험에 따른 전 국민 면역수준, 항체 지속기간 등 과학적 근거와 접종수용도를 고려해 3월 22일 ‘연1회 접종’이라는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5월 15일부터 면역지속기간이 짧은 고위험군 대상 상반기 추가접종으로 약 5만 명, 10월 19일부터 전 국민 대상 2023-2024절기 접종으로 연내 약 480만 명, 그 중 65세 이상 394만 명(40.3%)이 접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했으며, 특히 2023년 1~7월 간 약 8,600여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6일 사망사례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업’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부검 미 실시 사례 지원금’과 ‘시간근접 등 위로금’이 신설됐습니다.

지원 확대 이후 사망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기존 83명에서 총 1,359명을 사망 관련 보상·지원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피해보상·지원제도	기존	개선
부검 후 사인불명(42일 이내) 위로금	사망위로금 1천만 원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신설) < 대상범위 확대 및 위로금 상향 > ① 부검후 사인불명(42일 → 90일 확대), 1천만 원 → 최대 3천만 원 ② 제도시행전 부검미실시사례지원 (신설), 최대 2천만 원
-	-	시간근접 등 위로금 (신설) < 시간근접 및 특이사례 신규 지원 > ① 3일 이내 사망(신설) 1천만 원 ② 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경과등을 다각적 검토 결정된 경우(신설) 최대 3천만 원(1~3천만 원)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 체계 선진화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下水)검사 확대를 통한 선제적 감시, 안정적인 의료대응을 위한 상시병상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3차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위협에 대한 근본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원헬스 기반 ‘제2차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결핵퇴치 기반 마련을 위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2027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사망률 40% 감소를 목표로 한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시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는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지난 2023년 12월 11일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 신종감염병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및 국제기구가 공동 발족한 협의체(2014년 2월)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개소식(2023.12.11)

GHS 조정사무소는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한 전 세계 노력과 대비·대응 계획을 상호간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는 한편, 감염병 위기대응 공조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조정·지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정책 근거 마련과 민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코로나19 정보와 전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한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 KDCA Covid-19 NHIS cohort)’를 구축했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해 민간 연구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총 191건의 맞춤형 연구 자료(Database)가 승인됐고, 26건의 논문이 국제적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병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전 방역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와 교육을 실시하고, 2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해 안정적인 개통을 준비했습니다.

향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연계 확대한 감염병 빅데이터를 개방해 민간 연구 활성화와 근거 기반한 방역 정책 마련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의료자원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 시 병상 배정과 전원 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정된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경우 2023년 9월 총사업비 확정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감염병 의료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과정에서도 공백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했고,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감염병 상시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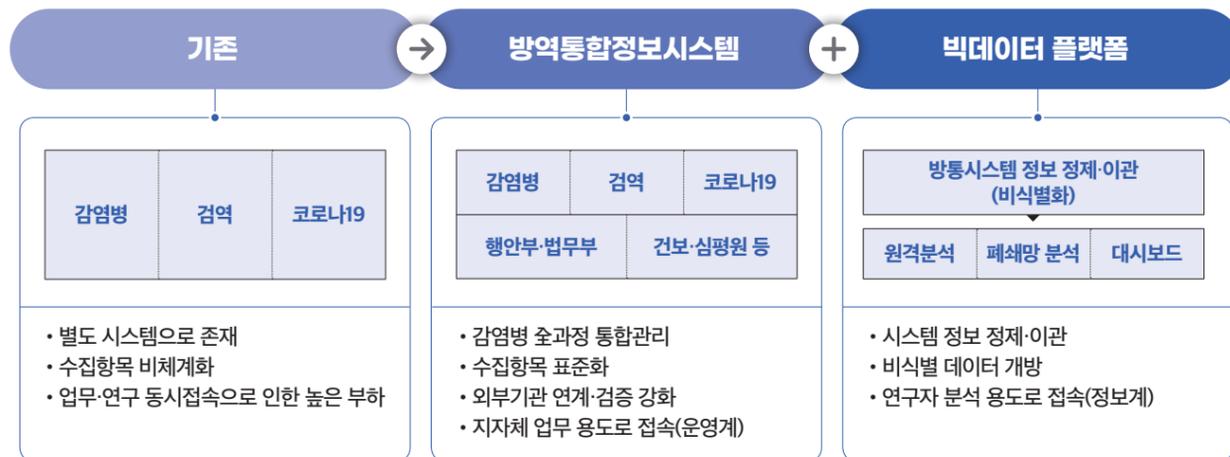
아울러,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표준을 제시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의료대응 주체별 역할을 정립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일상적 관리 체계 내로 편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빅데이터 신청절차 >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한울 3·4호기의 신속한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원전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 등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특히, 이집트 원전 건설 및 루마니아 주요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수출 분야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 SMR)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원전시장에 대한 대응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한 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으며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기업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던 일감 공급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2023년 3월)과 보조기기 발주(2023년 5월) 등을 통해 2022년 2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3조 원으로 지속 확대 공급 중입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SMR 시장에 대응한 한국형 노형 개발 착수(2023년 3월),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2023년 7월)과 함께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둬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단일 설비 최대규모인 2,600억 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등 정부 출범 이후에만 4조 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 등 원전의 활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먼저 신한울 3,4호기는 2022년 7월 건설재개를 결정하고,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건설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간 집중 협의를 통해 건설재개 이후 11개월 만인 2023년 6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해 본격적으로 원자로 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정성을 전제로 2030년까지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7기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을 완료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고리 2·3·4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의견 수렴 완료 후 운영변경허가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계속운전 신청과 면밀한 안전성 확인, 가동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속운전의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계속운전을 통한 원전 활용 확대의 토대를 강화했습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

탈원전 기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일감 공급을 지속 확대했습니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을 공급했으며, 2024년에는 윤석열정부 최대 규모인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대금의 최대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업은행 특별금융프로그램 출시, 원전기업 특별보증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하고, 2024년에는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1조 원 규모로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2%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용자사업과 원전기업이 수출계약 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1,250억 원 규모의 수출보증보험을 정부예산으로 신설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최근 원전산업의 매출,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는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원전산업이 활력 회복에 그치지 않고 미래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전 업계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투자 활성화, R&D 혁신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원전의 수출산업화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에 힘입어 체코,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 중점 수주국에서 진일보한 원전수출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건설을 목표로 입찰을 진행 중이며, 2023년 10월 한수원은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폴란드는 현지 법률에 근거한 사실상 비가역적인 정부 승인인 사업추진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2023년 11월, 대통령의 국민방문 계기에 정부 간,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네덜란드도 2023년 12월, 대통령의 국민방문 계기 정부 부처간 원전협력 MOU를 체결하며 수주의 첫걸음을 띄게 됐습니다.

정부는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이 블루오션이라는 인식 하에 2023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원전수출 지원 예산 확대(2022년 33억 원 → 2023년 69억 원 → 2024년 335억 원), 원전수출 중점 공관(8개소)·무역관(10개소)설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2023년 13개사 선정)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2022년 5월~2023년 12월)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수출 계약액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2022년 8월,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계약식(2023.6.27)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3조 원), 2023년 6월,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루마니아 TRF 건설사업(2,600억 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한편, 기자재·운영·정비·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을 위해 재외 공관 및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지속 보완해 나가면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입각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2023년 6월 한미 핵안보실무그룹 제6차 회의 ▲2023년 11월 제4차 한미 핵 테러 대응 공동훈련(Winter Tiger IV) 최초준비회의 ▲2023년 12월 국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워크숍을 미국과 공동 개최해 한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제5차 한·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를 개최해 UAE와 바라카 원전 후속호기 건설, 제3국 공동진출 협력, SMR 분야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사안을 논의함으로써 미래 시장 진출을 대비했습니다.

양국 간 활동 외에도,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IAEA 총회에서 IAEA 이사국을 19번째로 수입함으로써 세계 원자력 5대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북핵문제 등 우리나라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적극적인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기초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의견수렴

방안 및 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차례 공청회 및 11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4개 발의 법안 병합심의를 지원해 10개 쟁점을 도출하고, 이 중 8개를 해소했습니다.

특별법을 적극 홍보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원전 소재 기초·광역자치단체 및 시·군의회, 전문가·학회, 미래세대 등에서 19회에 달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견해를 밝혔으며, 2023년 11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국민인식조사에서 91.8%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마련이 시급하며, 80.3%가 건식저장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4년 2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으로서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대학지원사업, 전문가 집체교육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인력 양성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 제정 직후에는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특히 부지선정 절차를 신속히 착수해 처분시설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에 대비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와 연립대학원 운영 등 학계 및 산업계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달성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규제 신뢰를 한층 높이기 위해 신규 원전 인허가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2021년 7월) 경험을 활용해, 신한울 2호기의 안전성을 철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확인한 후 2023년 9월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결을 거쳐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의 건설중단 기간을 고려해, 건설허가 심사 효율화를 위해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채널인 규제현안점검단을 202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며, 최신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도 심사 현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MR 등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SMR 개발과 규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2023년 4월 ‘SMR 안전규제 방향’을 발표하고,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년 8월에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의 독립성·공정성 보장과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원안위·과기부·산업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10월)했습니다. 또한, 규제연구 컨트롤 타워인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해 2026년에 예상되는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앞서, 적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안전성 심사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2023.7.4)

차세대 원전 기술 산업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SMR 분야에서 향후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먼저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을 개시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한국형 SMR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 2월, i-SMR 개발단을 출범시켜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완료한 기본설계를 토대로 2024년부터는 표준설계에 본격 착수해,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우수한 제작 역량이 SMR 분야로 확대되기 위한 제작지원, 혁신제조·공정 R&D 등 사업을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SMR 노형 상용화 시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작 역량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SMR 사업화 역량 확보를 위해 2023년 7월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국내 SMR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제도 정비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SMR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추진 전략(“(가칭)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2024년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새로운 형사법령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 분리에 따른 책임 분산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른바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수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주관으로 2022년 6월부터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을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수사준칙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수사현장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또한, 수사절차 전반에 있어 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검·경 어느 일방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수사 속도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국민의 억울함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역량 복원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반부패부' 분리·신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직제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직 개편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증권·성폭력범죄 등에도 엄정하게 대처해 2023년 검찰의 인지·구속률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각 37.5%, 33.5%)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사건을 직접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비율 역시 증가해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을 복원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2023년 검찰의 직접 몰수·추징보전가액이 전년도 대비 41.5% 증가하는 등 '범죄로 얻은 이득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구분 (명, 원)	인지	직구속	위증 인지	무고 인지	마약 인지	성폭력범죄		증권 범죄 인지	보완수사 요구율	*중국 처분율	범죄수익환수 (검찰직접청구 보전재산가액)
						인지	직구속				
2022년	5,907	1,040	495	129	765	182	106	355	10.4%	76.6%	480,117,030,066
2023년	8,124	1,388	622	276	1,167	234	141	437	9.6%	77.5%	679,382,478,364

* 검찰 처분 중 보완수사, 수사중지, 타관이송을 제외한 처분율

또한, 최근 공판중심주의, 엄격한 증거조사 등 변화하는 공판환경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 철저한 공소유지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해, 2023년 1·2심 및 검찰인지사건·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전년도 대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구분	1심 무죄율	2심 무죄율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2022년	0.94%	1.56%	5.67%	56.3%
2023년	0.92%	1.38%	3.54%	37.5%

앞으로도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건전 재정 기초를 견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입니다.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세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향후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국가채무비율(%)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 (2023년) 50.4
- 관리재정수지(%)
(2018년) △0.6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 (2023년)△3.9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등 포괄적인 재정지출 효율화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서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선언하면서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재정준칙을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및 재정준칙 콘퍼런스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이후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 9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다음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 재정운용 평가(2023년 11월)
- 준칙 바탕의 재정운용은 고령화에 대응해 공공부채를 관리하는데 도움

< 재정준칙 도입방안 주요내용 >

① 준칙유형	② 관리기준	③ 보완장치
수지준칙	관리재정수지 $\Delta 3.0\%$	위기시 준칙 면제
	(채무 60% \downarrow 초과시)	5년마다 한도 재검토
	관리재정수지 $\Delta 2.0\%$	④ 도입근거
		법률

정소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재정준칙 적용 면제 시에는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액을 채무 상황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 6월 2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 기초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주요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재정투자 여력 보완

윤석열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2023년 4월)을 발표해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발굴부터 공사·운영단계까지 추진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민간투자사업(BTO)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했고, 6조 9,000억 원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자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도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최초로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나아가 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국가정책 뒷받침

윤석열정부는 미사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2022년 8월)'을 발표하고 출범 이후 2024년 3월말까지 3조 3,000억 원의 유휴 재산을 매각하는 등 국민과 지자체

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신설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지자체 5년 → 10년)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활용가능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을 위해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유휴 추정 토지 16만 9,000필지와 2,605동의 건물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 수요가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7개 권역별로 세 차례(2022년 11월, 2023년 6월, 2024년 3월) 개최했으며, 국가·지자체 고위급 협력 채널인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023년 2월, 9월)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수요 203건을 적극 해소했습니다.

그 밖에 국·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호 교차 점유 중인 재산의 교환을 추진해 2024년 1월 서울시와 545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주거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재정 건전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정플랫폼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재정사업의 성과지표 총 105개와 정부지정 12대 핵심 재정사업 중 10개에 대한 인포그래픽 및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대국민재정정보시스템 '열린재정'에 공개해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신규지표 및 변경사항 현행화를 통해 쉬운 재정정보 제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순기에 따른 예·결산 정보의 시각화 데이터 제공으로 재정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부처별 세출 예·결산 현황, 최근 5개년 예·결산 추이, 성질별 예·결산 현황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해 차년도 예산편성 지원과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024년에 특별회계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50여년 전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공교육비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으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재원배분 방식

을 조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조 2,4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13조 2,4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신설 시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사업 중 9조 7,400억 원의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증액 및 신설됐으며, 2024년에 해당 사업들을 15조 5,3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의 자율 혁신(2조 4,000억 원), 학비부담 완화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6조 1,000억 원),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2조 4,000억 원) 등에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 등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교육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재정절감 및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개편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년 8월 22일)을 수립해 재정성과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환류를 유도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처음으로 설정·공개했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밀착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모든 평가제도에 도입해 평가결과의 예산환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집중적인 성과관리 추진에 중점을 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2024년 1월 30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예타제도를 신속·유연·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예타절차 도입 등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완료했고, 예타 제도 운영상의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2023년 4월 12일)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예타 대상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국가결산서 작성을 위해 2022년 12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간소화하고 국가 현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표를 도입했으며 결산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분산된 재무제표 설명자료들을 주석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이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2024년 3월 국가회

계법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으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과 dBrain+ 시스템 개편은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재정 전반의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결산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윤석열정부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업, 장기간 점검이 없었던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사업 등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국책사업·보조금 사업의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현장 중심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책수립 이후에도 이행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부패 근절과 재발방지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위법·부적정 대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 부당 집행, 전력분야 R&D 사업관리 부적정 사례 등 대규모 비위를 밝혀냈습니다. 1차 점검결과(2021년 9월~2022년 8월) 2,267건의 위법·부적정 집행(2,616억 원)을 적발한 데 이어 2차 점검결과(2022년 10월~2023년 5월) 5,359건의 위법·부적정 집행(5,824억 원)을 적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308개 전 행정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약 1,954억 원의 환수 등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노력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해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했고,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을 차년도 예산편성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도 강화했습니다.

향후 재정누수 사각지대, 고질적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해 부정수급 근본원인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KBS 경영평가 제도 등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유료 학습사이트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했고, 국민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OTT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청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존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공영방송은 보다 차별화된 역할 수행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정보,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특화된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방송·미디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 등

공영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기존 매체(TV, 라디오) 위주 평가에서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영방송사로서 경영평가 지침 전반에 걸쳐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매체별 ‘콘텐츠’ 평가 외 ‘공영미디어 플랫폼’ 평가항목을 신설해 플랫폼 경쟁력과 경영성과, 운용효율성 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의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소득·지역 격차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유아·어린이, 청소년, 평생교육 등 전 국민 맞춤형 교육 콘텐츠 5,235편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책맹인류>, <딩동댕 유치원>, <공상가들> 등의 EBS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었고, 제25회 양성평등 미디어 대상(대통령상),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상, 제56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 Talk Shows 부문 Platinum Remi Award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연간 71만 원 수준의 EBS의 유료 학습사이트 ‘중학 프리미엄’을 2023년 7월 17일부터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 수가 무료화 이전 1만 4,937명에서 22만 9,089명(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생애주기별 전 국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6월 1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전기료와 함께 잘못 납부하고 있었던 사례를 바로잡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납부 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과 농작물 냉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 주민에게 2개월 간, 2022년 12월에는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12개월 간, 2023년 4월에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6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적재원인 수신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공적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2023년 11월 9일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방송3법(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재의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최대주주)의 사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지배구조) 등에 대한 것입니다. 위 재의 절차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공적재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방송채널(공적채널) 콘텐츠의 경쟁력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적채널 평가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공익채널 및 정부예산 투입 채널’로 공적채널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기존 등록 PP 평가 제도를 확대·활용하되, 공적채널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또한 2024년 공적채널 시범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해당 평가가 콘텐츠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체계적인 주택공급 청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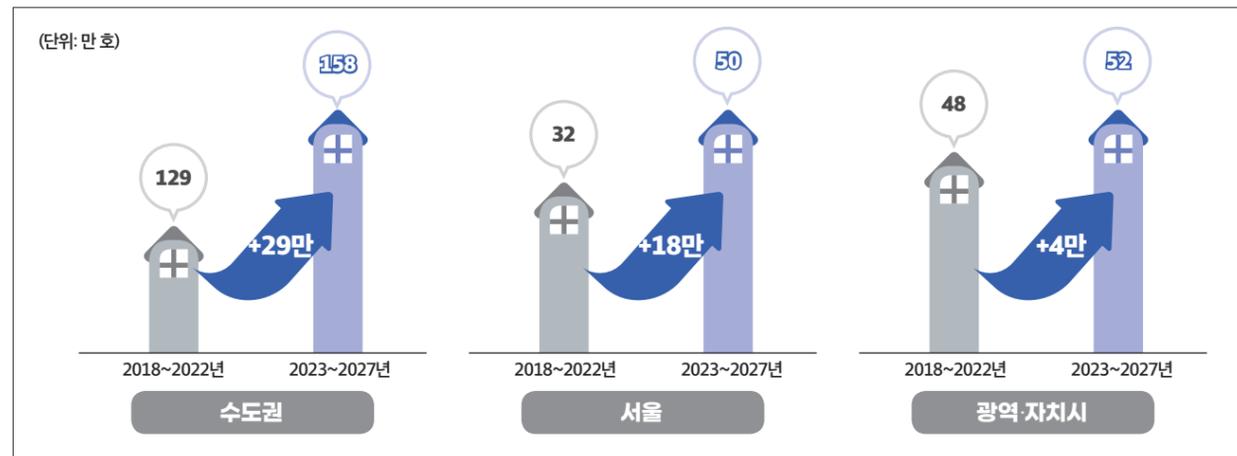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 징벌적 과세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은 크게 늘었고, 강화된 대출 규제와 수요 억제에 치우친 정책으로 인해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해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보유자들은 물론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국민 주거불안이 심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에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0만 호+α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인허가 기준)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관계부처와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2023년 1월), 전매제한(2023년 4월)과 청약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은 늘리고, 내집 마련 시기는 조기화

분양가 상한제(2022년 7월), 안전진단(2023년 1월), 재건축부담금(2023년 12월) 등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년 12월)을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중장기 주택 공급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했습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2023년 1월 개정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완화(50 → 30%)하는 한편 주거환경은 확대(15 → 30%)하고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기준 개선 이후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과거 5년간(2018~2022년) 65개 단지 대비 2023년 163개 단지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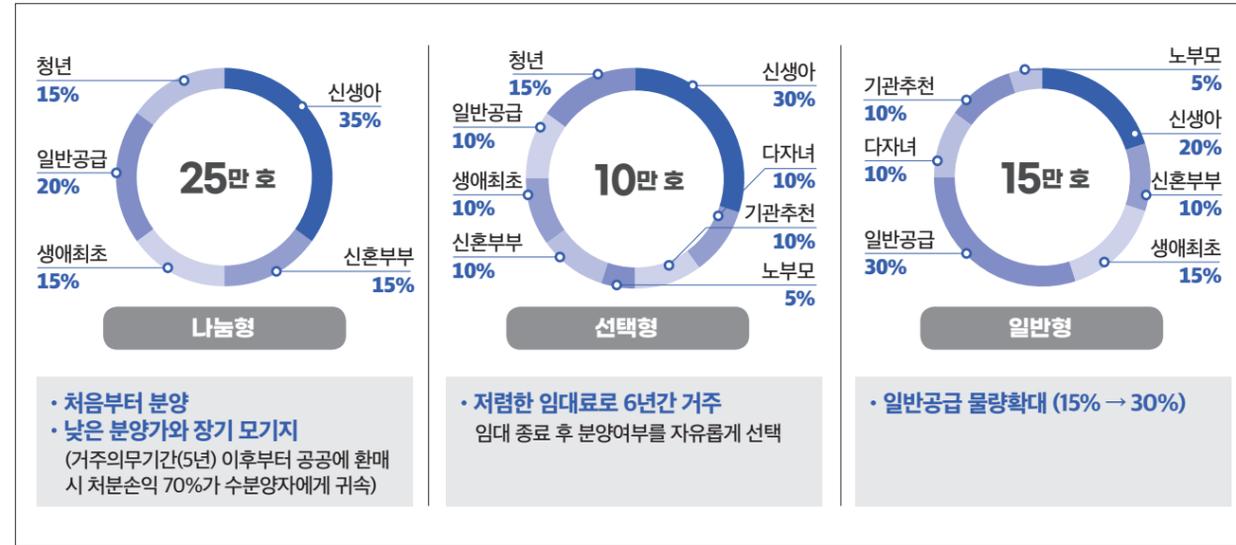
한편,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022년 9월에 발표하고, 2023년 12월 관련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4년 3월 27일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됐습니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3,000만 원에서 8,000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적용 부과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등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단지가 111개에서 67개단지로 축소되고, 평균 부과금액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에 대한 추가 감경과 60세이상 고령자 납부유예로 인해 실수요자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은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 및 사업주체 구성을 다른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사업 초기자금 지원 등 사업성 개선, 공사비 갈등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표준계약서 배포(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24년 3월)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재건축을 규제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소형주택이 보다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및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건축 규제는 개선하고,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 세계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구입시 세계 혜택 등을 통해 수요층은 두텁게 확충해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공공주택 50만 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

<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



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23년에도 3회(6월, 9월, 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동작구 수방사, 서울 마곡, 위례 등 수도권 내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1만 1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25만 335건이 접수되어 25: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고(2022년 9월, 2023년 2월, 2023년 4월),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해 2023년 6월 1일부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들이 시행됐습니다.

신속한 피해조사와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 지원, 매입임대·긴급주거 등 주거지원, 저리·대환대출 등 피해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했고 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법 시행 6개월 간(2023년 6~12월) 약 1만 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저리·대환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및 외국인·재외동포도 긴급주거(공공임대주택) 지원, 법률 전문가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HUG·법률구조공단·LH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국 5곳(서울 강서·인천·경기·부산·대전)에 개소(2022년 9월~2023년 4월)했고, 피해임차인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기 위한 HUG 경·공매 지원센터도 개소(2023년 8월)했습니다.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고(2023년 10월 시행), 외국인의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에 출입국기록, 건강보험정보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2023년 8월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기준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를 실시해 2023년 5월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를 최초로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불법전매,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2차) 및 오피스텔 기획조사를 실시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발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 및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 배제를 통해 부동산 세부담을 정상화했으며,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해온 결과,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는 한편, 과도했던 세부담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고지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0년 수준인 약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됐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세율을 0.5~2.7%,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을 0.5~5.0%로 인하했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급등 등을 감안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2022년 6월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확대·개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을 완화했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2년 거주요건을 면제했습니다.

2023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중부세 관련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임대료를 유지 또는 인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구분	기존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 2년 거주요건 충족 필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선 주요 내용 >

구분	기존	개선
양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 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중부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에 대응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국회에 월세세액공제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6,000만 원)인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에는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해 요건을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의 마지막 실천과제로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윤석열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2022년 6월 21일 이전) 주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가액 12억 원

이와 같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으로, 2023년 한해 동안 20만 4,000명에게 총 4,058억 원이 돌아갔으며,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국정목표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가계부채 위험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속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생애최초 구입자금시 LTV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폭을 단일화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2일에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를 규제지역 30%(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60%)를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기준(공시가격 12억 원) 및 총대출한도(6억 원) 상향, 우대형 가입 기준(2억 원 미만) 현실화를 통해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시기에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또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정상화를 통해 대응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20.4분기) 0.50 (2021.2분기) 0.50 (2021.4분기) 1.00 (2022.2분기) 1.75 (2022.4분기) 3.25 (2023.1분기) 3.50

이에 윤석열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에 대해 LTV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집값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택연금을 개선했습니다.

< 생애최초 LTV 80% 등 확대 효과(예) >

서울시 강남구(LTV 40%, 투기지역) 소재 주택가액 6억 원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 ① 대출가능액 확대 : 3.6억 원 → 4.8억 원(+33.3%)
- ② 필요 자기자금 감소 : 2.4억 원 → 1.2억 원(△50%)

주택가격 6억 원	
기존 (LTV 60%)	
대출한도	3.6억 원(LTV 60)
2.4억 원 필요	
▼	
개선 (LTV 80%)	
대출한도	4.8억 원(LTV 80)
1.2억 원 필요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완화

2022년 8월 1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규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LTV 상한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해 주택가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 LTV(Loan-to-Value) = 대출가능한 금액 / 주택 담보물의 가치 × 100

< 생애최초 LTV 확대 관련 언론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2022.6.30)> 생애 처음 집 산다면 '3분기' 기다려라... LTV 80% 완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자금이 모자르거나, 대출한도가 낮아 고민인 사람은 올 3분기를 기다려보면 좋다... 금융위원회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소제자,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이내에서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30일 마무리한다.

생애 처음 집 산다면 '3분기' 기다려라...LTV 80%로 완화

머니투데이 | 김남이 기자 | VIEW | 2022.06.30 11:03
<https://www.money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063011889&cat=1>

|(DSR 3단계, 내 삶이 바뀐다)

▶(면담취재) DSR규제 차익이 단기간에 7배까지 사라졌다. 저금리차 '남' 제기받은 DSR 규제가 '내' 제기를 한다. 대응 방안은 내 삶이 바뀐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자금이 모자르거나 대출 한도가 낮아 고민인 사람은 올 3분기를 기다려보면 좋다. 생애 최초 주택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선의 소득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8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50년 만기' 보급과도 통한다.

금융위원회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30일 마무리한다. 이후 규제 심의,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가격(9억 원 이하)과 소득 부부합산(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이 있었고, LTV 상한선도 규제 지역이 50~70%로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3분기부터 주택가격과 소득 등의 조건은 사라지고 LTV는 80%로 통일된다. 4억 원이었던 대출한도도 6억 원으로 늘어난다.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조율을 통해 시장혼란 최소화 및 정책효과성 극대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집값급등기 도입됐던 과도한 대출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고자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LTV 우대혜택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사업자 포함)의 규제지역 소재 주담대 LTV 30% 허용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 * 투기·투과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現 2억 원) 폐지 →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이를 통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과도한 대출규제가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되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갑니다.

< LTV 규제 추이 >

2022.12.1 이전		9억 원 이하분	9억 원 초과분	2022.12.1~2023.3.1		개선(2023.3.2~)			
1주택자	투기·투과	40%	20%	1주택자	투기·투과	50%	1주택자	투기·투과	50%
	조정대상	50%	30%		조정대상			70%	
	기타	70%	7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0%	다주택자	규제지역	0%	다주택자	규제지역	30%
	기타	60%	60%		기타			60%	

* 임대매매업자 전지역 주담대 금지 * 임대매매업자 주담대 LTV 내 관리

< LTV규제 완화 관련 언론 보도내용 >

<파이낸셜뉴스(2023.3.2)> 주담대 규제 확 풀렸다.. 임대사업자 LTV 60%까지, 서민·실수요자 대출한도 폐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일환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풍이 불것이란 기대감...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게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30%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대출한도가 폐지됐다.

주담대 규제 확 풀렸다.. 임대사업자 LTV 60%까지, 서민·실수요자 대출한도 폐지

파이낸셜뉴스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일환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풍이 불것이란 기대감...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게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30%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대출한도가 폐지됐다.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2022년 9월 1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시가) 기준을 기존 1억 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2억 원(기존 1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조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우대형 가입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대형 도입(2016년 4월) 당시 ‘주택가격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하위 56%)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은 2021년 기준으로는 약 2억 원 수준입니다.

종전에는 시가 1억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은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해당 조치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건수가 전년대비 약 2배*로 증가해 저가주택을 소유한 취약 고령층의 노후보장 효과가 강화됐으며,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 가입자의 비중 증가**로 주택연금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됐습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건수 : 2022년 926건 → 2023년 1,883건

** 전체 가입자 중 수도권 비중 3.8%p 감소 (2022년 70.0% → 2023년 66.2%)

2023년 10월 12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형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가입대상 주택가격(공시가격) 상한 또한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 약 703만 가구에서 약 717만 가구로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가구 수가 확대*됐으며, 제도시행일(2023년 10월) 이후 2023년 말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56가구에 주택연금을 공급했습니다.

*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해당 조치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의 유입으로 기금의 보증료 수입 및 담보가치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취약 고령층을 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가격 기준 상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대출한도 또한 기존의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향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함으로, 해당 조치로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합니다.

* 증가폭은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수혜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 16.4% 상승(281만 원 → 327만 원)

<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효과(예) >

가입연령 72세(평균 가입연령), 일반주택, 중신·정액형인 경우 (2023년 10월 기준)

주택가격	① 현행	② 변경후	주택가격	① 현행	② 변경후	
					월지급금	증가액(증가율)
시세 2억 원	655	현행과 같음	시세 9억 원	2,839	2,949	110(4% ↑)
시세 4억 원	1,311		시세 10억 원	2,839	3,276	437(15% ↑)
시세 6억 원	1,966		시세 11억 원	2,839	3,407	568(20% ↑)
시세 8억 원	2,621		시세 12억 원*	2,839	3,407	568(20% ↑)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 원까지만 인정

<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요건 확대 관련 보도내용 >

<한국경제(10.16)> 시세 17억 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시세 17억원 주택도 가입"...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된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이월 12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바뀌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주택의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 약 17억 원 정도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혜택을 한 달 만에 12억 원 이하에서 17억 원 이하로 늘었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떨어질수록 월지급금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주택연금의 가입은 전국의 모든 주택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의 연령은 60세 이상 75세 이하로 제한된다. 소득은 월 12억 원 이하로 제한되며,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 원까지만 인정된다.

가입대상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등 상품성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공급이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확보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공급건수(건) : (2018~2022년) 평균 1만 1,355건 → (2023년) 약 1만 4,885건(31.1%↑)

앞으로도 금리상승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DSR 안착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분들의 금융·주거비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2023~2027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2024년 중위소득 48%까지 확대해 145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월세 비중은 점차 높아져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간 추진한 여러 주거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48만 가구(2022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환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기준 181만 호로 OECD 평균재고율 7.0%를 상회해 8.1%에 도달했으나,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계획(2023~2027년)을 2023년 1월에 마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임대는 복잡한 유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매입임대는 신축 중심으로 도심 내 깨끗하고 넓은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전체물량의 86%를 공급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간 소형평형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면적을 확대(전용 31㎡ 이상 공급 원칙)했으며,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가구인 세탁기를 임대주택 기본 내장형 품목에 추가 했습니다. 또한, 청년 1인가구 등을 위해 청년 맞춤 주거공간·서비스 등이 결합된 청년 특화임대 등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특화임대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입주자 삶의 질 개선, 장기 공실 해소 등을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2023~2027년)을 2022년 11월에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로드맵은 개별세대나 일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단위의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세대 내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간을 개선하고, 공용공간 및 공용설비는 최신 디자인과 성능을 반영한 장비로 교체합니다.

2023년에는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유형을 6개로 대분류하고 주요 35개 항목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16만 9,000호에 대해 시설개선을 시행했으며, 방치된 공간 등을 활용해 입주자가 원하는 산책로, 공유텃밭 등 수요맞춤형 생활 SOC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면 해체 후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12월에는 중계1 시범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주거, 상업, 생활SOC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해 문화와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정부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2023년 7월에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3년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48%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40만 가구보다 5만 가구가 많은 145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하고, 생애 1회 지원 요건을 폐지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월 최대 20만 원(24회)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발굴·상담·이주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밀착 지원해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약 3,000호 증가한 1만 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주거상향 시 초기 정착을 위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예산도 확보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옥탑가구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2023년에 신설해, 비정상거처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000만 원(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을 저리로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복지시설이 복합된 고령자복지주택을 매년 1,000호 공급하는 것을 3,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2024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 LH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주거복지사를 112명 배치했으며, 2024년부터는 지방공사 영구임대 단지까지 확대 배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놓여온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장애인 주택개선 지원사업도 지원대상 지역을 2023년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및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그간 공공주택사업자별로 각기 운영 중이었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명부를 국가 단위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득·자산 등 검증기간을 축소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5년 시스템 구축, 2026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등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안정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업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하고 2023년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정부가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민·관이 협업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합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2022년 20개, 2023년 11개의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 체감성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되도록 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관이 협업한 성과로는 공공 입찰공고 및 기업 지원정보 통합조회, 기업입찰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청년 정책 추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2,000여 개 기관의 공공발주 사업과 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플랫폼에서 통합 조회하며, 청년은 2,600여 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청년정책 데이터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가구수·소득 등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의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바우처를 온라인으로도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대구광역시)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현장에서 결식우려아동이 겪는 낙인감 해소에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 업무가 디지털 전환됨에 따른 업무 효율성도 향상됐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도 각 기관이 맞춤형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환경을 제공하

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2024년 3월 말부터 녹화·녹음된 회의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AI 자동회의록’과 그림, 사진에 있는 문자를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AI 문서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은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2025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했습니다.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공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관리하는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변화를 인지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해택알리미’ 서비스는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024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분증, 고지서와 같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민간 앱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지갑 서비스도 2025년 초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이 필요한 생활형 행정정보를 카카오톡 등과 같은 민간 앱을 통해 알려주고 챗봇을 통해 24시간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국민비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알림서비스는 8종에서 67종으로, 상담서비스는 11종에서 49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그 효과로 1,644만 명의 국민이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이에 더해 복잡한 화면, 작은 글씨 등으로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앱에 대한 UI/UX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24와 코레일톡의 UI/UX를 시범 개선해(2023년 2월), 이용자분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범정부 UI/UX 혁신가이드’를 개발하고 각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UI/UX 혁신을 정부24, 복지로, 고용노동부(대표 누리집) 등 5종에 우선 적용하고(2024년 5월), 2024년 말까지 홈택스, 고용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8종의 공공 앱·웹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해 각 정부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통기반이 구축되면 기관별로 초거대 AI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적 기반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초거대 AI 활용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도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마련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2023년 4월)

*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 추진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께 큰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공공의 앱과 웹에서만 이용하던 공공서비스 8종을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의 앱과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KTX·SRT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네이버 지도, 카카오톡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창구인 정부24를 통해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신청 등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용이 가능했던 행정서비스 10종을 온라인화해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등 11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온라인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별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에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1종을 신설하고 온종일 돌봄 등 기존 4종의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총 12종 서비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24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범적으로 교육부, 복지부 등 4개 기관의 주요 서비스(Top 10)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도 발급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으로 2023년 8월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발급 건수가 235만 건을 넘어섰으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1.2만 건을 넘어서 많은 국민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3월 기준). 이에 더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협업해 2024년 3월부터는 삼성윌렛(구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이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보연계를 통해 구비서류를 없애는 ‘구비서류 제로화’도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공공서비스(1,498개)에 대해 2026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7차,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했으며, 2024년 3월까지 122개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했습니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민간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정보를 연계해 2024년 2월 19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없이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 군요금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 주도의 대민서비스 혁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데이터·서비스를 개방·연계·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최상위 플랫폼인 ‘DPG 허브’ 구축을 위해 정보화전략(ISP)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자유롭게 데이터·서비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해볼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테스트베드’와 이미 보유한 디지털자원 뿐만 아니라 새로 생성된 자원을 등록·저장·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레이크’도 구축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DPG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은 공공분야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고 민간·공공의 서비스·데이터 API를 결합·활용해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AI기반 디지털 난입케어 서비스, 대화형 위급상황 대응매뉴얼 및 스마트이송 연계 시스템, 소상공인 외식통계 조회서비스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박람회(2023년 11월) 및 성과보고회(2023년 12월)를 통해 국민께도 그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개정된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23년 9월 15일(1차)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정비,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동의방법 정비, 처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운영기관 특례 등 안전성 확보조치 정비, 국외이전 및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표명령 정비 등
2024년 3월 15일(2차)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보장 기준·절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손해배상의 보장 범위 및 기준 등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국가 마 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 등을 수립·발표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8개 분야에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과 일상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인증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디지털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4월에는 후속 실행계획인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마련해 1,515개 공공시스템을 집중관리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2023년 6월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Global Privacy Assembly) 총회 유치 등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 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2회 연속),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4 회 연속)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께 더 좋은 디 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장관 자율기구제’ 도입 및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장관의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74년 만에 청와대를 개방해 2023년 기준 484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운영해 총 60건이 정책화 과제로 선정됐으며, 그 중 22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국정환경의 복잡성·다양성·전문성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중심의 국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가치의 다원화로 인해 체계적인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 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 을 전환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 실현, 유연한 국정운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 의’ 마련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갈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및 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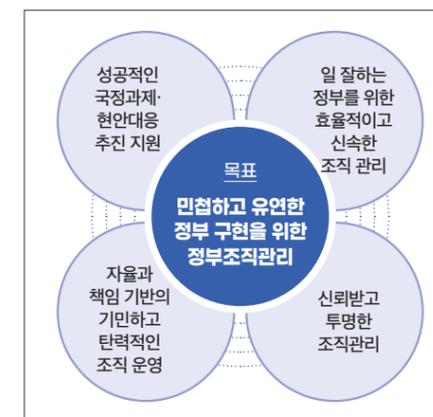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내각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해 관계 장관들과 국가 중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 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완화 규제, 국민안전 관리,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 등 총 36회 개최(2024년 4월 12일 기준)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 로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38개 부처에서 총 54개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며(2024년 4월 기준), 자율기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 장관의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권 강화, 부처별 탄력적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특례 확대 등 75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 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리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인사 운영을 적극 지원하 는 한편, 각 부처 내 각종 비상설 인사 위원회를 분야별로 통합해 인사 운영 효율 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용산시대 개막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실현’을 목표로 윤석열정부 출범일(2022년 5월 10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세종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신규 건립 전까지 세종청사의 집무 공간을 활용해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 제2집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6차례* 개최했습니다.

* 2022년 5월 26일, 9월 27일, 2023년 2월 7일, 12월 26일, 2024년 3월 6일, 4월 2일

올해 세종 제2집무실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해 세종시 중심에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 제2집무실 건축설계 등 절차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개방 후 청와대의 공간과 상징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개최해 청와대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 누적 관람객이 2024년 2월 기준 50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2023년 기준 484만 명)

향후 청와대 개방 2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 뿐 아니라 계절별로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더욱 활기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청와대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확대, 국민의 용산공원 조성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계별 부분 반환과 임시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 2020년 12월, 2022년 2월·5월·6월, 2023년 12월 기지 일부 반환, 매년 추가 부분반환 추진 중

임시개방 준비에 앞서 시범 개방 행사를 진행(2022년 6월 10일~6월 26일)해 3천 건에 이르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반환부지 중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역(22만㎡)에 전시·체험 공간, 잔디마당 등을 조성해 ‘용산어린이 정원’으로 임시개방(2023년 5월 4일)했고, 정원 북측 부지(6만㎡)에 분수정원을 조성(2023년 8월 12일), 어린이 테니스장(2023년 9월)을 추가로 조성해 현재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반환되어 운영 중이던 장교숙소 5단지에 4개동을 추가로 리모델링해 어린이, 청년 시니어 등 가족쉼터를 조성(현재, 5만㎡)해 다양한 연령층 및 관심사를 지닌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국민관심도 제고를 위해 개방행사, 물놀이 축제,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 계절별 이벤트 등 50여 개의 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했고 SNS 채널 홍보를 통해 2023년에는 약 38만 명의 국민들이 방문했고,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 개방 문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서 각각 84.7%, 82.0%로 긍정적으로 평가 됐습니다.

방문객 수	2020년 8~12월	2021년 1~12월	2022년 1~12월	2023년 1~12월
장교숙소 5단지	5,222명	66,250명	178,467명	214,636명
용산어린이정원	-	-	21,931명*	169,850명
합계	5,222명	66,250명	200,398명	384,486명

* 용산어린이정원 시범개방(2022.6.10~26)

용산어린이정원이 점점 커지는 만큼 내부 셔틀 버스의 이용 편의성과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늘려 공원 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완하고, 각 연령별 행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면, 국민 모두에게 열린 녹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행사(2023.5.4)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개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통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만 1,0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60건*이 정책화 추진 과제로 선정됐고, 이 중 22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기업 채용공고 시 경력증명서 유효 기간 연장·폐지 유도' 등 60건

**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 '에너지바우처 배달비 지급 허용 등 지원 내실화', '미용사 등 국가 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등 22건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전달해 추가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개선',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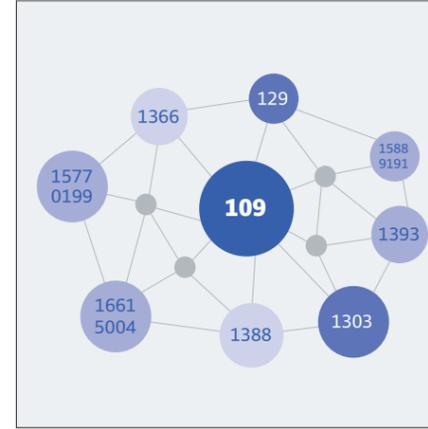
향후에도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2022년 7월 27일)한 이후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1개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상반기 8개, 하반기 5개)를 운영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2023.8.25)



자살예방상담번호 '109'로 통합(2023.10.23)



17개 지역협의회 전체회의(2023.11.30)

미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청년 젠더 공감'·'청년 정치시대'·'더 나은 청년주거'·'청년 1인가구 대응'특위를 가동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주민과의 동행'·'민생사기 근절'·'건강한 일터 만들기'·'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등의 특위를 운영하면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FGI,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 위기 극복'·'국민통합과 미디어'특위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2023년 1년간 약 800여회 회의)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후 1년간의 성과를 종합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2023년 8월 25일)를 가졌고, 17개 시·도에 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통합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국민통합 토크쇼 실시, 공감홍보 영상 배포, 다양한 국민참여 온라인 이벤트, 청년마당과 함께하는 수해복구 자원봉사, 연말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행사 등 국민소통 행사를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사회갈등의 선제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국무조정실·각 부처·갈등관리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전문가 간 적극적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 2회 개최, 전 부처 갈등관리 담당자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갈등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갈등관리 계획을 논의했으며, 갈등관리 연구기관 운영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민통합 기반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현안 또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갈등사안을 집중 관리·해결하고, 국민통합 가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입니다.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하고,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범정부 혁신으로 행정·민원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축해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기능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운영 효율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로드맵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약 13만 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현황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증원 없이 3+1 개혁(노동·연금·교육, 정부), 국민안전 확보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년 부처별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현안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2023년까지 통합활용정원 2,232명을 활용해 국정과제 및 긴급 정책현안에 1,375명을 보강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5년간(2022~2026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약 5,500명)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이외에도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매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현장·협업·행동·해결’의 4대 원칙을 중심으로 8개 중점과제, 110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협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기관 매칭, 협업지원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 해소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2023년 11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범 개발하고 2024년 4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신분증별로 성명, 날짜 등 표기방식, 유효기간이 달라 거래 상대방 등이 신분증 소지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하는 등 행정·민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협력을 통해 행정·민원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부조직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2022년 7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절감하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636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목표(30%)보다 높은 245개(39%)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 9월에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안 32개를 국회에 일괄 제출했고 2024년 3월 기준으로 32개 일괄 정비법안 중에서 15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정비 및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등 정부위원회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행정기관 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일몰제’를 신설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해 법률 및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대통령령(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로 격상하고,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실수요와 무관한 상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관사 배정, 공공요금 등 관사 개인 사용분에 예산 지출 등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관사를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투명하고 검소한 관사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급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 1
- 2
- 3
- 4
- 5
- 6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정부합동 국정과제 추진체계인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정심판 통합 찬성 78.8%, 반대 6.6%의 여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합 관련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3월 전문가 토론회, 2023년 11월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2023년 10월에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23년 말에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접수·처리가 가능한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사용기관을 2023년까지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85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정보화 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2023년에 수립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사업 예산 168억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며, 1단계 서비스는 2025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향후,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청구서 자동작성 등 기능을 탑재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방향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다양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각종 행정·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행정 분야의 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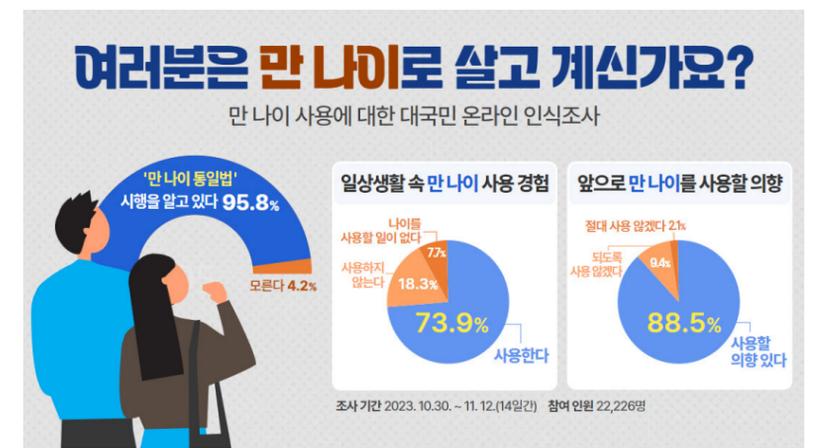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발표했고, 그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을 신속하게 마련, 2022년 5월 발의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2022년 11월에는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만 나이 통일법'은 발의 9개월 만인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됐고, 나이 기준 통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물론 '최대 두 살 더 어려진다'는 기대감으로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는 모든 부처가 협업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정책인지도(95.8%), 일상생활 '만 나이' 사용경험(73.9%), 향후 '만 나이' 사용의지(88.5%)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연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및 예비군법 시행령 등 2건의 대통령령이 개정됐습니다.

아울러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나이 확인과정에



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 및 불응 시 대응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2023년 12월 26일 발의했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1월 비영리단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 1,195개를 대상으로 법령상 등록요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3,771개(33.7%)를 정비하고,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등록요건 충족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		
		①직권말소	②자진말소	③말소 검토 등
11,195개 (100%)	7,424개 (66.3%)	1,948개 (17.4%)	861개 (7.7%)	962개 (8.6%)

아울러 2022년 10월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비대면 심사 도입, 단체 소속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회계평가 비중 및 패널티 강화, 보조금의 유사·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시스템(중앙-지방) 연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실태' 감사를 시행해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과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정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부요일·주간 지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 등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 현장·현금모금 즉석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부금품법 개정을 완료해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계부정 등과 같은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지정해 시스템을 통한 분석과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자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보조금관리시스템, 적극행정길라잡이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본래의 공익적 취

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관계 법령의 적용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한 비영리 민간단체 다수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윤석열정부는 ‘국민 중심 원팀 정부’ 구현을 위한 공직인사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민에 헌신·봉사한 공무원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복합위기 가중,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이 중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현장 중심 인사제도 혁신으로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윤석열정부는 직무 중심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공직 전문성과 개방성을 확대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정보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채용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험생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어학성적 공동활용 대상을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 가능한 어학종수도 대폭 늘려 수험생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공공기관과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공동활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인재상을 최초로 정립해 이를 채용·교육·평가 등 인사관리의 원칙으로 하는 인재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청년·수험생의 공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정책 토론회(39회)·공직박람회(40회)’를 운영해 휴전선 인근·낙도·도서벽지를 포함한 각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조직의 핵심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 속진임용제’를 도입했습니다. 공모직위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승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우수한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직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전문직위·연구직공무원 확대를 추진하고, 7년 이상 재직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등 장기재직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분야(24개 직위)를 중심으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해 협업·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중심 원팀 정부’를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재 정보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재미한 인과과학기술자협회·대한변리사회 등 12개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가인재 DB 내 인재풀을 확충했으며, 동 서비스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국 인사관리처(OPM)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항공우주국(NASA)도 방문해 최초

朝鮮日報
2023년 04월 04일 화요일
A04면 종합

**9급 출신 공무원도
20대에 5급승진 가능**

공모대상 5급 사무관까지 확대
승진 연수 안채워도 지원 가능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인사처-OPM 양해각서 서명(2023.5.18)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 운영

As governments continue to face unprecedented global and societal problems, having a depth and breadth of skills to call upon in the public service becomes more pressing. Learning and development is taking a leading role in modern governance. Korea, for instance, created a modern e-learning platform that allows employees to become micro-content creators and encourages greater learning through interac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administration is working to bring the training offered

인재개발플랫폼 OECD 보고서 수록

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외·현장·지방인재를 폭넓게 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범정부 전략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선행사업인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인재개발 플랫폼’ 정규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인재개발협회 국제 콘퍼런스&엑스포(ATD IC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인재개발 분야의 혁신적 모델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조성

정부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상적 업무 중의 적극행정에 대해 즉각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전 부처에 시행하고, 45개 지자체에도 시범운영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4년에는 전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적재·적소·적시 인사운영 지원을 통한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습니다. 1차에서는 인사특례 확대, 협의·통보 폐지 및 완화 등 47개 과제를, 2차에서는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연봉상한 폐지, 승진소요최저연수 대폭 단축 등 32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에 대한 인사규제 개선, 인사 서비스 관련 구비서류·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 3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를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인사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시행

東洋日報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A01면 종합

4급이상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 장관보다 높은 연봉 가능

우주항공-의료 등 민간인재 유치...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동원 분야에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에 힘입어 일선에서 민간인재 유치... 인재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인일보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012면 사회

장관보다 연봉 높은 4급 공무원 나온다

연간 인제형임시 연봉상한폐지 東洋日報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A10면

9급-3급 승진 연수 11년으로 단축 9급서 3급 승진 기간, 16년-11년 단축

The JoongAng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004면 종합

"일 잘하면 대통령보다 연봉 더 주는 게 대수냐"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 수립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

공모기간: 2023. 12. 5. ~ 2024. 1. 15.

공모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공모분야: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공모분야: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공모분야: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공모분야: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공모분야: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사회공헌사업 공모



인사혁신처장·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2024.2.29)

연말뉴스
'소자본 알짜기업'까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강화

송고시간 | 2023-04-18 10:00

「자본금 1억·매출 1천억 이상」도 취업 대상 사항

취업심사 강화

PETI 공직윤리시스템 |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 공개 | 주식배지신탁 | 취업 행위제한 | 선문신고 | 자료실

재산등록·공개

재산공개 통합검색

검색

공개일자: 2024-01-01 ~ 2024-04-03 | 기간: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재산공개일자	기관명	성명	등록기준일	직위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재산등록정보 통합 제공

또한, 유연하고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확립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과 공직문화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가 자기결재, 원격근무 유연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사회 인식·행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해 부처별 공직문화 수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민원대응 등 대국민 접점 분야에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재산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포함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도 강화했습니다. 한편,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공보에 게재하던 재산등록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인사·보수체계 개선 및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보상하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연공서열 평가요소를 축소하고, 동료 평가를 신설했으며, 평가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부여하는 ‘장기성과급’을 신설하고, 중요직무급 대상을 확대(정원의 15% → 21%)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과 성과 기반의 합리적 평가제도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

연말뉴스
소방청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환영"

이데일리
공무원 노조, 인사처 방문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감사"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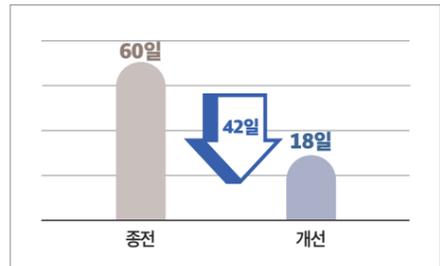
경향신문 |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011면 사회
'공무상 재해' 인과성 입증 못해도 보상

내달 '공상추정제' 본격 시행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 직종이나 직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 한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담긴 예정이다.

개선령은 또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단이

공상추정제 시행



명백한 부상 처리기간 단축

화했습니다.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를 현실화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했습니다. 직무 중 인명피해 사고로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해·위험 공무수행 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를 최초 시행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령 시행 이후 접수된 명백한 부상(1,272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평균 60일에서 18일로 단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유족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장·실무직 공무원의 자기진작과 직무몰입을 위한 처우개선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봉급·수당을 추가 인상하고, 승진 기회 확대·자기개발 기회 제공·민원공무원 우대 등이 포함된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찰·소방 봉급은 업무 특성을 반영해 공안업무 종사자에 맞게 정상화했습니다. 구조구급대원 활동비는 2024년부터 10만 원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도 약 25%p 확대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보장을 위해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2024년 병장 기준 125만 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현장 공무원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향상시켰으며, 그 효과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역량 제고

국가 주요 현안 사항, 대형 국책사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사가 필요한 영역·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운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중요성과 위험성이 높아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해 감사계획에 연계하고, 국회 논의사항·감사청구 등 외부 감사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등 감사사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고위험 중점분야 운영체계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하는 감사로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위험 중점분야 : 건전재정관리(4개), 국민안전·복지강화(6개), 미래사회 준비·경제 활성화(6개), 공직기강 확립(4개)

원활한 정책조정·관리를 위해 애로요인 등 검증을 강화하고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요 현안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주도하는 자문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국가현안에 대응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정부혁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윤석열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1조 1,000억 원 절감하며, 비핵심 자산을 14조 5,000억 원 매각·정비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715건을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했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해 42조 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등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했으며,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공개 1,178건, 기술마켓 누적구매 1,194건, 특허·실용신안 계약 547건, 시설개방 4,040개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으나,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및 기능 중첩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2022.6.17~24, 한국리서치)
< 일반국민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 전문가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이러한 인식하에 윤석열정부는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①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②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③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022.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
- ②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9.23)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자율혁신 및 업무재조정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①기능 ②조직·인력 ③예산 ④자산 ⑤복리후생의 5대 분야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2022년 10월 17일),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11일),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 26일)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으며, 2023년에는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차질없는 5대 분야 혁신계획 이행을 독려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2023년까지 총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2024년 이후에 계획된 감축분을 2023년에 조기 이행해 △302명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등 혁신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효율화 계획을 통해 2022년에는 경상경비 △7,142억 원(△10.2%), 업무추진비 △63억 원(△15.9%)를 절감했으며, 2023년에는 경상경비 △4,316억 원(△3.1%), 업무추진비 △82억 원(△10.4%)을 삭감 편성해 총 1조

< 공공기관 혁신계획 분야별 이행실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분 야	주요 이행실적
①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 (계획) 3개년간(2023~2025년) 총 정원 △12,442명 감축 → (실적)△11,374명 감축 완료
② 예산 효율화	● (계획) 2022년 경상경비 7,142억 원, 업무추진비 63억 원 절감 2023년 경상경비 4,316억 원, 업무추진비 82억 원 삭감 → (실적) 총 1조 1,000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 달성
③ 자산 효율화	● (계획) 2027년까지 부동산 매각, 지분정비 등 14조 5,000억 원 수준의 자산효율화 추진 → (실적) 2조 6,000억 원 매각·정비 완료
④ 복리후생 개선	● (계획) 2027년까지 715건 개선계획 수립 → (실적) 478건 개선

1,000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산효율화를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조 6,000억 원(409건)을 매각했으며, 2027년까지 계획된 1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이 적정가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절한 매각절차에 따라 자산효율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리후생 개선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문화여가비를 감축하고 고교학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2027년까지 715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이 중 478건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능·조직·인력, 예산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2022년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자산매각·경영 효율화 등 총 34조 1,000억 원 규모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연이어 2023년에는 기존 계획에 기관의 자구노력(8조 1,000억 원)을 더해 42조 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계획수립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23년 214.3%에서 20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3년 수립한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통해 2022~2026년 간 기존 계획 대비 2.1%p 높은 11.2%p의 부채비율 감축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에너지·주거복지 등 기관별 필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1,178건의 데이터를 우선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 등 10대 핵심기관 데이터 192건을 최우선 공개했고, 120개 기관 중심으로 국민요청 549건과 자체발굴 437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이 요청한 데이터 개방률을 2022년 41.6%에서 2023년 51.9%로 개선하는 등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 개방체계를 구축해 2023년 한 해 동안 49개 공공기관이 1,776건의 기술을 제공, 547건을 계약 완료했습니다. 또한,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소액나눔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후속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등 특허나눔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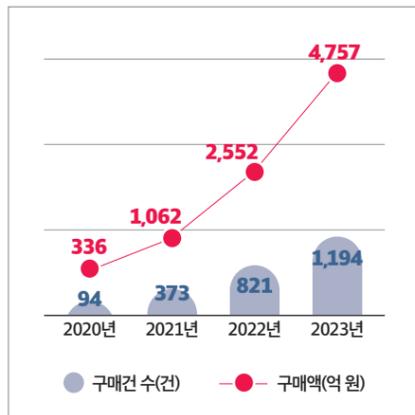
2023년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중 국민여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체육·문화 시설 등 9개 유형 시설 4,040개 및 심장제세동기 등 1,719개 장비를 신규 개방했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들의 예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직원용 예식장 4개소를 추가 개방했으며,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개방 시설 대외표지판 부착 시행 등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술마켓 오픈 이후,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기술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해 누적 구매실적 4,757억 원, 1,194건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로 분리되어 있던 분야별 기술마켓을 통합해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을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원 협의체를 구축해 기술마켓에 제품·기술을 등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제품화·해외진출 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기술마켓 컨설팅을 제공해 참여 공공기관을 60개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기술마켓 참여 협의를 통해 기술마켓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기술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마켓 구매실적>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자율·책임 역량 강화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 원·자산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2022년 130개 → 2023년 87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43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

- ① (평가) 기재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평가 실시
- ②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 ③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또한, 2023년에는 4대 과학기술원을, 2024년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생산성, 재무건전성 등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을 조정하는 등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비위행위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엄정하게 평가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2023년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2,000억 원, 기관부담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임·직원 징계규정을 정비해 2023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75개(86.2%) 기관이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규정을 도입하도록 했으며,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도입한 기관도 2022년 126개에서 2023년 321개로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과제를 검토·발굴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침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조치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 해소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전향적 노력을 통해, 윤 정부 출범 후 24개월 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규제혁신 완료과제와 규제샌드박스 신규 승인과제를 통해 향후 3년 이내 132조 원 이상의 투자 창출, 매출 증대, 부담 경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통해 핵심규제 개선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매 전략회의는 현장 중심 규제 해결이라는 원칙 하에 안건과 연관된 규제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방식, 안건, 참석자 등을 다양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약 700개 기업이 2,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평·화관법 개정을 완료해 환경분야 킬러규제를 혁파한 바 있습니다.



“경제계는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
- 대한상공회의소 논평, 언론기사 발췌(2024년 1월 10일)

투자걸림돌인 킬러 규제 혁파

국민·기업 자원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경제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킬러 규제 혁파 TF’가 발족(2023년 7월 5일)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TF는 제2차 TF 회의(2023년 7월 14일)를 통해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지규제, 토지 이용규제 등 개선이 시급한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전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도출·발표했습니다. 제3차 TF 회의(2023년 12월 28일)에서는 접경지역 입지규제, 조달규제 등 추가 효과가 필요한 킬러규제 10개 분야를 추가 선정했으며, 앞으로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킬러규제 혁파 주요내용

-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 ▲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 ▲카페·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 등(2023년 8월)
-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 EU 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0.1t → 1t) 등(2023년 8월)
-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 확대(5천 → 3만 5,000명), ▲사업장별 고용 한도 2배 확대, ▲택배업, 공항 상·하차 직종 등 고용 허용,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등(2023년 8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언론사 경제민심 조사 결과(2023년 11월 6일, 문화일보) 윤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경제정책으로 ‘킬러 규제 혁파 등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가 뽑히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관·연 합동으로 덩어리 규제 혁파(규제혁신추진단)

다수 부처와 법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는 기업 활동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처 단위의 접근으로는 혁신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해 민·관·연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이 2022년 8월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개최(출범 이후 2023년까지 총 24회)하고, 과제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총 550여 회 개최하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추진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 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4차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2023.9.5)

덩어리 규제혁신 주요내용

- 인증규제 : 257개 인증을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24개 폐지, 8개 통합, 66개 개선(2024년 2월)
-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위한 규제개선 : 700억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허용 등 (2024년 1월)
- 국제관광수지 개선 규제완화 : ▲장기의료관광 비자의 체류 연장기간 상향 조정(1 → 2년), ▲사후면세점 즉시 현금 구매한도 제약 상향 조정 등(2023년 12월)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 본격화(규제심판제도)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제도(이하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기업 등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 도입된 민간주도 규제혁신 플랫폼입니다. 정부는 규제심판제도 시행 이후 편의점 담배 광고 규제 합리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 허용 등 장기 갈등 과제 및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 도입 후 2023년까지 총 13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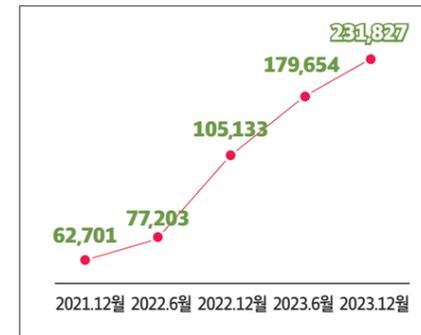
앞으로 정부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이해갈등이 첨예한 이슈,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적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심판부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 > (2023년 12월 말, 누계)

분야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2,232억 원
산업융합	1조 2,537억 원
혁신금융	6조 360억 원
규제자유특구	15조 6,496억 원
스마트도시	202억 원
합계	23조 1,827억 원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 기간별 투자유치 현황 > (단위 : 억 원, 누계)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촉진

윤석열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해,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최초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고 모빌리티,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총리 주재 현장간담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139건의 과제를 승인해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지원했으며, 그중 265건은 신속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전면 허용했습니다.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망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급증해 5년간 총 23조 1,827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승인기업의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을 통해 매출이 총 9,116억 원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승인기업에서 1만 8,289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함에 따라 2년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에 대해 법령 정비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를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1월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환과제 100건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법제처와 협력해 전환과제 중 정부 입법 사항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했는데, 2023년 3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9개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 완료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환과제 전체를 규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89건이 개선 완료됐고, 나머지 11건은 예정된 개선 일정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을 네거티브화(2023년 3월 개정 완료)해 특정 업종 이외의 모든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면세품 판매 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환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개선해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중대한 경제적 영향 등으로 모니터링이 필수인 외환거래만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법> 폐지와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사후보고 체계가 도입되면 기존의 복잡한 사전신고 의무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해소되고, 외환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규제

대국민 규제혁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규제행정에 접목할 디지털 도구를 분류하고, AI 기반 정부 규제 서비스 모델을 도출, 민간 서비스 융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23년에 수립했습니다.

2024년에는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와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정보를 쉽게 검색해 규제 미인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준수 비용 절감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스마트규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검증 ▲규제영향 분석 고도화 ▲AI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 강화 등 규제품질 제고

정부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심의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으로 종합적으로 반영, 폭넓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 규제 대상은 2022년에 비해 확대(8.7% → 13.1%)됐으며, 개선 권고 비율도 상향(76.1% → 81.3%)되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기한 도래 375건 중 109건을 폐지·개선하는 등 심사역량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2024년에는 연구용역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규제영향분석을 개선하고 품질을 제고해 부적정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 신설·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감축제(Cost-In, Cost-Out)를 운영 중입니다. 2023년 기준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766억 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했으며, 이를 통해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 대비 211%의 규제 폐지·완화 비용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선정한 킬리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정책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노동·환경 등 기업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성장 노력이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제도환경 등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에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채널이 부재해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구축을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복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 등 정책 인프라도 체계화·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23년 5월 역대 최초로 중견기업의 신사업발굴·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중견기업에 특화된 융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을 신설해 59개사 대상 8,000억 원 내외를 지원했고, 2027년까지 총 4조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초의 민관합동 중견기업 전문펀드인 ‘중견기업 혁신펀드’를 총 1,60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수출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2023년 9월 킬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지방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해 최초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총 1,139명이 우수 중견기업으로 채용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지역 중견기업의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에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과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기관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협력형 R&D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디지털 전환(DX) 확산 사업을 통해서도 중견기업 9개사의 디지털 솔루션 도입도 지원했습니다. EU CBAM 등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총 4회 ‘중견기업 ESG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법·제도 개편을 위해 그간 10년 한시법이었던 <중견기업법>을 2023년 3월 상시화해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고,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실태조사 이외에도 경기 전망조사, 중견기업 수출동향 등 국가승인통계를 신설·발표함으로써 중견기업 정책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통계 인프라 또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연합체) 등 글로벌 ESG 확산 및 강화에 대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간(2022년 12월)하고 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도 마련(2023년 12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2023년)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위한 법·제도·예산 등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디지털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 제도를 보강했습니다. 2023년 12월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2024년 8월 일몰 예정이었던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했으며 사업재편 지원 범위도 기존 과잉공급해소·신산업진출·산업위기지역대응에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까지 6가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재편 이행지원을 위해 공정거래법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상법상 인수합병 절차 등 법상 사업재편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 설치, 대기업의 협력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촉진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제도 등 지원체계도 보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93개 기업이 신규로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총 480개 기업이

37조 원의 신규투자과 2만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지역과 민간을 중심으로 사업재편 성과확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확충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적기에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1년까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 명(+a)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2022년 12월)을 시작으로 각 첨단산업별 아카데미를 구축하는 등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내대학원 허용, 기업인재개발기관 지원 등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혁신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반도체 분야 3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했고, 2024년에는 4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 총 8개 대학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인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따라, 2024년 30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우리나라 이공계 청년 2,023명을 미국대학에 파견해 양국간 첨단분야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략 추진

지난 2년간 윤석열정부는 산업대전환, 업종별 전략 등 산업혁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022년 7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2022년 10월),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2023년 5월), ‘산업대전환 민간제언’(2023년 9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신 전략 마련을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20개월만에 수출플러스·무역수지 흑자 회복 및 사상 최대 외투(327억 달러)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지원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도 4%에서 1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2023년 3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산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업 육성전략'과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7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기지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을 신속히 조성해나가기 위한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및 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2022년부터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73%에 해당하는 279조 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인허가 신속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해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애로해소가 완료·확정된 투자프로젝트는 기업의 조기 투자실행을 독려하고, 미해결 과제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기반 확충

2023년 10월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최초로 반영되어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8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지 킬리규제 효과방안을 발표(2023년 8월)했습니다. 경직적인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해 첨단·신산업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고, 토지용도 제한도 완화해 민간의 투자도 촉진했습니다. 한편, 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공포되어 7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3개소의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저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혁신 시물레이션센터, 스마트물류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역대 최대 수준인 33개의 신규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2027년까지 누적 2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2019~2023년 누적 18개소).

덧붙여,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청년 인제가 찾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산단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과 삶, 문화가 어우러진 산단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복합문화센터 30개를 올해 신규로 지원해 전국 100개소까지 늘리고, 어둡고 낡은 거리와 노후화된 공장의 외관에 대한 리뉴얼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쓰이는 정부 펀드의 규모를 올해 지난해보다 두배 늘린 1,868억 원을 투자해 이를 마중물로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전환 및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지역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정주·근로환경 개선, 첨단·신산업 입주 등을 통해 청년 인제가 유입되는 산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기업 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성장,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혁신 지원·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 제도 개선,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해왔습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 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2023년 4월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15~35% 세액공제)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분야, 미래형 이동수단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까지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주요 내용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입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 증가분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확대해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해 경기 회복기에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을 7년(5년 100%+2년 50%)에서 10년(7년 100%+3년 50%)으로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업종요건도 유연화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해외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선해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했으며, 이는 투자와 고용 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3년)	중견(3년)	대기업(2년)		중소	중견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세 번째로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1인당 세액공제액도 상시근로자 기준 최대 77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확대해 고용 촉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

출자	법인 출자 세액공제(직접 출자 : 당기분 5% + 추가분 3%) 및 개인 출자(출자액의 10%) 소득공제 적용
운용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운용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면제
회수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에 한정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의 세대간 이전 지원

윤석열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기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기업상속공제 제도 및 기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기업상속 공제한도도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업승계 후 업종변경도 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내에서 허용했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을 승계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Governance) 등을 통칭하는 ESG가 경영과 투자에 있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기준 제정, EU 공급망 실사 도입 등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2022년 12월)해 공시제도 정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개정 등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협의회를 구축해 두 차례 회의(2023년 2, 5월)를 개최해, ESG 동향과 정책과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2차 ESG 협의회(2023년 5월)에서는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 ESG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컨설팅 강화, 실사 대응 플랫폼 구축 등 정보기반 마련, 인턴십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지원,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이 담긴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ESG 평가 신뢰성·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등이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며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SG 금융 추진단’을 출범(2023년 2월)했습니다.

ESG 금융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업·투자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ESG 공시, 평가, 투자 등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ESG 우수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또는 저탄소 기술혁신 사업 등에 대해 금리 및 여신한도 우대, 보증료율 차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공급량은 2022년 4조 4,000억 원, 2023년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0억 원 증가(산은, 기은, 신보 기준)했습니다. 금융지원 외에도 개별 기업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이 관련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개정하고(2022년 12월), 금융권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2023년 12월)했으며,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3차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2023년 12월)했습니다.

정책금융을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국가 산업정책과 정책금융간 유기적 연결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정책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2022년 12월 14일)하고, 매분기 개최해 우리나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 2024년 5대 중점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 >

구분	지원 목표	2023년	2024년 (증가율)
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 원	17.6조 원 (12.8%↑)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20.3조 원	22.1조 원 (8.8%↑)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5조 원	21.4조 원 (4.0%↑)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1조 원	12.6조 원 (39.5%↑)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 원	28.7조 원 (8.9%↑)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총공급 규모를 2023년 대비 3.4%(+7조 원) 증가한 212조 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2023년 대비 11.5%(+11조 원) 증가한 102조 원+a 의 자금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2023년 12월 19일)

앞으로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우리 경제·산업 여건상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해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투자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 펀드 4호를 2023년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투자자 및 운용사를 육성해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했습니다.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24년에도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성되는 5호 펀드에는 정부재정 500억 원이 후순위로 출자되어, 민간 투자자들의 구조조정 기업 투자 위험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출범했습니다.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40년 만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주요국 중심의 세계경제 침체 우려도 높아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도 지속됐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경제의 구조적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 각종 규제, 지난 수년간 이어진 정부 재정 위주 경제운용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수년간 가계부채·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며 위기대응 여력이 소진되고 거시대응 수단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 국제유가(\$/B, WTI) : (2022년 1월) 83.0 → (2022년 2월) 91.6 → (2022년 5월) 109.3
- 2022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변화(% , IMF) : (2022년 1월) 4.4 → (2022년 4월) 3.6
-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2000년대) 80.8 → (2011~2016년) 79.1 → (2017~2021년) 58.7

중장기 정책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마련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우리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정책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공공·금융·서비스 등 3대 경제혁신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달성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고,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체질 개선'을 골자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2024년에는 경기 회복의 온기 확산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역동경제 구현' 등을 목표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30회 개최하는 등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왔습니다. 나아가 '최근 경제동향'을 발간해 경제상황을 진단·공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시스템 구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 압력 가중 및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 기조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고조,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당초 차관급 회의였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로 격상하고, 대내외 리스크 및 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대내외 시장이벤트 발생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발생 직후 '50조 원+a 규모' 유동성 공급대책을 비롯한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마련해 단기자금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SVB, CS 등 글로벌 은행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도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영향을 즉시 점검하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시장안정 메시지를 발표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 등 추가대응함으로써 시장심리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미국 FOMC 등에도 신속히 시장안정 메시지를 발신하고, 시장상황과 제도를 점검·보완해 불안을 조기에 진화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금융 이벤트 발생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과거 경제·금융위기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들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를 제고하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세계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와 글로벌 IB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내외 긍정평가 속 코스피 52주 신고가(2024년 3월 26일), 외국인 순매수 월기준 최대치(2024년 2월)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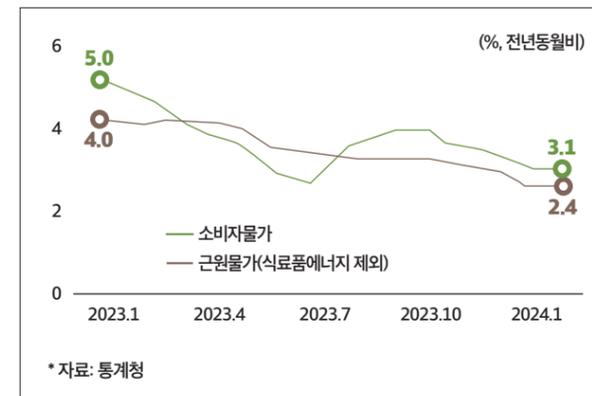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

윤석열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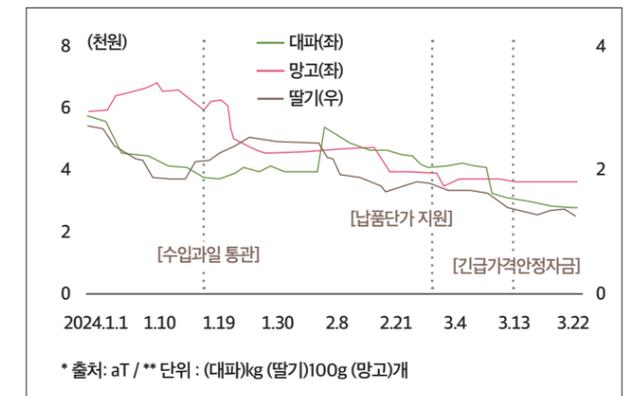
2023년 들어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자들의 원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옥수수, 설탕·원당, 변성전분, LPG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 관세를 지속 지원 중이며, 2023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에 대응해 신선과일·가공품 등 과일류 29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과일 공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및 할인 지원 등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투입도 신속히 결정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경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민부담, 공기업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료를 감면하는 등 부담 경감을 추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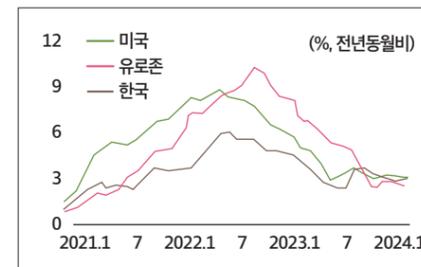
<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 주요 농산물 가격변화 >



< 2023년도 주요국 물가상승률 >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Economist지에서는 낮은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 등을 근거로 주요 10개국 중 한국(9위), 일본(10위)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정도를 최하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정부는 글로벌 통화 긴축 및 강달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SVB·CS 사태, 중국 부동산 침체 등 리스크 요인에 적시 대응해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의 연례협의 및 수차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 공급망 차질 등 한국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구조개혁 노력 등도 적극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신평사는 지난해 등급발표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대외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S&P는 8월 진행된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정책 대응방향에 동의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정책대응 조합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Fitch는 9월에 진행된 면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상황인식과 정책대응에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평사 Fitch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을 'AA-·안정적'으로 발표(2024년 3월 6일)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경쟁, 중동사태 등 다양한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대외경제 현안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외경제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 13차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대외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시에 수립하고 조율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차례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개편 방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추진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또, 불안정한 대외여건 속 아시아 역내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사업인 KSP, EIPP를 수행해 인니의 수도이전 파트너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10대 분야 후속조치 합의, UAE와 300억 달러 투자약속체결, 12년 만의 한일 정상간 서틀외교 복원 등 대외 불확실성하에서 주요 국가와의 정상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공급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과정 중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대응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차 가이드에 우리 완성차·배터리 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세계 76개국 42억 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해로, 그 결과에 따라 대외 전략이 바뀌는 만큼 어느때보다 불확실한 대외 정치·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철저한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 관리·순방성과의 국내경제 확산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평사별 현행 신용등급·전망 >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중 첨단기술 경쟁, 러·우 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양자 통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고, 주력 품목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도 개편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아태 지역 내의 통상 규범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굳건한 공급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입니다.

한편 미국은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및 장비의 對中 수출을 금지하는 등 수출통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0월, 첨단컴퓨팅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및 관련 장비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 '한미 SCCD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 2023년 10월 13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함으로써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반도체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대폭 완화했으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5%를 차지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을 통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미지역 투자자 라운드테이블(2022.9.22)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新)통상질서 주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등을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 계기 양측 통상장관 간 협상 개시 선언 후 공식 협상을 진행하며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협상을 실질 타결하고 국내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에 가입서를 기탁했습니다. DEPA 최초 가입국인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아세안, 대양주, 중남미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IPEF 디지털 분과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 90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같은 기후 관련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우리 우려를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게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 대응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두 차례 발표했으며,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 탄소무역장벽 대응반 등을 바탕으로 한·유럽연합 공동 기업설명회, 권역별 순회 정부합동 설명회,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우리 수출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대응 협력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유사 입장국과 지속 공조할 계획입니다.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및 무역 애로 해소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적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신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최된 이번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보존 및 강화, 글로벌 공급망 등을 강조한 아부다비 각료선언과

분쟁해결제도 개혁, 최빈개도국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을 포함한 작업계획 등 9개의 부속 각료결정 및 각료선언이 성과로 도출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직후부터 제13차 각료회의의 성과도출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10월 개최된 WTO 고위급회의 계기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 계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WTO 사무총장 간 양자 면담을 통해 개도국의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WTO 수산펀드에 미화 1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공식 발표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정부는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제 교역체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WTO 내 주요 정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무역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반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 시장접근위원회, 무역과 환경위원회 등

윤석열정부는 ASEAN, APEC, G20, OECD 등 지역경제협력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통상환경 속에서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미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정부는 ▲무탄소에너지연합 아웃리치 본격화 ▲對韓 투자유치(1조 5,000억 원(11억 6,000달러)) ▲한미 첨단산업·기술 협력 ▲주요국과 공급망 협력기반 논의 ▲IPEF협정 필라2 서명과 필라3·4 타결 등 실질 성과를 이룬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인태 통상 중추국(P.I.P.E) 전략으로 개도국·선진국 가교역할 강화

윤석열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인도태평양지역 역내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14개국에 의해 출범한 新경제통상협력체인 IPEF는 2023년에 4개의 필라 중 3개를 타결하는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우리도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자원안보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유망한 무탄소에너지원인 청정수소 생태계 육성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LNG, 유연탄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분야의 탈탄소도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무탄소에너지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함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해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실현가능성,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 등 원별로도 균형있게 보급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탄소에너지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조화롭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절차 운영을 통해 조속히 건설을 재개해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6월 12일 부지공사에 착수했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23년 1월 13일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원전은 32.4%,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확대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에너지분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4.4% 감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기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여나가기 위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필라2 공급망 협정의 경우, 우리는 14국가 중 6번째로 비준서 기탁을 완료해 2024년 4월 17일 국내 발효됐습니다. 공급망 협정의 발효로 공급망의 안정성 및 회복력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는 필라3 청정경제 협정 및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의 성공적인 타결에도 적극 기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역내 청정경제 투자 확대 및 신규 사업 기회 창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기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2월 발효되어 올해 이행 3년 차에 접어든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에서는 총 다섯 차례의 공동위원회와 여섯 차례의 분과위원회, 두 차례의 장관회의 등 총 열세 차례의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RCEP 임시사무국 설치, 역내 경제기술협력, 가입 절차 등의 현안을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속한 합의 및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과 영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CPTPP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가입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대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원국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CPTPP 가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20개 수출 주력품목, 9개 타겟시장 선점을 통해 수출 5대 강국 도약

윤석열정부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했고, 윈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2022년도에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6,836억 달러)을 달성했고, 2023년에도 역대 3위(6,322억 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우상향 기조를 공고히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트렌드별 기회 요인과 원전, 방산 등 수주 분야의 전략성을 고려해 최대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20대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들 주력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타겟 시장을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중동·중남미·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통제, 환경규제 등에 대응한 경제안보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이후에도 국민·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영하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2024년 1월 국회 통과)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도 2024년 3월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튬, 코발트, 흑연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2023년 80%대에서 2030년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 비중을 2023년 2%대에서 2030년 20%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뿐만 아니라,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자원의 공급망을 비축,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의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안정화하고, 비상시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계 지원확대, 중장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원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의 자원외교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자원공급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2022년 11월 3일 발표해,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재설정하고,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경쟁을 통해 풍력 발전 비용 절감을 유도하면서 공급망·주민수용성 등도 강화해 나가는 풍력 입찰시장 제도를 2022년 9월에 도입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편해 발전설비 인접지역 중심의 이익공유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등 각종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정비해 질서 있고 비용효율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보급이 국내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해 핵심 유망품목에 대한 산업생태계 육성 및 공급망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기술 기업현장



수소산업 업계 간담회(2023.7.26)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탄소중립 등 직면한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구조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진단하에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강화(30원 → 최대 100원/kWh)했으며,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효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효율 설비 교체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대폭 확대를 통해 2023년 여름에는 전년 대비 약 50GWh의 전력과 83억 7,000만 원의 요금을 절감해, 역대 최고의 전력수요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국민의 에너지부담도 낮췄습니다.

또한 유망한 무탄소에너지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하고, 수소 생산·유통·활용의 전 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유통 측면에서는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확대하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도 2023년 말 누적 기준 수소상용차 620대, 수소액화충전소 8개소를 보급해 수소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정수소 생태계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최초의 ‘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투자확대, 시장개척,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활용 및 저장에 관한 법률 제정(2024년 1월 국회 통과)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규모 실증을 위한 에타 사업 추진, 해외 CCS를 위한 G2G 협력 강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여름철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여름철 전력피크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발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구몰입 환경조성,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를 위한 표준연계 지원과 함께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을 통해 기술혁신 지원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그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기반으로 요소기술 획득에 치중해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정부 R&D 투자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으로 확대됐으나 투자 규모에 비해 파급력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R&D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R&D 다운 R&D로 투자를 재조정하는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해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 등 도전·혁신형 R&D 집중 투자,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한 R&D 체계로 전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개편, 사람을 키우는 R&D 지원 등을 통해 목표지향·성과창출형 R&D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목표지향형·미래 선도형 산업기술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목표지향·성과창출형 프로젝트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성 있는 R&D 투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기술격차 확대, 신성장시장 선점, 신비즈니스 창출 등 3가지 유형으로 초격차 경쟁력 확보, 산업대전환 선도,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핵심분야별 미션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 집중 투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및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연구원(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분야별 분과위원회, 민간전문가 검토, 투자적합도 검증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4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 11대 핵심투자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첨단제조, 지능형로봇, 차세대원자력,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전설비 적기 건설·관리, 원전 최대가동 등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없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무탄소전원 확대에 적기 대응하고, 적재적소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전력계통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이행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12월에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수립해 전력망 인프라 건설·구성·운영 등 전력계통 전반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제정됐습니다.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지역 생산 전력의 직접거래 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새로운 전력 신산업 확산,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법 제정 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관계기관 등의 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올해 6월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적기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와 관련한 고시를 2022년 9월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전원별 특성에 따라 수소발전입찰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계약시장 등 별도의 계약시장을 수소, 재생에너지 등 고비용 저탄소 전원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연료비 등 누적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요금인상에 따른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부담경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습니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가스·열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경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량 요금 인상분을 3년간 분할인상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가스요금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배출은 줄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격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을 위해 장·단기 마일스톤을 설정한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함께 실증, 인프라, 표준, 인력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로젝트별 팀, 분야별 민간전문관리자 그룹을 구성해 프로젝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파급력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를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선도형 프로젝트로서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22~2031년, 4,142억 원)를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배양육, 노화역전, 신소재 플라스틱 등 영화나 소설에서만 보던 기술들이 현대판 연금술사를 통해 우리 앞에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 2년 만에 가시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사업에 목마른 우리 기업들은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간투자(총 106억 원), 멤버십* 가입(16개 기업), 창업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 멤버십 기업 : 직접 연구개발(R&D)에 참여하지 않으나, 멤버십 회비를 납부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공유해 향후 연구개발(R&D) 성과활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

앞으로도 정부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혁신형 R&D를 확대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초고난도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는 ‘현대판 연금술사’가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기업과 시장을 통해 사업화될 때 신산업 육성,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산업적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연구실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범부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정책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8차(2023~2025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발표(2022년 12월)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20여 년 만에 기술이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설립시 보유기술 요건 폐지 등 설립·운영 규제 개선방안 등을 담은 기술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2023년 12월 기준 총 3,810억 원의 CVC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사

업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 대기업·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 499건을 중소·중견기업 338개사에 무상나눔했습니다.

나아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보유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휴·겸직을 허용하고 자금, 인력, 기술, 시설 등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평가기관, 창업보육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연구개발 수행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 관련 포괄적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자율성트랙’ 제도를 2020년 9월에 도입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2021년 전체 신규과제 중 5% 미만의 과제만이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지원조건을 대폭 하향해 2025년 말까지는 전체 대상 과제의 20% 수준까지 자율성트랙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초래하던 최소인건비계상률, 연구수당 최소비중 및 인건비·연구수당의 일괄흡수 기준 등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는 신시장 창출·초격차 등 혁신적 산업기술의 선별·육성·보호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미국·유럽 등 선도국과 실질적인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미국과 전략적인 동맹을 견고화하고, 산업 공급망 확보 및 첨단기술개발에 있어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신설해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첨단산업 분야의 중요 기술동맹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양자 공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탄소 감축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및 그 후속 조치인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 등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산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가중되면서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탄소 감축으로 그린 전환을 달성하는 것이 제조업 경쟁력 혁신의 새로운 원천이 됐습니다. 한편 미래차 등 모빌리티 산업이 확장되면서 주력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의 많은 변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중심의 산업혁신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등의 정책을 펼쳐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도화·고부가가치를 위한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주력산업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최근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공유경제,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글로벌 경제·산업·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산업 경쟁 환경에서 단순 생산성 증대, 품질 개선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분야가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마련했습니다. 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2년 6월에 우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속도를 한 층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에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공급산업 육성, 수요기업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산업 육성으로는 기업들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벤치마킹 사례 미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5개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후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결성된 민

동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에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동 R&D 추진으로 초격차 급소기술 및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우리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행 지식재산권과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분야 중심의 전략적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3D 폐조직 및 미세환경 플랫폼 개발’ 등 국내 우수 연구과제 35건을 발굴해 연구자가 자기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정보조사·분석, 국제표준 아이템 발굴, 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미래차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표준화 전략 수립과 표준개발을 위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포럼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기의 광학 특성, 수소선박의 핵심부품인 액화 수소용 밸브 등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담은 82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세계 8위 표준강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산업기술과 연구개발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최근 해외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 공격, 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과 국내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상반기,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특허 공격·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단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과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특허청을 7번째 국가방첩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중심의 R&D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 등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 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 협의체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해 2개 분야(AI 융합, AI 생태계), 3개 분과(Mobility AI, Machinery AI, Optimization AI)로 구성된 '산업 AI 얼라이언스'를 결성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약 500여 개의 구성원 간 협업을 통해 2023년에 106개의 산업 디지털 전환 융합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4개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 규모 확대 및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요기업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695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있고 산업-AI 융합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제조공정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고 공급기업은 자사의 솔루션을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장 비전과 투자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全社)적인 디지털 혁신을 지원합니다. 셋째, 업종별 대·중견·중소기업 간 디지털 기반의 연계·협력을 통해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제조 밸류체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AI 융합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등을 신설·운영해 연간 500명 이상의 디지털 전환 변화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발하고 산업-AI 융합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 DX(Digital Transformation) 생태계 조성으로는 2023년 1월,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외 이전 관련 신설 규정을 반영하고 사례를 확대하는 등 개정·보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가깝고 편하게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4개소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세제, 용자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감경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정책, 규제 개선과제 등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

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저탄소·고부가 철강생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저탄소 전환 전략을 지속 보완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업종의 탄소 저감 핵심 기술 확보에 9,352억 원(국비 6,947억 원)을 투자하는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2023년 본격 착수하고 업종 전체에서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탄소중립 그랜드 컨소시엄'을 2023년 7월 발족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을 통해 2년간 4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2,591억 원 규모의 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로써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업계와 협업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철강 가열공정 대체기술 등 13개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생산공정 단계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해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누적 기준 782개 사업장에 클린팩토리 구축을 완료해 당초 목표인 750개 대비 초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존 최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축된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 10개의 사업장에 대해 117억 원의 설비 구축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위해 산업계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술개발, 세제, 용자, 보조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본격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2023년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수출액은 21.3% 증가한 93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 생산도 13% 증가한 424만 대로 2018년(403만 대)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 대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과와 더불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수출도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는 등 질적 혁신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글로벌 탄소 저감 정책 강화, 미래차 전환,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과 동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3년 5월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미래차 부품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미래차 투자

지원을 위해 약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미래차와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23년 7월 광주와 대구를 미래차 특화단지 지정했으며, 기업 집적화와 공급망 자립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성차 기업의 미래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023년 6월 전기·수소차 제조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투자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부응해 완성차 기업은 2023년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화성 공장을 시작으로 울산, 광명 등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래차 산업과 부품기업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미래차 생태계 확산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및 모빌리티 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며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과 산업의 체질 전환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024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인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도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으로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할 핵심 산업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16기의 반도체 제조공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클러스터 가동의 필수 기반인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이는 등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적기에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부·장·팹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에 반도체 동맹과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팹리스 기업 육성을 위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했고, 팹리스 기업 스케일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24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약 9,000억 원 규모로 용인 일반산업 내 실증 테스트베드(미니fab)를 조기 구축하고, ASML-삼성전자간 EUV R&D 센터 투자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요-설계 기업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일본·네덜란드와 공급망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ASML-IMEC 연계 인력교류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2023.12.12)

오늘날 디스플레이는 TV부터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으며, 형상도 기존의 평면에서 자유롭게 휘어지고, 접히고, 말 수도 있는 형태로 진화하는 등 첨단산업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차, 스마트홈, 메타버스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2월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나아가, 심화되는 경쟁국의 기술 추격 속에서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해 2023년 5월 민·관 합동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증착기 등 주요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2024년 2월)하는 등 디스플레이산업 초격차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차전지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개별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 배터리 및 소·부·장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차전지와 양극재 기업의 매출액은 89조 3,000억 원, 수출액은 224억 8,000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2024년에만 9조 원 이상의 국내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미국의 IRA, 유럽의 배터리규제 등 주요국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7월에는 4개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해 국내 공급망 자립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족한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제안해주신 업계안을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집적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속히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2개소, 이차전지 4개소, 디스플레이 1개소 등 7개 지역이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화단지에는 입지,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 처리, 세제혜택, 첨단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 인센티브 확대, 특화단지간 연계 강화, 개별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2024년 3월 27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구성된 특화단지 범정부 협의체 및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건의 사항을 해결하고 육성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재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해, 향후 10년 간 15만 명 반도체 인력양성을 목표로 R&D 기반 고급인력 및 기업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지정했고, 민관공동투자 고급인력양성 사업을 개시해 산업계 수요기반 47개의 R&D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기술과 고급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4월에는 20여 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계 주도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가 본격적으로 교육을 개시했고, 반도체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8곳을 지정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해, 취준생·재직자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8개교, 특성화대학 13개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역량 제고

첨단로봇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혁신을 촉진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첨단로봇 전략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2023년 12월)’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첨단로봇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담은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서는 첨단로봇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8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I·SW 등 핵심인력 1만 5,000명 양성 및 로봇전문 기업 150개를 육성합니다. 또한 K-Robot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국제R&D지원 및 국내시장 창출을 위한 2030년까지 제조·서비스 로봇의 100만 대 보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로봇 관련 규제혁신, 로봇보험 신설, 로봇확산 문화 등을 조성하고, 실·가상환경의 로봇 서비스품질, 내구성, 안전성 등 실증을 지원하는 인프라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해 2027년부터 시범 개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51개 과제 발표(2023년 3월)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보도통행을 포함 총 20개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2024년에도 순찰로봇 경찰장비 도입 조기 추진 등을 포함한 20개 단기과제를 추가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를 확인해 규제환경 등을 지속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가전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역량

0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시작으로 분야별 후속 전략을 통해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와 디지털헬스 연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세계 최초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로 우리 규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감염병 대유행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시 의료제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이 2~3%로 예측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분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 건강과도 밀접한 바이오헬스 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달성

윤석열정부는 수출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2023년 2월 28일 발표했고, 그 후속 대책으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차례로 마련하며, 이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취약해 첨단 기술의 도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립화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도심형 공장으로 조성해 중소·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전자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VR(가상 현실), AR(증강현실) 및 XR(확장현실) 시대가 열리면서 가상·증강·확장현실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상·증강·확장현실 시장은 과거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휴대폰 산업이 재편된 것과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 실증기반 구축,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신산업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의 수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2023년 3월)을 발표했으며, 업계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바이오업계 실무경제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특히,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통해 향후 연 10%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경제에 대한 5가지 종합 추진방향을 발표(2023년 7월)했습니다. 바이오경제 2.0 추진 과제 중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제조 혁신 전략을 마련(2024년 4월)했습니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추진,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 2030년까지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헬스 기업 간담회 개최(2024년 1월),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2022년 11월)했으며, 체계적인 R&D 지원을 위해 산업부·과기부 공동으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주요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023년 6월)하고, 수소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을 보강하는 등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3년 수소전문기업을 새롭게 31개사를 지정했으며, 업계와 협력해 누적 148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첨단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2023.2.28)

아울러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현장과 제도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규제 영향이 큰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2024년 3월 기준, 3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16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나아가 산업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11만 명 육성을 위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2023년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인재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전략'을 2023년 12월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2023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또한, 5,000억 원 규모의 'K- 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혁신 신약 개발사세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보건안전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미래 보건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건강 보호, 보건안보 확립,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보건의료 R&D 중장기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2023년 4월 발표했고, 질병예방·관리의 국가 주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제2차 질병관리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 기술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7,884억 원으로 13% 확대했습니다. 특히,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중심형 R&D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3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사업'을 시작하며,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확충 등 5개 핵심 임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선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안보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감염병 R&D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AI 기반 항원 설계 및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을 담당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2023년 9월 설립했습니다.

중·저소득국이 백신 생산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2022년 지정된 이후, 중·저소득국(국내 포함) 대상 연간 550명 이상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통해 교육 기반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 세계 백신 생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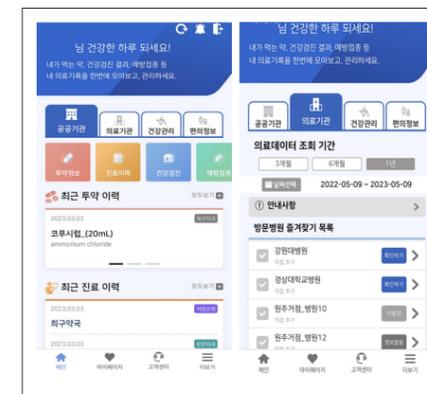
2022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주도로 전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미래 팬데믹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처음 개최했습니다. 2023년 11월 제2회 서밋까지 2년간 총 32건의 고위급 회담, 2건의 MOU 제·개정 성과를 이뤄내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백신의 품질 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전담기관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양성 교육시설을 신축했으며, 2024년부터 연간 300여 명의 글로벌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BL3)을 포함한 특수시험검정동을 2023년 7월 준공했으며, 국산 백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의 처리기간을 약 25% 단축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변중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기반 구축,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임상 진입 등을 끊임없이 지원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신성장 산업이자 건강수명 연장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공공기관, 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2023년 9월 본격 가동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및 전국 860개 의료기관의 진료 데이터를 대국민 서비스인 '나의건강기록 앱'(누적 가입자 18만 9,263명)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환자 안전 환경조성'을 주제로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3가지 선도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나의 의료데이터를

< 나의 건강기록 앱 >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ICT를 활용해 지역 필수 의료체계에 견고한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모델도 개발, 확산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실현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환자 진료와 디지털헬스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2만 5,000명분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개방했고, 2024년부터 100만 명 목표분 임상·유전체·공공·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통합·구축해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개방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또한 4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을 통해 병원 간 용어 및 서식 표준화를 확대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AI 기업 등과 9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데이터 활용 협업 강화로 임상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등의 임상·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을 추진해, 198만 명 규모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2023년 6월부터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포털을 통해 개방했습니다. 나아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해 국민건강 증진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데이터·인공지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강화로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전처리 수고를 덜어주는 스마트 큐레이션, 병리·중환자 등 의료 AI 분야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 메타버스 등 데이터·AI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가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제공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 실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윤석열정부는 국내 신기술을 적용한 의료제품이 신속히 제품화되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1:1 맞춤형 상담, 임상시험 설계지원 및 신속심사까지 집중 지원해, 생명 위협 및 중대·희귀 질환 치료제(11품목),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2품목), 의료기기(7품목)가 상용화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한국로슈의 ‘문수미오주’(소포성 림프종 치료제)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을 받아 허가(2023년 11월)된 최초 품목이며, 심사 기간을 70% 수준으로 대폭 단축(115일 → 80일)해 희귀 질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023년 10월 WHO는 세계 최초로 식약처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 WHO Listed Authorities)에 등재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약품·백신 분야의 규제 시스템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산 의약품을 필리핀에 수출할 때 법정허가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120~180일 → 30~45일)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우수한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평가) 로제리오 가스파 WHO 규제 및 사전심사 국장 주요발언(2023년 11월)
- “한국 식약처는 WLA 등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표준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

또한, 2023년 강화된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계기로 미국 FDA와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 분야에서 MOC를 체결(2023년 4월)하고, 한·미 공동으로 20개국의 주요 규제기관 및 업계·학계 전문가와 AI를 활용한 의료제품의 규제 방향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AIRIS)을 한국에서 개최(2024년 2월)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등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의약품규제과학혁신법>(2023년 8월)을 마련했고,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의료기기와 다른, 디지털 의료제품에 특화된 안전 관리와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2024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해 디지털헬스 분야의 규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AIRIS 2024)

혁신을 지속하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윤석열정부는 의약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의약품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제조소 위험도 평가 주기를 강화(연 1회 → 반기 1회) 하고, 위험도 상위 제조소에 대한 무통보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조에서 사용까지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 GMP를 도입(2023년 9월)해 고품질의 의약외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도 환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했습니다. 그간 의약품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보상금을 의약품 부작용 외에 기저질환·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폭넓게 지급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빈틈없이 공고히 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수급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의약품 공급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산·공급 중단보고 대상을 관리하는 등 공중보건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의약품 중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성분(17개)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단계적 비축하는 계획을 마련(2023년 4월)해,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원료의약품 3개 성분에 대한 비축을 우선 완료했습니다. 향후 생산·개발 현황을 고려한 비축 성분 확대로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수약품 자급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윤석열정부는 서비스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등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21년, US\$)

(제조업) 138,272 (서비스업) 65,657 → (서비스업/제조업 비율) 47.5 * OECD 36개국 중 35위

이에 윤석열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최근 서비스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으로 인해 서비스 업종 간 융·복합이 일어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등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고도화하고 입법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 TF’를 2022년 12월 출범했습니다. 동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이 함께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 정책지원 등 핵심과제를 발굴·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동 TF는 2023년 6월에 제1차 TF를 개최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 방안’,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비롯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제2차 TF를 개최해,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웹콘텐츠 창작, 워딩·뷰티 분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은 대



“환자나 가족이 약과 부작용의 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주시 정말 감사했습니다.”

-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024년 1월, 세계일보)

책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보좌역과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등 실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에도 '서비스산업발전 TF'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혁신 관련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업 특화제도 도입

유망 서비스 업종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두 차례 세법 개정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 후 7년간 부담금 면제 대상을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지식서비스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같은 달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제도적 차별을 완화했습니다.

유망 서비스 업종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1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래 및 산후조리)'을 마련해, 상조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 산후조리원 내 의사 방문진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장례·산후조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정부출범 이전인 2021년 대비 2년간 1.3%p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추이(단위 : %)

(2019년) 62.5 → (2020년) → (2021년) 62.5 → (2022년) 63.5 → (2023년) 63.8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이 업종간 융합, 신유형서비스 등장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정책적 지원 확대 및 분야별 특화 제도 도입,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윤석열정부는 유망 서비스 각 분야별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예산·세계상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2022년 7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지정제 도입 등 바이오 헬스 분야 주요 정책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 및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 다방면으로 정책 대안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2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

기업규모	기본공제(기존 → 개정)	신설 추가공제*	최대공제율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10%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 제작비용 국내 지출 비중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 제공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피해회복, 경쟁력 강화, 방한·의료관광 활성화 등 체계적 정책 마련으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을 도모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2027년까지 관광산업 내 투자 촉진을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조성하기로 발표했으며,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재도약을 위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해 사후면세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하고, 3조 원 규모 재원을 투입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예시 >

과제	주요 내용	협업 부처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 (현황)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신고 필요 · (개선) 유통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자단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판매할 경우 신고 면제 ⇒ (기대효과) 영업신고비용 약 1.7억 원 절감,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창출	식약처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 (현황) 방송광고의 종류를 7가지로 제한하고 他유형 광고 불허 · (개선)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 내·외 광고, 기타 광고로 간소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 (예 : 디지털TV 채널변경시 발생하는 지연시간에 노출되는 채널변경광고) ⇒ (기대효과) 방송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지원 및 광고업계 시장영역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에 대한 기업의 반응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전망에 대형마트·화장품·식품기업 등 사업 확대 본격화 계획"

그밖에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콘텐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확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스포츠테크, 엔터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수출유망 기업(2022-2023년 90개사)을 선정해 타겟시장 선정, 사전조사 실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북미, 중국, 동남아, 유럽, 중동 등 해외 유망시장 내 서비스분야 거점 무역관 28개소를 지정(2023년)해 현지 바이어 및 협력수요 발굴, 1:1 매칭 등 국내 서비스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서비스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①민관 합동 서비스 수출 활성화 작업반을 지속 운영하고, ②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28 → 30개소)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윤석열정부는 첨단로봇과 디지털기술 융합 혁신을 통한 제조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수증 청소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서비스와 같은 제조업의 신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조공정, 제품개발 등 제조업의 전 주기 혁신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K-디자인 혁신방안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을 마련했으며, 다른 산업과 협업, 인프라 확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규제혁신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이며, 산업·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제조업 전 주기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을 위해 새로운 미디어 법체계 마련과 방송 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산업육성·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방송 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 방송사업자 기술지원과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급변하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환경에서 기존 법체계·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및 미디어 발전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디어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며 OTT 플랫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개별 미디어·콘텐츠산업 정책을 모아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2023년 4월 17일)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 법제·산업 분과회의,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2024년 3월 13일)했습니다. 정책 방안에는 미디어·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및 미디어산업 규제혁신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수립된 과제들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현행 방송법·IPTV법 등의 미디어 규제체계를 정비해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법제도의 개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제안의 내용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청자 권익을 제고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장기적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7일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평가 강화를 위해 ESG 경영계획을 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매체별(DTV, UHDTV, 라디오, DMB) 심사 통합 및 종이 없는 심사제를 도입해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수립·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31일에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으며,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전 재허가 대비 조건이 57개에서 40개로 30% 감소했고, 권고사항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2022년 9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TV조선 및 MBN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고, 2024년 3월에는 채널A 및 YTN, 연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재승인 심사를 통해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조건 등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 허가 조건 완화 및 이행점검 방식 개선안'을 발표(2023년 2월 23일)하고, 2023년 14개 유료방송사의 재허가를 심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허가 조건을 14~20개에서 7~8개로 줄이고, 매년 시행하던 이행점검을 3년 주기 누적 점검으로 바꾸는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방송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및 채널운영 규제 폐지,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오락프로그램·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순수외주 제작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개정안(2023년 12월)을 마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을 통해 2023년 방송광고시장에 약 120억 원의 추가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OTT 포럼'을 2022년부터 매년 개최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OTT



2023 글로벌 OTT 포럼



OTT 시장조사

OTT 이용행태 조사

기업의 성공전략을 공유하고 매년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OTT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OTT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다양한 협업 등 우리나라 OTT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해외 OTT 이용행태 및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해외 주요 국가별 OTT 산업동향과 이용자들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사로, 각 국가별로 OTT 이용행태 및 인기 콘텐츠 내용을 분석해 국내 OTT의 아시아, 유럽, 남미, UAE 등 해외 시장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주요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OTT에 특화된 해외진출 지원예산을 신규 확보(2023년 7억 5,000만 원)하고 본격 추진했습니다. 글로벌 OTT 어워드 등 'OTT 특화 국제행사(제1회 국제 OTT 페스티벌, 10.7-8, 부산)' 개최를 통해 국내 OTT·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국제 OTT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우수한 OTT 플랫폼, 콘텐츠, 배우 등 대상 총 17개 부문, 24점 시상, K-OTT 플랫폼·콘텐츠가 주요상을 석권했으며, 국내·외 우수 OTT사들의 주요 사업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OTT·투자사·통신사들 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쇼케이스도 개최했습니다.

국내 OTT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북미 최대 콘텐츠 마켓(AFM) 내 K-OTT 홍보관을 운영해, 국내 OTT 및 콘텐츠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동시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인한 국내 OTT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내 OTT·ISP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대응으로 누누티비에서 국내 OTT사 오리지널 콘텐츠 삭제(3월 24일) 및 서비스 종료(4월 14일)를 공지했으며,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범부처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협의회'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동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방송·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ICT 신기술을 접목해 콘텐츠 제작·유통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가상융합 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과 제작환경 개선 실증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고려거란전쟁'은 3D 스캔, XR, 디지털 군중, In-Camera VFX 기술을 활용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방송·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방송사·OTT사와 제작사가 협업한 방송·OTT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유괴의 날>은 국내외 투자유치 194억 원을 달성했으며, '타로'는 2024 칸 시리즈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의 단계별 역량강화 및 글로벌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해



'고려거란전쟁' 버추얼프로덕션 촬영



디지털 미디어 투자 MOU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CRE-UP)을 신설하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정부-IBK-IPTV3사-RAPA·KCA, 2023년 6월)해 투자 유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수요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 등의 미디어 주도형 융합서비스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했습니다. 이 중 주스社는 음악 편곡 서비스인 Re:La(리라)를 베타 오픈해 약 2,500명의 사용자와 1만 8,000곡을 편곡하며 사업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학습된 데이터로 자동편집하는 기술을 고도화 했으며, 디바이스별 화면비 전환 및 클라우드 기반 화질 변환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실사 기반 객체 미디어를 생성하며 기술을 고도화했고, 관련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1인미디어 센터를 통한 지역 창작자 육성(2023년 166팀), 크리에이터미디어 대전 개최(2023년 8월, 인천),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2023년 45팀), 신직업군 육성(2023년 15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생태계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범조사로 실시한 '1인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 통계(통계명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승인번호 : 127020호)로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산업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미디어 테크 오픈랩'을 출범해 R&D 수행기관과 미디어 플랫폼(방송사, OTT)이 모여 기술개발 진행상황과 성과를 교류(2023년 총 5회)하고, 개발 기술 홍보를 통해 협업 사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R&D에 미디어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발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어 성과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및 지역 경제의 침체 등에 따른 지역·중소방송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밀착형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지원했습니다. 중소·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2023년 97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총 72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역기반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신 유형 콘텐츠 제작활성화 등으로 시청·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2021년, 87.3점 → 2023년, 87.7점)했고, 38개의 중소·지역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이 외부기관 평가에서 62회 수상하는 등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시청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콘텐츠마켓인 베트남 콘텐츠마켓(2022년 6월, 2023년 6월)과 싱가포르 콘텐츠마켓(2022년 12월, 2023년 12월)의 참가를 지원하고, 지역방송사 간 교류 활성화 및 해외 방송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2023년 11월 8일)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우수콘텐츠 유통 지원 사업을 실시해, 실제로 지역방송사의 콘텐츠가 해외로 판매되는 성과(2022~2023년 18억 4,000만 원)를 이뤘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방송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상생을 위해 새롭게 수립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4~2026년)'을 토대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Lv.4 제도마련에 착수하고,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한 '원탑코리아'를 운영해 2023년에는 333억 달러를 달성했고,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투자·육성을 위해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종 혁신 기술이 여러 분야의 필수 이용시설(기기)과 결합되는 초연결 시대와 Chat Gpt,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 AI 및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건설업 등 국토교통 전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모빌리티를 조기에 상용화하고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해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 강소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적 R&D 과제 발굴 등 미래를 대비해 총체적인 전략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및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의 일상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



OSC 공법

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및 모빌리티 도시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고, 전문 지원기관인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출범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갖췄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어 2024년 2월 8건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자유로운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이 국민들의 일상에서 빠르게 도입 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자율주행의 경우,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위한 기반 완비에 이어 레벨4 완전자율주행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해 기업이 도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으로(17개 시·도 34곳) 확대했고, 도심항공교통(UAM)은 산·학·연·관이 함께 'K-UAM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2023년 전남 고흥에서 비도심 실증을 착수해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수도권 실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에는 금년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 드론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 전통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건설현장내 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2023년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항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상시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23년 5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후속대책' 발표, 2023년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해 건설산업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건설산업 혁신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컨트롤(MC) 등 자동화 건설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을 마련했고, 2023년 12월 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공사 부재(기둥, 벽체 등)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물류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2월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해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차세대 물류서비스 조기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첨단기술 기반 물류안전망을 구축하도록 3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 및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중동·아시아·



머신 가이던스 및 머신 컨트롤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 수주지원을 위한 원팀코리아 파견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서틀 정상외교를 통해 아미탈 프로젝트, 자푸라 프로젝트 등 연이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견인했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한-우크라이나 협력사업인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 8월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천억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건설 진출 지원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체계적·전략적 R&D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해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대표기술 12개를 선정해 향후 10년간 집중 육성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의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2023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6년까지 총 1,007억 원을 투입하는 등 글로벌 기술 리더 자리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전적 R&D를 적극 추진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글로벌 R&D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 R&D를 향한 윤석열정부의 R&D 비전 달성과 국토교통 미래산업 성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3년에는 국내·외 발주처(60개사)와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92개사)간 우수기술 교류 및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해외수출상담회를 통해 베트남 바이어(43개사)와 20억 원 규모 기술·제품수출, 현지법인 설립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6개 펀드, 1,363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 12대 STAR 프로그램 >

1 스마트 건설	2 스마트빌딩	3 Net Zero 건축	4 초연결 스마트도시
5 탄소중립도시	6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7 액화수소 인프라	8 자율협력 주행
9 디지털 물류 체계	10 초고속 하이퍼튜브	11 도심항공 UAM	12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2023년에는 27개 기업에 368억 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판로개척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항공운송·물류·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항공 강국 도약

국제항공 운항 절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인천공항 슬롯 제한(시간당 20대와 비행금지시간(20시~익일 5시)을 전면 폐지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편 증편(2022년 6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2022년 9·10월) 등을 실시해 코로나19 이후 상용 및 관광목적 국제항공 이용객의 입·출국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2023년에도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 추진하고, 운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노선 인센티브 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국제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 결과 2023년말에는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나19 이전(2019년) 대비 91%까지 회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해 항공산업을 전면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부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공화물 팔레트 15개가 2022년 6월부터 최초로 항공사에 납품되면서 국산 항공부품이 첫 상용화됐습니다. 그 이후 2024년 2월까지 객실 컵홀더, 웨어디스크, 창문덮개에 대해 추가 국산화에 성공했고, 약 5,500개의 국산 부품이 국내 항공사에 납품됐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판로를 만들기 위해 국산 항공 팔레트·컨테이너의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획득(2023년 2~3월)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변화하는 항공제작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소형항공기 인증체계 개발 R&D를 2023년 4월에 착수했으며, 부품인증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4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6월 세계 5번째로 항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11개의 지상시스템과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국내 지상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항공위성서비스(KASS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1차 신호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기존 GPS 오차를 대폭 축소해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항공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또한, 공항 인근의 소음대책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3월 '공항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1월에는 소음대책 사업 개편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주민지원사업의 공모사업 방식 도입을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습니다. 기업심사 및 대기업집단 제도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 기능을 활발히 작동하도록 하고 혁신을 촉발시키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기존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정부 규제나 절차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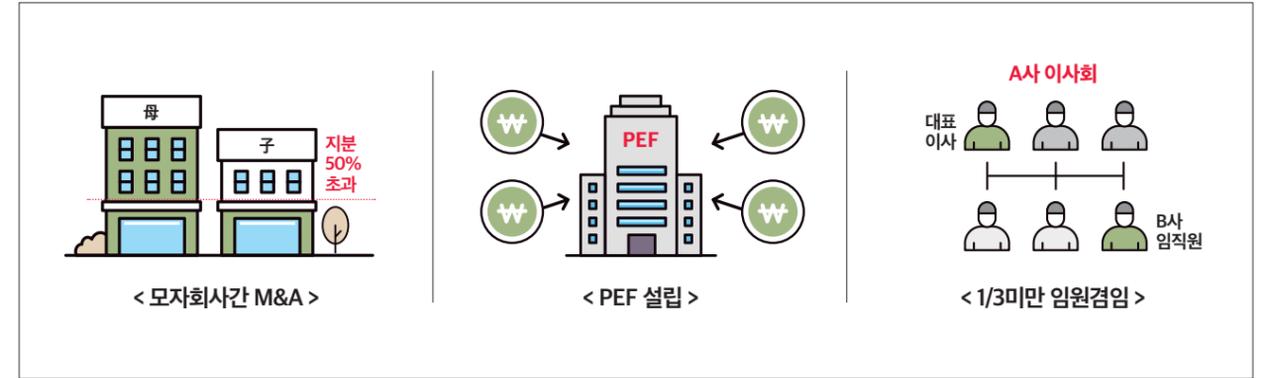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사업자에 대한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에 저렴한 인증대체부품(자동차 출고시 장착된 부품과 동일·유사한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인증기준에 맞게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인증대체부품’ → ‘품질인증부품’ 용어개선)을 추진하는 등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공공조달,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다수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천연가스, 바이오·헬스케어 등 6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진행했고,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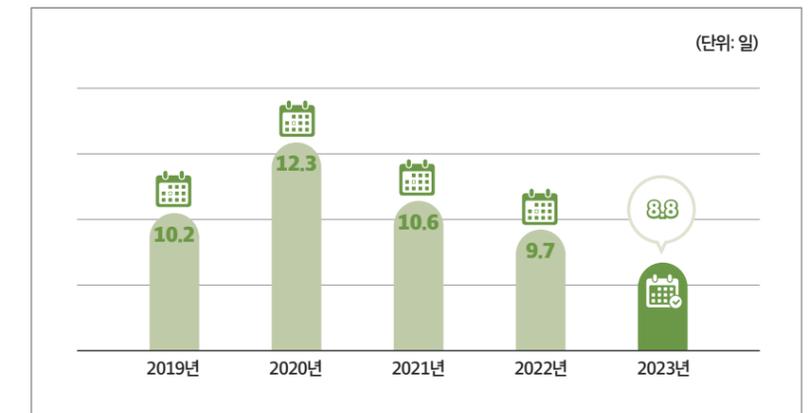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2년 연속 1,000여건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①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 ②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 설립, ③1/3미만 임원겸임 등의 인수·합병 유형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기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 또한 같은 법 개정으로 도입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이 시행되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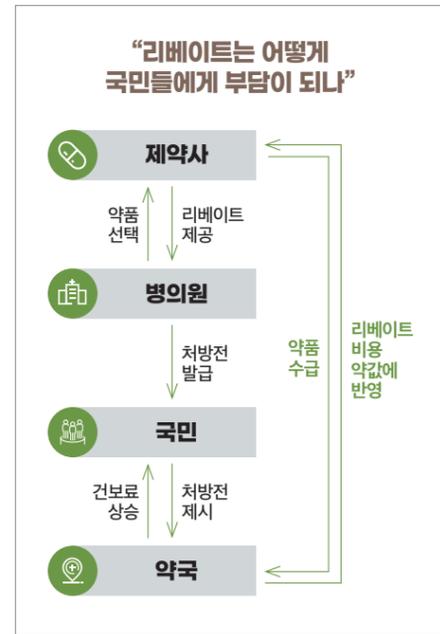
한편, 기업결합 원스톱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보완·심사·통지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신고 편의를 제공했고, 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간이심사 건의 평균처리일수를 2021년 기준 평균 10.6일에서 2023년 기준 평균 8.8일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 간이심사 평균처리일수 단축 >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확립

이동통신, 사교육, 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히 적발·시정하고, 디지털 인프라, 3D 프린터 등 혁신시장에서 발생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과징금 336억 원), 9개 대형입시학원과 출판사들이 강사 및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이력, 합격자 수 등을 허위로 표기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를 시정했습니다. 또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격 인하를 억제한 JW중외제약을 엄정히 제재했습니다(과징금 299억 원).

반도체칩 설계 분야 세계 2위 사업자인 브로드컴이 구매자인 삼성전자에게 부품 공급 장기계약을 강제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행위, 3D 프린터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스트라타시스가 유동사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제재하는 등 민생·혁신 분야에서의 반칙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습니다.

닭고기,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및 가계 부담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과 직결된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제재해 국민세금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아울러, 철근·레미콘·강선 등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국민경제 생산성이 저해되고, 최종재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담합행위로 해당 행위를 시정(과징금 423억 원)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 유인을 보호했습니다.

호반건설, 한국타이어, OCI 등 총 8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과징금 약 366억 원 부과),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전 예측이 어려운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체결했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2년 12월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등)

중기부·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줄이고, 기관 간 협력 강

화로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변화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친족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다만, 동일인출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혈족 5~6촌, 인척 4촌과, 동일인의 혼인 외의 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했습니다.

나아가,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덜어주면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시장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공시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와 관련된 기업 업무량의 50~76%가 감소하는 등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이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대상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이 39만 개에서 54만 개로 약 15만 개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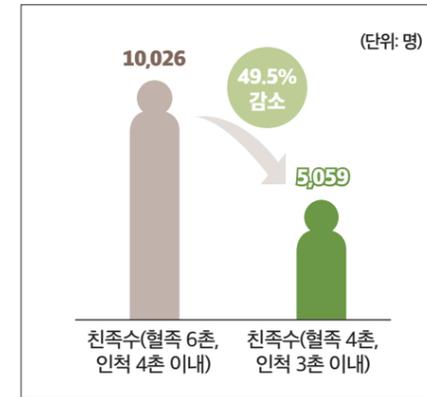
또한, 산·학·연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금감원과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제도 관련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감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혁신·공정·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발표(2023년 4월)했습니다.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사업 효율성·유연성 제고, 업체 권익 보호 강화 4가지 방향을 토대로 12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으

< 동일인 친족범위 합리적 조정 >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대상 확대 >



며, 업계·전문가·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 발표 이후 신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법률 등 규정 개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가지급 기간 단축, 선금 지급한도 확대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조달특례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공공조달법 제정 추진계획’과 ‘주요 조달특례 개선방안’을 2024년 4월 2일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은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절차를 넘어,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공급망 안정,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수단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에게 불합리한 조달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고 개선했습니다.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2022년 7월)해 ‘현장·체감·혁신’ 3대 원칙에 따라 20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2023년까지 179개 과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해묵은 조달규제를 혁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공공조달 킬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간 엄정한 법 집행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플랫폼·온라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경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증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으로 혁신생태계 구현 및 경쟁 촉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앱마켓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카카오톡이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부당하게 배차콜을 몰아준 행위를 제재(과징금 291억 원)하고,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을 제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인기 게임을 경쟁 앱마켓(윈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를 제재(과징금 421억 원)했습니다.

한편, 플랫폼·입점업체 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상생방안 등 현행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루기 힘든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배달앱, 오픈마켓 분야에서 입점계약시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계약사항들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미있는 자율규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에서 자율규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 및 이행점검 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숙박 플랫폼 등 주요 플랫폼 분야로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단가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화에 앞서 자율적인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제정·배포하고, 202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참여 사업자들은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연동계약 및 단가 조정실적에 따라 벌점을 최대 3.5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023년에는 하도급법령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계약 서면에 연동조항 기재를 의무화해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동제 적용대상·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는 등 납품단가 연동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에 기반한 연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반 지원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연동제 자율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연동계약 체결 및 연동실적에 따라 과태료 감경,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시장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대해 크게 환영했습니다. 또한 연동제에 대한 체감도 조사(시범운영 참여기업 342개사 중 125개사 답변) 결과 72% 이상이 안정적 거래 및 위험감소 등의 효과를 체감했다고 답변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와 같은 연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원사업자 443개, 수급사업자 1만 75개 등 1만 518개사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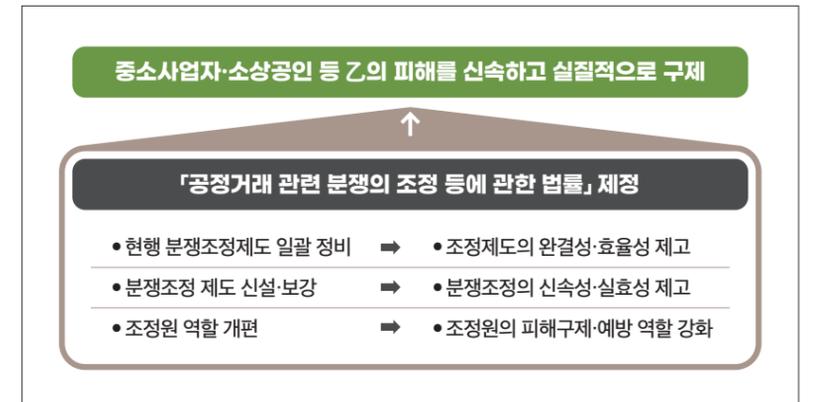
윤석열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불안정 상황 속에도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수급사업자들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당사자 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건은 사후적인 행정제재에서 더 나아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됐으며, 2022년 기준 2,846건 접수, 946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조정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6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의 실무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2023년 12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정안에는 간이조정절차, 중재제도 및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2024년 4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제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2023년 6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해 CP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는 그 후속조치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CP 운영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12월 및 2024년 4월에는 CP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증 수여·정부포상을 진행해 기업을 독려하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인의 피해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

윤석열정부는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자,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지급 납품대금을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지급할 경우 관련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법 위반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가맹·대리점·유통 및 하도급 분야 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피해자가 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역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공정위가 송달·통지하는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소비자원 및 민간단체와 함께 위해제품 관련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해외리콜 제품 등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입된 위해제품 판매를 2022년 1,059건, 2023년 1,044건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미인증·허위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24를 통해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위해정보 의무제출기관을 기존 병원·소방서에서 학교(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까지 확대해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정보수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를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더해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운영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비용과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온라인 등 새로운 거래 환경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1
- 2
- 3
- 4
- 5
- 6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개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규제 발굴·개선 등으로 기업 성장의 걸림들을 제거했으며, 지역 주력산업 개편, 고위험·고성과 R&D 과제 신설,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 간의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육성의 관점에서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 이 중점적으로 지원되어 기업 성장의 동력인 혁신성,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업이 자율성, 창의성을 기초로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장형으로 개편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들 제거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대상 확대(2022년 137개 → 2023년 169개 사업)와 사전협의를(13개 부처 111개)를 통해 ‘성과 창출형’으로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요건 등의 이유로 가업승계 지원 제도 활용 건수가 적은 상황(2021년 110건 3,480억 원, 2022년 147건 3,430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시행(2023년 1월)했고, 2023년 7월에는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시행(2024년 1월)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승계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60억 원 → 120억 원),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 → 15년) 등

현장에서는 2022년, 2023년 두 번의 세제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복수 최대주주의 상속공제 활용 제한 완화 등의 제도 보완 의견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나아가 신규 투자 촉진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국회 숙의를 거쳐 마침내 도입됐습니다. 2023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은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대

폭 확대했고, 성과조건 부주식 제도를 전면 도입해 주식을 통한 임직원 보상 방법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에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환경(탄소중립·ESG) 대응, 중장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빅데이터·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세계적인 ‘제조 지능화·디지털화’ 경쟁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2023년 7월 시행)

2023년 9월에는 그간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의 한계(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2022년 3만 개)를 극복하는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해,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중소제조업 중장기 디지털전환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 144개를 구축했고, 2023년에는 2,518개를 추가적으로 구축했습니다.(2014~2023년 누적 3만 2,662개) 이를 기반으로 해 2023년을 스마트공장 고도화 견인 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예산 1,671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9.0%, 품질 42.1%, 매출액 11.3%가 향상됐고, 고용은 평균 2.1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공정개선 성과				경영개선 성과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D)	고용	매출	산업재해
29.0% ↑	42.1% ↑	35.2% ↓	18.3% ↑	2.1명 ↑	11.3% ↑	1.54% ↓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2019~2020년) 성과조사 분석(2023년 7월, 한국생산성본부)

또한, AI·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조데이터 활용 플랫폼(KAMP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제조 디지털 전환 종합플랫폼’으로 고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AI 제조데이터 도입 성공사례 데이터셋을 축적·확산하고, 사용친화적인 AI 분석 지원도구 및 개발환경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AI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누적 약 1만 명, 제조데이터셋 다운로드는 5만 2,000회를 돌파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 5,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 제조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 민간·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술력 있는 공급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반도체, 인공 지능, 첨단 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해 1조 8,247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의 결과로 매출 17조 원, 수출 29억 달러, 고용 16만 명, 특허 3만 건 등 다양한 기술·경제적 성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연구개발을 지원받은 기업이 97개로 수상기업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성이 입증됐습니다.

2024년에는 범정부 R&D 혁신방향과 일치를 통해 혁신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자체 개발이 어려운 딥테크, 초격차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의 선별 역량과 투자를 연계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수출·판로 성장촉진 3중 패키지로 뒷받침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성장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2023년 12월말 기준 약 2만 6,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3중 복합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금리 대책 프로그램을 신설(이차보전, 2023년 공급규모 약 8,000억 원)해 이차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소비진작 캠페인 ‘동행축제’를 개최(2023년 5, 9, 12월)해 매출액이 3조 9,925억 원을 상회했고, 2022년과 비교해 총 매출액 2.7배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 달러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3년 연속 1,100억 달러선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국내 유통사와 협업한 내수 판로활성화 및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발굴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에 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지역사회 기여도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 10개 사를 ‘초광역 선도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초광역 선도기업’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중 시·도 간 공급망 연결 및 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기업으로 2024년에 10개 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0개 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사업화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내역 >

수도권(5)		충청권(5)		호남권(5)		영남권(6)	
서울	도시제조업	충북	반도체	전북	기계부품	부산	친환경 에너지
경기	뿌리산업	충북	이차전지	전남	이차전지	대구	로봇
경기	미래차-전반	충남	바이오	광주	미래차-전장	경북	미래차-의장
인천	모빌리티	대전	국방로봇	광주	소재·부품	경남	원자력
강원	센서·소재	세종	정보보안	제주	바이오	경남	우주항공
						울산	미래차-모듈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

윤석열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2023년 2월 16일)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의결해,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신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해당 주력산업 기업수요에 기반해 기획한 35개 프로젝트 중 21개의 프로젝트를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1월 2일 중소기업부와 17개 시·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4~2026년까지 3년간 ‘레전드 (Region+End) 5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레전드 50* 참여기업 1,354개사를 선정했으며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지원사업 6종(정책자금융자, 스마트공장, 창업성장, 혁신마우처, 수출마우처, 사업화)에 대해 개별 사업의 지원조건 완화와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제공하고 2024년 정부 예산 2,79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중앙과 지역이 함께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 특화된 기업군을 집중육성해 수출 및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킬 마중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추가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추가설치해 기존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서 운영되던 것을 세종,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2개 시·도에 1,249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후 기업 345개사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과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심각(의심)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검증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량분석과 종합해 위기징후 단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 경영개선, 지역 위기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과정의 품질 제고, 긴급처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년 8월)’을 마련해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등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창업환경 상위 30개 전세계 도시권 중 한국은 1개(서울) 뿐 (미국 : 13개)

이에 윤석열정부는 융·복합방식의 자금지원, 대기업 협업 등 창업·벤처 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창업 기업이 해외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창업중심대학’ 9개(2022년 6개, 2023년 3개 지정)를 운영해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를 지원했습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및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매출 5,584억 원, 고용 1,496명, 투자유치 563억 원 등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대학발 창업의 권역 제한 폐지, 대학발 창업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학에 재직 또는 재직된 학생·교원부터 대학의 기술, 인프라, 투자 등을 활용한 창업기업까지 지원해 대학발 창업 활성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창업중심대학 지정 현황 >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계
2022년	한양대 (서울)	호서대 (충남)	전북대 (전북)	강원대 (강원)	대구대 (경북)	부산대 (부산)	6
2023년	성균관대 (경기)	한남대 (대전)				경상국립대 (경남)	3

신산업 중심의 첨단 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독보적인 기술과 혁신성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0개사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5월에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295개사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 기술검증, 개방형 혁신, 투자 등 맞춤형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 총 380여 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신규 선발할 계획이며, 분야별 핵심 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기술검증과 판로까지 확보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순수 민간자금으로 운용되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1호를 출범하는 등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모태펀드에서 총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출자해 약 2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가 정책 마중물이 되어 기관투자자 및 민간의 펀드 출자를 이끌며 2023년의 벤처펀드 결성 실적이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1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대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격차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펀드도 10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0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법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11월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출범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또한 도전적 투자 분위기 조성 및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재편을 위해 2023년 10월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으며, 11월 ‘Global CVC 콘퍼런스’를 최초 개최해 국내외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와 벤처·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 8,0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들에 신속하게 투자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 핵심 정책인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인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투자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스케일업 전용 해외진출 및 금융 프로그램 마련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초격차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1조 7,000억 원)을 통해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성장토록 지원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보증’을 마련했습니다(3,000억 원).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했습니다. 2024년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미래전략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15개사를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억 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유망 창업기업 51개 사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예비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아기유니콘기업에게는 시장개척자금 3억 원과 특별보증 최대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예비유니콘기업에게도 특별보증 추가한도와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내용을 신설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자율참여형 방식을 적용한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윤석열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정책수요자(지자체·참여기업 등) 및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운영성과 평가 등을 바탕으로 2022년 8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실증기간 유효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2+2년 → 4+2년)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해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기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일자리 창출 6,832명, 투자유치 14조 8,000억 원, VC투자 8,529억 원, 특구내 공장설립 37개사, 기업유치 440개사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2023년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해 규제 특례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를 도입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3년 12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 4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후보지 4곳은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최종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선점을 위한 해외 실증·인증,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등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임시허가 결정기간 단축 등 글로벌 혁신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 및 규제자유특구 제도운영의 미비 사항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현황>

지역	특구명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대체연료, 탄소 포집활용 등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사업화
강원	시헬스케어	의료데이터 규제 해소 및 첨단 의료시 제품 생산, 인증, 수출지원을 통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경쟁력 확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실증·인증이 가능한 첨단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전남	직류산업	직류(DC) 전력망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2년 310개사 대비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5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했으며, 2,500억 원의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수소·전기차로의 전환, 자동차 택배배송에서 드론·로봇 택배배송으로의 전환과 같이 동일업종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사업 시장확대 등 급속도로 변하는 경제환경에 중소기업이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에 따른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폐업, 파산기업 증가 등 폐업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아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750억 원)을 지원 했고, 성실실패 중소기업인의 경우 파산, 회생, 연체와 같은 부정적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자금조달 활성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재창업자의 실패원인 분석 및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재창업 규제도 발굴·개선해 실패 후 쉽게 재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14년 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도입, 피해기업 구제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상생결제를 제조업에서 유통 분야 및 지자체로 확산하고,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인 ‘원원아너스’를 발굴 확산하는 등 동반성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무역 부진, 금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동반성장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개정 상생협력법이 2023년 10월 4일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 수탁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납품 대금을 제대로 조정받을 수 있어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이 공포(2023년 1월 3일)된 이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서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는 한편, 총 157회의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연동제를 홍보하고,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습니다.

* 법무법인 10회, 대·중견기업 88회, 협·단체 34회, 중기 지방청 13회, 기타 12회

또한, 연동제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개설해 기업들이 손쉽게 연동제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 연동계약서와 가이드북 및 FAQ를 제작·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에 기업들도 호응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이 2023년 12월말 기준 총 1만 518개사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현장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동제 교육·컨설팅·법률지원 등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기존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외에 추가 4개소를 지정해 운영중에 있으며,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도 기존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어 향후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동대상 주요 물품 명칭과 원재료에 대한 원가 계산 및 변동율 산정을 위한 기준 지표 컨설팅

납품대금 연동제와 함께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노력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수·위탁기업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고, 동시에 불공정 수·위탁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및 행정조치도 진행해 중소기업에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신속한 회복을 도왔습니다.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 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 수탁기업 또는 중기협동조합과 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조정 자율협의

또한, 매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수·위탁거래 기업간 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해 불공정거래 행위 자진 개선 및 교육, 건전한 거래 관행 조성에도 주력했습니다.

* 정기실태조사

(조사대상) 2023년도에 수위탁거래가 있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2,000개사

(조사 내용) 상생협력법 관련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조사

(자진 개선액/백만 원) (2020년) 19,279 → (2021년) 10,388 → (2022년) 9,891 → (2023년) 조사중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기업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분쟁조정 제도 등이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안내와 기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全) 주기 지원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를 위한 법 체계 개선 등 촘촘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을 개정했습니다.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및 유용행위 신고 등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배액이 3배에서 5배로 상향되고 피해기업의 원활한 입증 지원을 위해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조사 등의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했습니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로 인한 분쟁 대응 시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 및 법률, 회계 전문가와 연계해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2023년 3월 시범 도입했으며, 2024년

부터는 지원대상 확대, 우대대상 및 보조율 등 개편을 통해 수요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상향하고, 영세한 피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밝히기 어려운 기술유용행위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적발·제재할 수 있는 기술유용 감시 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중소 수급 사업자의 비중이 특히 높은 자동차 부품, 기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3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17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 41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인 3개, 개인 2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시범도입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각 기업별로 기술보호 수준과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으며, 2023년까지 72개 선도기업을 발굴했습니다. 2024년에는 ‘기술보호 바우처’를 도입해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보호 정책적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2023년 3월 보장범위를 확대하면서 전년도 34건 대비 80% 이상 증가한 62건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해외 기술분쟁을 보장하는 해외상품을 출시해 추가지원(80%) 및 보상한도(최대 2억 원) 확대 등 해외진출 또는 예정인 기업의 기술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자문 전문가 확대(30명 → 50명), 기술분쟁 소송 사건을 조정제도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1심 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술보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교육설명회 등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유용 근절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 향상과 함께 혁신기업 집중 지원, 지원사업간 통합 및 연계, 지원사업별 고도화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新동반성장 추진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와 상생협력 모델 정립·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호 윈윈하는 상생협력 활동인 ‘윈윈 아너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사

에게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사 뿐만아니라 비협력사와도 협력해 윈윈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동반성장 활동 10건을 선정해 동반성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공고 방식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 체감하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협약으로 2023년말까지 총 66건의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재원 약 7조 8,000억 원을 확보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율협약을 토대로 협력기업 임금 및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경영안정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위한 ‘상생결제’의 사용 분야를 민간 제조업에서 유통 분야 및 지자체로 확산해 ‘상생결제’ 실적이 2024년 3월말까지 누적 1,051조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인쇄, 제지업 등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업종간, 전·후방 산업간 분쟁조정 등 신·구산업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운영을 통해 2022년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금액이 1조 원에 달하는 등 공정한 성과배분을 유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민간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지속 확산하며 산업·업종별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1
- 2
- 3
- 4
- 5
- 6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023년 6월 22일 발표했으며 동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2023년 4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하고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 적용 및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했으며,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등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고, 2022년 7월 샘플링 결합제도를 도입하는 등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며 2022년 8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추진 중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됐고, 한편으로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정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노력을 통해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 방향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보안 규제를 선진화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차례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11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23년 2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선진국 현

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방문해 선진국 내부통제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 가능한 해외제도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금융회사 종사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반발 최소화를 위해 2023년 3월에는 업권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금융회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윤석열정부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하고(2023년 6월 22일), 동 방안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고(2023년 9월 11일) 입법노력을 통해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2023년 12월 8일) 시행(2024년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 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빅테크는 ICT, 네트워크·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술기업으로 통상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지급결제·간편송금부터 시작해 은행, 보험, 자산관리 등으로 제공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그에 따른 잠재위험도 균형감 있게 관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에 맞춘 국내제도 정비 등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이에 따른 규율방향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민관합동 TF를 구성(4월)하고, 국제기구(FSB, IMF 등) 논의 경과를 살펴보는 등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구조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향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빅테크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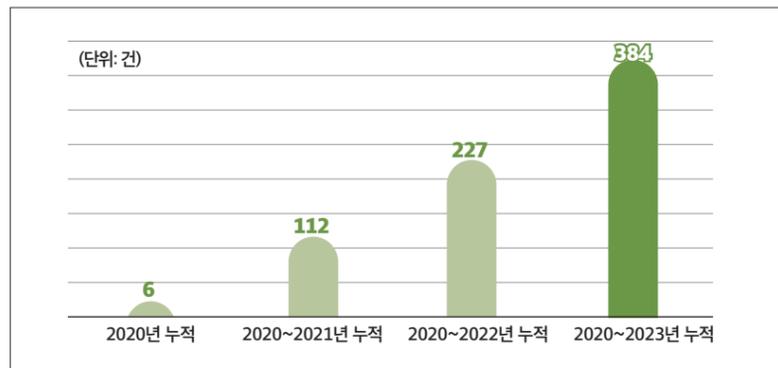
금융보안 규제 개선 요구에 부응해, 2022년 4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정부는 그간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받아왔던 금융분야 망분리에 대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적용되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역시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중요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에 대한 대표평가제를 도입하고 중복된 평가항목을 정비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보고절차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보고하던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촉진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계획의 첫 단계로서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보안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안전한 금융환경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과 함께, 2022년 7월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첫째, 핀테크 기업 등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샘플링 결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의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데이터 결합 건수>



2023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는 384건으로,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으로 데이터 결합 건수가 지속 증가해 다량, 양질의 데이터가 금융권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예금·보험·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뱅크샐러드 외 8개 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6월 삼성카드 외 15개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총 4개사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여부, 불완전 판매 발생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개발 등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금융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금융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시장이 확장되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 등 각종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3.10.10)

- (일평균 거래규모) 2조 9,000억 원
- (원화예치금) 4조 원
- (가상자산 시가총액) 28조 4,000억 원
- (가상자산 종목수) 1,399개(중복제외시 622개)
- (등록 계정수) 950만 개
- (거래가능 이용자) 606만 명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주로 규율해 왔으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예: EU, MiCA(Market in Crypto Assets)]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위탁해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일정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구체적 보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2월 11일 입법예고 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2024년 2월 6일 발표하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모범사례를 자율규제 형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를 통해 가상자산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4~15일에는 ‘한-IMF 공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해외 기관 및 글로벌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24년 3월 기준 검사 9회

국내 코인발행 여건 조성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첫째, 전자증권법 제도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하고, 둘째,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합니다.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NFT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2022년 12월 1일)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NFT 규제혁신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 의견 수렴·방안 논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점진적·단계적 추진방향에 맞추어, NFT 규율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규율체계 내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모도 과열종목 확대 및 기관투자자 담보비율을 인하했고, 물적분할 상장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를 확대해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공개매수 제도 등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했고,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외연 확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미흡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저평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는 시장을 구축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 종전에는 본인 보유주식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도 모두 합해 종목당 10억 원 이상(또는 코스피 상장 법인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넥 상장 법인은 2% 이상, 코넥스 상장 법인은 4%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2023년 양도주식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기타주주 포함 유지). 그간 친족 등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 세부담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에는 납세자가 보다 쉽게 과세여부를 파악할 뿐 아니라 세부담도 완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증권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래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2022년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2025년 0.15% 예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모도 근절 및 공모도 운영 개선

공모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 검찰과 거래소는 2022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모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모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공모도 대책을 발표해

2022년 11월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공모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보호 제도화

2022년 중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됐습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향후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해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폐지 과정 합리적으로 정비

상장폐지 결정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상장폐지가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상장폐지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기업의 계속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실질심사가 확대됐으며,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 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2024년 7월 24일-)입니다. 앞으로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외됐던 일반투자자에게도 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방안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배주주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표한 방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행했습니다. 또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모바일 OTP 미도입 은행의 모바일 OTP 도입·운영을 완료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고,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마련을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했으며,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했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제도를 개선해나갔습니다.

예대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2022년 7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해 은행별 상세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중이며, 2023년 3월에는 금리정보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은행권 협의를 거쳐 2022년 10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을 2022년 8월 발표했으며, 같은 해 9개 기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동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현재 총 4개사(네이버파이낸셜·신한은행·토스·카카오페이)가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업계 공동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업체별 상황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서 공시대상 업체별 현장 방문을 실시(2022년 9월)했습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빅테크 3사, PG사, 선불업자, 오픈마켓 등 유형별 대표업체

**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엔에이치엔페이코, 우아한형제들, 심일번가, 롯데멤버스, 쿠팡페이,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글로벌 등 10개사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기업이 더욱 우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칭(matching) 방식을 개선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및 감사품질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 기업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현장조사 등 조사 권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험·인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검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 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동 방안을 통해 기관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관련 조직·인력 보강, 다양한 조사·제재수단 도입 등 증권 범죄 대응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선진화 및 해외투자 소득제고

정부는 2023.2월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적·경쟁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RFI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은행간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당국의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09시부터 15시 반까지 운영 중인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익일 02시(런던장 마감시간)까지 우선 연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미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Aggregator)를 도입하고, 계좌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된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금융기관의 등록, 업무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을 마련해 시행(2022년 12월)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목적) 수수료의 구분 및 공시에 관한 기본원칙 제시
- (구분관리)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 및 관리토록 함
- (공시) 공시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 등에 반기 단위로 공시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계 확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수수료를 구분관리 체계에 따라 결제 수단별·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 경쟁을 촉진했고, 2024.1월말 3차 공시 결과, 선불은 2차 공시(2023년 8월) 대비 △0.07%p, 최초 공시(2023년 3월) 대비 △0.09%p 하락, 카드는 각각 △0.04%p, △0.06%p 하락하는 등 자율공시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차 공시부터 통합공시를 실시(기존 각사 개별공시와 병행)해, 각 사의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페이지*를 운영하고, 결제 수수료 세부 구성항목에 대한 제3자 추가검증을 실시해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에서 각사의 공시 내용을 일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fine.fss.or.kr)에서 링크 제공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

전체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OTP 미도입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의 협의를 진행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의를 완료(2022년 9월)해 2022.12월 전체 은행이 모바일 OTP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 카카오뱅크는 2022.12.9, 토스뱅크는 2022.12.19 각각 도입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

또한, 모바일 OTP를 이미 도입한 은행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모바일 OTP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가 취급·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22년 10월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혁신방안을 발표해 금융분쟁 배정방식을 효율화하고, 분쟁 유형별로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접수순서에 따라 개별 처리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일괄심리를 진행해 집중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분쟁조정사건 처리건수가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3년 중에는 조정결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23년 8월) 등 제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우선, 조정위 참석위원을 위원장이 임의로 지명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조정위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위촉된 위원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을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금융분쟁은 합의권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정위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펫보험 활성화 추진

2022년 8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2022년 9월부터 농림부, 수의·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2023년 4월 28일)하는 등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체 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동물병원의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병원에서 보험가입, 간편 청구 등을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을 위해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지역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선정해 혁신 성장거점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을 차질 없이 발전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 국토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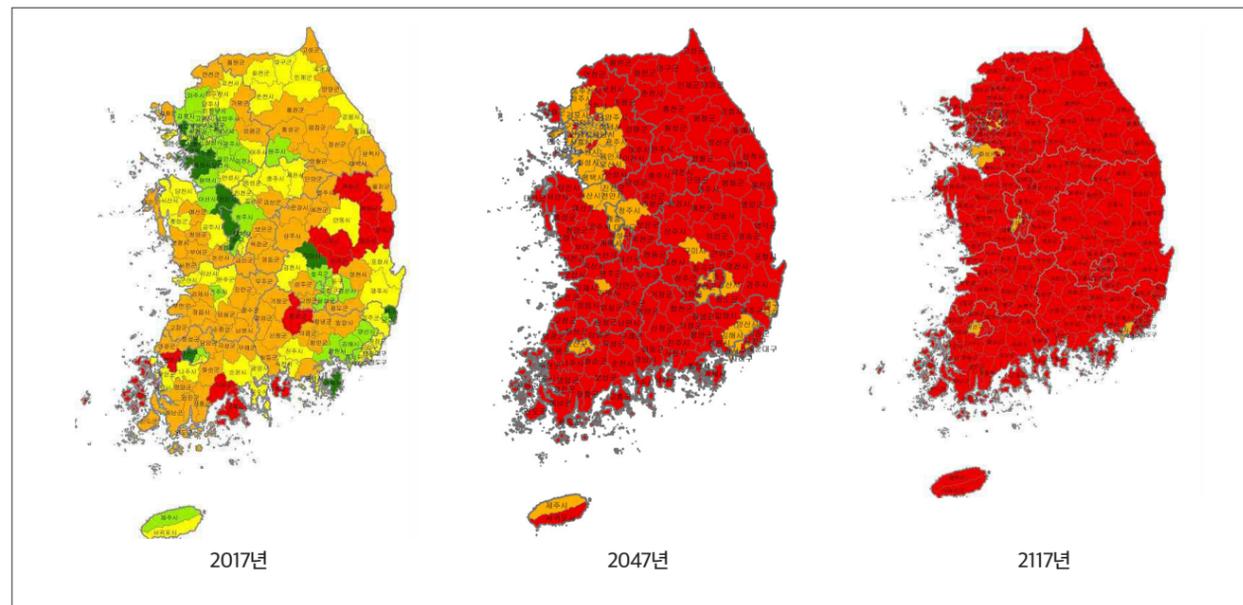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10년 51%에서 2021년 47.2%로 낮아지는 등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2021년 7월)에 따르면 2047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고유 잠재력을 살려 강소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조성

권역별 대도시권에 중심이 될 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획기적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붉은색이 소멸위험) >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 허브)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선도사업지구로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심융합특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23년 10월 24일)했습니다. 기업혁신파크의 경우 정책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 5~7월까지 전경련 등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기업수요를 반영한 집적·복합개발을 유도, 사업성개선, 입주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2024년 2월 13일)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3년 4월 4차사업 2개 대학(단국대(천안), 부경대)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연말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지자체의 기업혁신파크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실시할 예정이며, 캠퍼스 혁신파크 2차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착공하는 등 현재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소도시와 낙후지역의 차별화된 공간조성 및 지원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2023년 3월에 발표했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12월까지 모든 후보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한편, 노후 산업단지는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정주환경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및 9월에 각각 대전일반산단, 구미1국가산단을 재생사업지구 내 추진하는 활성화구역 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업종 제한 완화,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등을 위해 '산업단지 킬러규제 해소방안'(2023년 8월 24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산단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 산단 지정권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재생사업지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거점 고도화를 통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023년 6월 28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12월에는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 기능 등 국가중추기능을 수용하는 행복도시건설기본·개발계획을 변경했고 2024년에는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캠퍼스(임대형)를 개교할 계획입니다. 한편 혁신도시의 입주자금 지원 등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 입주



기업이 2022년 2,963개에서 2023년 3,724개로 증가했고, 보육, 문화시설 등 정주인프라 및 창업공간 등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해 정주여건을 제고했으며, 2024년에는 연관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도가격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도 지역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8월에 세제 혜택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했고,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준공(2023년 6월) 및 물류·교통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도로 준공(2023년 7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에는 공업용수 및 폐수 방류 공동관로 건설 등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229곳의 기초지자체 분석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학교, 보건소, 체육관 등 14개의 대표 인프라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용방안 연구를 추진중입니다. 또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7개 부처와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활력타운 사업지 7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사업대상지 1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오늘날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시대에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2023년 1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6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휴부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민간의 개발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의 경제·사회 활동을 담아내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제도가 활성화 되면, 내가 사는 곳 중심으로 경제·생활 여건을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한 N분 생활권 형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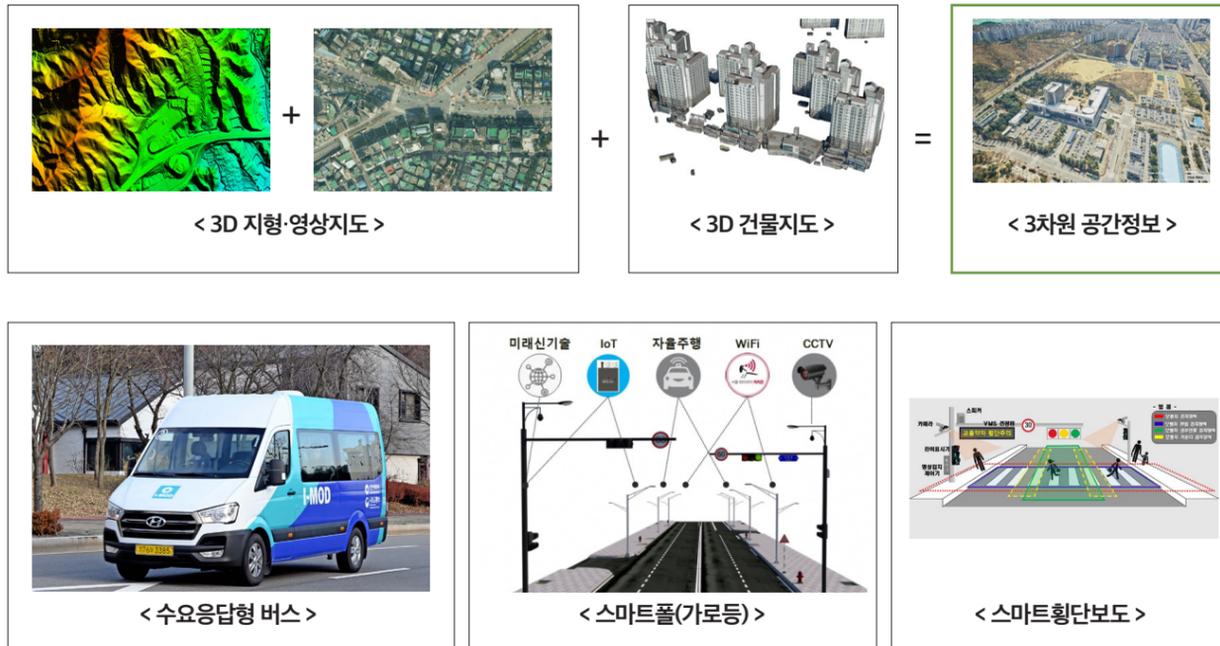
<p>< 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등 규제 없는 자유로운 개발로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한 한국형 White-Zone</p>	<p>< 복합용도구역 > 다양한 용도를 복합해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활력 공간 조성</p>	<p><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공원·터미널 등)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p>
<p>유휴부지를 마리나베이(싱가폴), 허드슨야드(미국)와 같은 복합거점으로 개발 가능</p>	<p>노후상권·쇠퇴공업지역을 연희동·성수동과 같은 핫플레이스로 조성 가능</p>	<p>도로·철도 지하화 또는 노후공공청사 복합화를 통한 지역거점 조성</p>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3년에는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확대를 위해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계획'을 수립했고, 대국민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도 1차 개편해 오픈했으며, 2024년에는 3D 분석기능 확대 등 고도화를 위한 2차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화기술 및 서비스를 집중 도입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4곳(평택, 목포, 아산, 태안)을 2023년 5월 선정했으며, 금년도부터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을 조성하고 서로 연계(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최초로 개통하고, 지역간 광역철도 및 간선도로, 신공항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신도시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 서민·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지역간 교통 인프라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벽지노선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 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등 국토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과 메가시티에 GTX,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신공항 건설로 전국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청년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K-패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국내선 운항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GTX 신속 추진 등을 통한 30분 출퇴근 시대

2024년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최초 개통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달성을 위한 GTX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70분에서 80분까지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GTX 이용 시 K-패스를 통해 요금을 할인(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환승 할인제를 적용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번 GTX-A 노선 개통을 계기로 GTX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A노선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까지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까지 완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은 2028년,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B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2기 GTX 역시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ABC 연장 노선은 본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DEF 신설노선은 2035년 개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

< GTX 개통 시 거점역 간 시간 단축 효과 >

	GTX-A		GTX-B		GTX-C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인천대입구~서울역	마석~청량리	덕정~삼성역	수원~삼성
이동시간	지하철 79분 버스 75분 ▼ GTX 20분	지하철 54분 버스 70분 ▼ GTX 20분	지하철 80분 버스 95분 ▼ GTX 30분	지하철 45분 버스 75분 ▼ GTX 23분	지하철 75분 ▼ GTX 29분	지하철 70분 버스 80분 ▼ GTX 27분



대구권 광역철도 차량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지하고속도로는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5월 경인(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23년 2월 경부(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2023년 12월 수도권제1순환선(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관계기관 사업 추진 협업체를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선(서창~김포)은 사업시행자와 협상 중에 있으며, 이를 조속히 완료하고 후속 절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GTX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지방 대도시권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통합신공항을 거쳐 의성까지 GTX급 급행철도로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2024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며, 대전-세종-청주도심-청주공항을 빠르게 이동하고, 충남을 거쳐 서울까지 연결하는 CTX 사업은 2024년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가 2024년말 개통될 예정으로, 대구, 경산, 구미 주민들은 보다 저렴한 요금에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용문~홍천 광역철도도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아울러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동탄~청주공항, 진영~울산 등 다른 사업들도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조안 구간 개통(2024년 2월)으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56년 만에 고속도로 5,000km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화도~양평 고속도로



아산~천안 고속도로



비금~암태 국도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전 국토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및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을 적기에 이행했습니다. 2023년 6월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2복선화 사업을 착공했으며, 2024년 말 국토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을 개통해 서울에서 원주, 안동,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KTX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내 동해선 포항~동해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하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지역이 최초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됐으며, 중소도시 정체 구간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20개 국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적기에 개통했습니다. 아울러, 바다로 단절된 섬과 섬, 섬과 육지를 해저터널 또는 교량으로 연결해 바닷길을 여는 남해~여수, 비금~암태 및 고창~부안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간선기능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항공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국내 1호 소형공항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근로환경 보호대책 등을 통해 임금체불·중대사고 '0'을 실현하는 등 공항건설의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공정률이 43%에 달하는 등 공사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2023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따라 기본계획(안) 협의를 착수해 2024년 중 수립 예정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역시 2023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은 2024년 중 건설공단 설립 및 부지조성공사 발주, 건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 사업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백령공항·흑산공항 등 지방권 공항도 기본계획·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 혁신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하던 안성, 평택 등의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급행버스(M버스)도 인천에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입석해소 대책 등을 통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를 통해 운행횟수를 680회/일 확대해 보다 빨리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성남~북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비수도권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12월 북울산역 환승센터, 2023년 3월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 2024년 3월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를 착공했습니다.

한편, 2024년 5월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한 K-패스 도

< 알뜰교통카드 vs K-패스 비교 >

알뜰	~2천원	2~3천원	3천원~	K-패스	적립률	예) 1,500원 기준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일반	20%	30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저소득	53%	800원
비고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 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비고	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입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패스는 GTX, 광역버스와 같은 광역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세계를 잇는 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선 운항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2023년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여행 심리회복 및 국제선 수요를 촉진하고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3년말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91%까지 회복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제41차 ICAO 총회(2022년 9월 27일~10월 7일)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8연임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등 세계 각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고, 소규모 지방공항의 국내선 스케줄 조정 등으로 국내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항공산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국제선 수요에 대응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 공항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내 출입국장 공항 면세점에서 탑승 30분 전까지 상품예약·구매 등이 가능한 '온라인 면세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권 주민과 신도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허용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 및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및 신도시 등 거주지로 인해 이동의 차별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공공형 버스·택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과 메가시티에 GTX, 순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이동시간 단축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이동권 보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목표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운 불황기 국적 선사의 경영안정과 선사-수출기업 간 상생을 지원해 2023년 최초로 국가 해상수송능력 1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내 첫 완전자동화 항만 준공, 자율운항 실증선박 건조,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해운물류 분야 친환경·디지털화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산업은 무역의존도가 84.6%로 높은 한국경제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한편, 최근 강화되는 환경규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화 등 글로벌 물류 환경이 급변하면서 해운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글로벌 경기침체기 하에서 해운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전환, 첨단해양교통 환경 구축 등을 통해 미래 해운시장 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로 국적선대 1억 톤대 진입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국적 선사의 선박확보에 2조 5,154억 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1조 7,299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민간 선박투자에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됐습니다.(2022~2023년 합산 기준) 그 결과 2023년 최초로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이 1억 톤을 돌파했습니다. 국적 원양선사의 컨테이너 수송능력은 111만 3,000TEU를 달성해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 이후의 급감에서 회복했습니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과 함께 HMM은 국내 최초로 9,000TEU급 메탄올 추진선 9척을 신조 발주(2023년 2월)해 친환경 해운시대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발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상승했던 해상운임이 급락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을 구축하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고 재무상황이 열악한 중소선사 42개사에 3,133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대출이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을 확보, 합리적인 가격에 선사에 장기임대하는 공공선주사업을 40% 확대(15척 → 21척)해 불황기에 우리 선사들의 선박이 해외에 헐값 매각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서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해운산업 경영안

< 우리나라 해상수송능력(지배선대) >



정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다변화,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 선사의 ESG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으로 안정적인 수송망 구축

코로나 팬데믹 기간 유례없는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용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임시선박을 투입해 수출화물을 운송하고, 선적공간의 단독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자동차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 기업의 수출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수출에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합동비상대책반을 구축해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업계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공공선주사업을 통해 소형차 1만 대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자동차운반선 4척 확보를 지원하고, 국적 선사가 선적공간의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국적 선사-수출입기업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선·화주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국적 선사와 이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의 일몰이 2022년에 도래함에 따라 2023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로 일몰을 연장했습니다. 2023년에는 인증 대상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일반화물까지로 확대해 인증기업이 15개사에서 28개사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2년 운영을 시작한 네덜란드, 스페인 해외 물류센터에 이어, 2023년에는 베트남과 미국에 물류센터 마련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올해에는 베트남과 LA에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해 수출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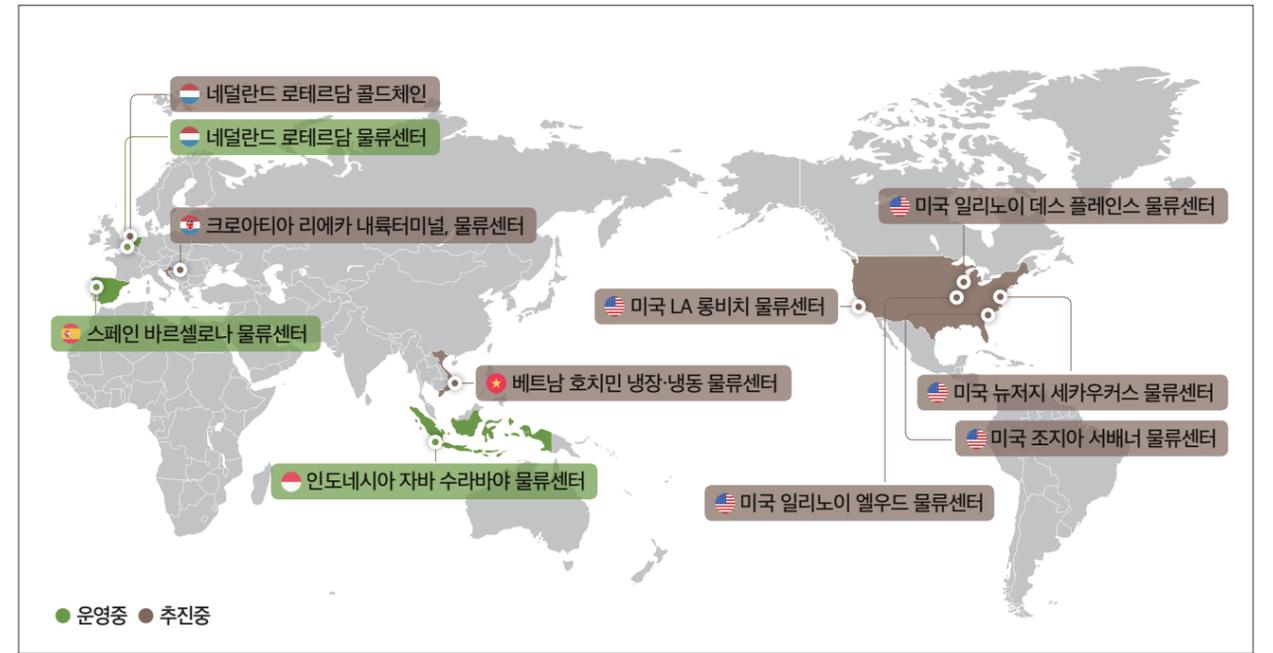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

윤석열정부는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발표하고, 2024년 1월에는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에 국내 최초로 선박 상·하역, 이동, 적재 등 전 영역을 완전 자동화한 스마트항만을 2023년 10월에 준공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에 구축된 완전자동화 항만은 국산 하역장비를 도입했으며, 24시간 멈춤 없는 운영이 가능해 기존 항만에 비해 단위시간 당 생산성이 20%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도 속도를 내 2023년 12월 자동하역장비

<민관합작 글로벌 물류센터 구축 현황>



발주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통해 국내 항만자동화기술의 실증, 스마트항만 운영실적 확보 등이 가능해 향후 국내기술 기반의 스마트항만 구축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및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2050년까지의 국제해운 탄소감축 목표를 5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되는 등 글로벌 선사는 친환경 선박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2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국제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선박 도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최대 2%) 혜택을 제공해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선박확보-선박운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친환경 전환을 위해 2023년 11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을 거점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을 구축·실증하고 연료별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먼바다에서 선원의 조작 없이 운항이 가능한 수준(레벨3) 달성을 목표로 자율운항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 8월부터 실제 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실해역 실증 운항을 위해 2024년 1

월에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하반기부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해 국제항로에서 실증운항할 계획입니다.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해상통신 기반의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바다에서도 위치 정보 오차를 10m에서 5cm로 대폭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에 기준국 등 기반시설 14개소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2024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해 2024년 12월부터 고품질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 양성

선원은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며 전시·재난 등 비상시에는 필수물자를 운송하는 핵심 공공인력이나, 우리 국적선원 수는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선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과 11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승선주기 단축, 외항상선·원양어선 승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등 선원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선원의 노동권·인권 증진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선원, 현지 및 예비선원, 선사 노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노사정과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해 조업 중인 원양어선(2023년 1만 3,112명)과 근해어선(2023년 446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표준근로계약, 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근로 실태를 점검(원양어선 2023년 1, 4, 7, 10월 / 근해어선 2023년 3, 10월)하고 외국인 선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인 국가 해상운송 공급망 운영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화 항만,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첨단해양교통환경 구축 등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선원 일자리 혁신대책 주요내용 >

<p>✓ 승선기간 단축</p>  <p>• 승선기간 및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p>	<p>✓ 인터넷 환경 개선</p>  <p>• 기존보다 50배 빠른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환경 조성</p>	<p>✓ 실질소득·복지 증대</p>  <p>• 외항성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현 월 300만 원) • 내항선원 대상 적립형 공제 도입안 검토 • 원격의료 지원 확대 및 노후선박 현대화 지원</p>
------------------------------------------------------------------------------------------------------------------------------------------------	------------------------------------------------------------------------------------------------------------------------------------------------	----------------------------------------------------------------------------------------------------------------------------------------------------------------------------------------------------------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 체계는 강화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극지·해저·대양에서의 연구범위를 확장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해양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제정하고 해양쓰레기의 전 주기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해양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 등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등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극지·해저·대양 등 미개척 영역을 선점하며,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불법어업 중국어선 201척을 나포하고, 어구 1통당 축구장 2배 크기에 달하는 불법 어구(중국어명 : 범장망) 25통을 철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인도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일부 시설물 설치 가능하도록 2024년 2월에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올해 안에 중국 정부와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공동관리방안'을 마련해 자국 어민 대상 교육·순찰 강화 등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건조 중인 친환경 대형 어업지도선 3척 현장투입(2025년), 용기포항 국가어업지도선 부두건설(2024년 발주) 등을 통해 해양영토

< 극지 연구능력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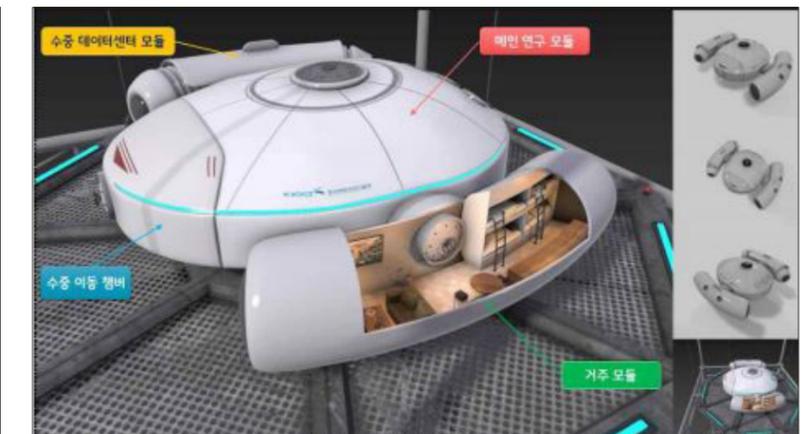
극지 연구능력 최대 4.4배 강화

제2 배빙연구선 건조로 극지 현장 연구일수 확대



북극 35일 → **156일**
남극 49일 → **121일**

< 해저공간 조성 조감도 >



수호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학영토를 확장하고 극지활동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극지 활동 지원을 위해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2022년 11월)한데 이어, 2023년 12월에는 남극 내륙에서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세계 여섯 번째 남극 육상 진출로를 개척했습니다. 앞으로 고위도 북극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1만 6,56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의 건조가 완료되면 남북극의 현장 연구 가능 일수가 2배 이상 늘어 극지 연구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세계 2번째로 추진 중인 해저공간 구축 및 해저채류 기술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본설계를 2023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2026년까지 수심 30m에서 3인이 30일 동안 채류할 수 있는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채류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양과학 분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윤석열정부는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함정을 증강하고 감시체계를 첨단화하는 등 해양경비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나가기

<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체계 >



고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서해 경계 미확정 해역에 전략 구역을 설정하고 대형함정 9척을 배치할 계획이며,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 3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 단독으로 해상과 항공에서의 입체경비가 가능하도록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양경찰청 자체 위성이 최초로 발사되는 2026년까지 해양경찰청 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감시체계를 첨단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함정·드론·위성 등 입체적인 해양 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융합·분석해 종합적인 해양 상황을 예측하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개발 중이며, 2026년까지 완료해 해양 통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항안보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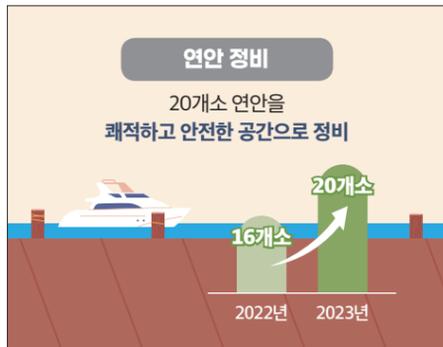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광역 해상교통관제망(VTS)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서해권 목포·군산 광역 VTS를 개국해 영해(8만 6,004km²) 대비 33% 수준인 관제구역을 42%로 확대했으며, 2026년까지 제주광역시 VTS, 동해·포항 VTS 구축을 통해 50% 이상까지 확대해 해역별 촘촘한 관제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 환경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화재진압과 선박의 예인이 가능한 친환경 방제함(LNG 추진선) 3척을 건조해 현장에 배치했으며, 2026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제정되어 민간에서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해양 사고 대응에서는 민관협력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연안여객선 공공성 강화 및 섬 지역 1일 생활권 구축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2023년 8월에 수립해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연안 교통으로의 체질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항로 중 섬·육지간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해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15개 항로를 대상으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전국 40개 소외 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2023년 소외도서에 바닷길 연결사업을 시작해 13개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지원해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선을 2022년부터 신규 여객선으로 교체 투입함으로써 운항시간을 30분 단축했습니다. 앞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 노후화율을 현재



17.5%에서 2027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켜 여객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2개소(강릉, 고창)를 추진하고, 강원, 제주 등 20개소 연안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정비를 완료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연안주민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 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2023년 2월에 마련해, 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전하도록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태풍, 해일 등에 의한 침수가 예상되는 항만 배후지에는 선제적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권역별 노후·유휴항만 재개발을 통해 연안·항만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하고, 지역의 산업·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항만재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 통제구역이던 부산항 북항 일부의 재개발을 2023년 3월에 완료하고, 친수공원을 포함한 1단계 구역을 147년 만에 전면 개방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렸습니다. 항만재개발 최초 민간제안으로 추진한 인천항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을 2024년 3월 준공함으로써 영종대교 중앙부에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333만㎡)의 부지가 조성됐습니다. 향후 동 부지에 해양레저·관광 기능 시설을 유치해 인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전·이용·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 강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국내 연안으로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2022년 45개소에서 2024년 165개로 확대·강화해 빈틈없는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9개 환경관리해역(4,773㎢)에 대한 ‘제4차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도 2023년 12월에 수립해 환경관리해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오염도 저감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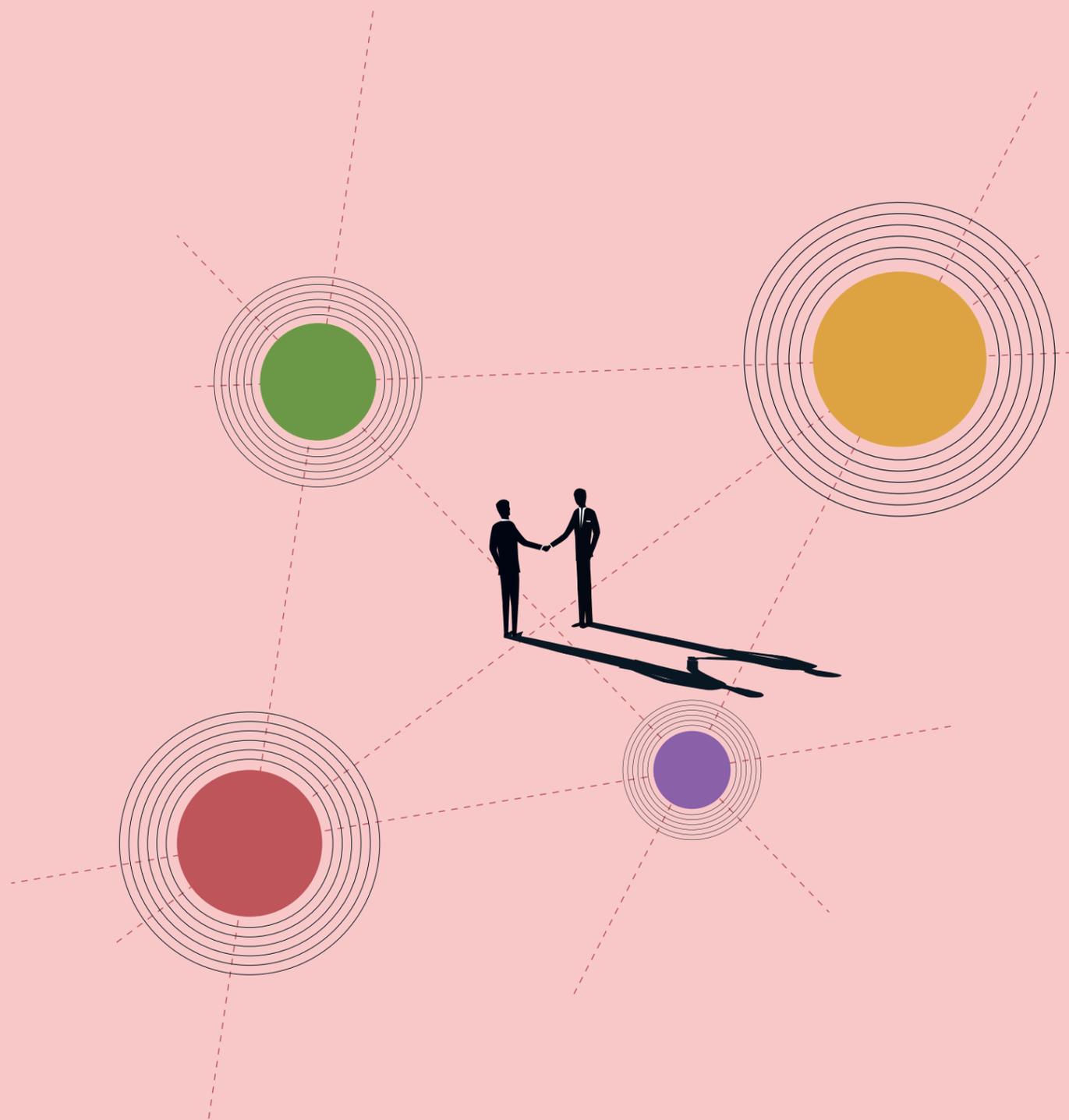
해양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영해 전(全) 해역(8만 6,000㎢, 11개 광역 시·도)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수요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2022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2024년 1월에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겠습니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 강화

해양·극지 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2023년 10월에 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2년 울진 주변해역, 고흥갯벌, 2023년에 사천 광포갯벌과 제주오조리갯벌 등 66.93㎢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총 36개소(약 1,865㎢)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갯벌 생태계 복원을 통해 연간 약 5,000톤의 온실가스(자동차 2,100대 배출량 수준)를 흡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7개소의 갯벌을 추가 복원해 총 29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의 유입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2023년 4월에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대규모 일제 수거,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7척 신규 건조(2024년)를 추진했으며, 하천 유입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관리체계도 개선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해양쓰레기 관련 세계 최대 회의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콘퍼런스를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2022년 9월에 개최해 해양쓰레기 관련 국제협력력을 주도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및 동아시아 해양환경 관리협력기구(PEMSEA)와 필리핀, 동티모르 등의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극지·해저·대양 등 경제·과학영토를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등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도출하고(2023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2023년 10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 가능한 단계까지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공론화 과정 지원과 함께 정부 내 논의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5년 간의 사회보장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발표하고 중앙·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했으며,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확충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재정 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 3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총 80여 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장기 재정추계의 경우 2022년 8월 추진계획 마련을 시작으로 추계 시산결과 발표(2023년 1월) 등을 거쳐 2023년 3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연금수리위원회를 운영(2023년 5~10월)해 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등 투명하고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청년·특수고용직 등 이해관계자 현장간담회를 2022년 8월부터 24회 개최했으며, 2023년 8월에는 가입자 2,025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9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소통을 위해 학교·사업장·군부대 등 총 1만 7,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2023년 7월부터 매



백지광고 결과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2023.7.6)



보건복지부 1차관 토크콘서트(2023.5.24)

주 총 8차례 릴레이 인터뷰(KTV, 보건복지부 1차관)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 특장점, 기금운용 현황 등 소개하고 SNS 참여 이벤트,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인식 제고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논의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0월 제5차 종합운영계획(5대 분야·15개 과제)과 재정계산위보고서 등 관련 자료집 총 25종, 5,352쪽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했습니다.

< 5차 재정추계 및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 >

- (재정추계) 2018년 4차 재정추계보다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 단축
 - (수지적자) 2042년 → 2041년(-1년) / (기금소진) 2057년 → 2055년(-2년)
- (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해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제시
 - (5대 분야) ①노후소득보장 ②세대형평 ③재정안정 ④기금운용 개선 ⑤다층체계 정립
 - (개혁 방향성)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구조개혁과 연계한 소득대체를 조정방향 등 제시
 - ※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기반으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2022년 7월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특위와 세부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총 26차례 회의를 개최해 연금개혁 방안 최종보고서를 2023년 11월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특위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인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민의견수렴을 위해 김상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속의 절차와 조

사 방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2024년 1월 3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지원단에 즉시 실무인력을 파견하고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와 학습자료를 제작·제공해 연금개혁 공론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는 '의제숙의단' 속의 과정과 '시민대표단' 속의 과정의 2단계로 추진되며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된 36명의 '의제숙의단' 이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 대안을 도출하고, 1만 명 대상 무작위 기초조사 후 지역, 성, 연령 및 대표성, 신뢰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회를 통해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연금개혁 방안이 법률로 확정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4년 3월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포럼 등을 거쳐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우수한 운용인력 유치를 위한 보수수준 합리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등 자산 배분체계 개선, 해외·대체 투자 확대를 위한 운용인력 확충 및 해외사무소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4년도 기금운용인력 증원(50명)과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신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 결과 연수익률 13.59%로 역대 최고 수익금(127조 원)을 기록하며, 기금 적립금이 최초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2023년 12월 기준 1,035조 7,000억 원)

또한 윤석열정부는 기초연금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32만 3,180원, 2024년에는 33만 4,81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법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소득 하위 70%인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20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설정했으며 2024년에는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 연도별 기준연금액 및 선정기준액 >

(단위: 원, %)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연금액		307,500원	323,180원	334,810원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2,020,000원	2,13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3,232,000원	3,408,000원
소비자물가상승률		5.1%	3.6%	-

아울러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라 2023년에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기초연금 급여액, 빈곤완화 효과 등을 검토했습니다. 평가결과, 임금근로자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상대빈곤선 등 소득기준 대비 기준연금액 수준이 도입 시보다 상승하는 등 현재 기초연금은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가시점(2023년)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는 기초연금 도입시점에 비해 하락하지 않고 기초연금의 노인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

2022년 11월 14개 부처와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로 5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 등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2028년 5년간의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19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지자체 간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차이에 따른 복지급여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역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절차의 전 과정을 전산화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절차가 효율화됐으며 2024년부터 신속협의 제도를 도입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히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심층평가를 추진해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거기반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 및 활용 강화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표본(1,000만 명)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33개 부처·공공기관에서 분산되어 관리 중인 총 800여 개의 개인 단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책 기초자료 분석 및 사회보장 통계지표 생산을 통해 정책 입안 시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회보장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30% → 32%)으로 생계급여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13.16%, 4인가구)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성을 확대했습니다. 상병수당 1,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일하지 못해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등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소득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수준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2023년 5.47%, 2024년 6.09%, 4인가구 기준)으로 인상*하고,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 (연도별 증가율) (2019년) 2.09% → (2020년) 2.94%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 (2024년) 6.09%

이에 따라 2024년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인 21만 3,000원(13.16%, 4인가구 기준) 인상*했으며,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인상한 19만 6,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2024년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수준)
- (4인) (2023년) 162만 1,000원 → (2024년) 183만 4,000원(+21만 3,000원, 13.16%)
- (1인) (2023년) 62만 3,000원 → (2024년) 71만 3,000원(+9만 원, 14.40%)

< 연도별 생계급여 지원수준(4인가구 기준) >

(단위: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135.6만	138.4만	142.5만	146.3만	153.6만	162.0만	183.4만
전년 대비 증가액	+1.6만	+2.8만	+4.1만	+3.8만	+7.3만	+8.4만	+21.3만
	+19.6만						

2023년 9월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수립·발표했으며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등이 새롭게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꾸준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

	~2023.12.31.	2024.1.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 금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현실에 맞게 조정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개편 >

(단위 : 만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현행	22,800	13,600	10,150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개편	36,400	29,400	28,300	19,500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2024년에는 약 3만 명, 2025년까지 총 약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대상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해 완화하겠습니다.

국민 안심을 위한 긴급복지 강화

기준 중위소득의 26%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하고, 2024년에 32% 수준까지 추가 인상해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생계지원금)

- (4인) (2022.1월) 130만 9,000원 → (2022.7월) 153만 6,000원 → (2023년) 162만 원 → (2024년) 183만 4,000원

- (1인) (2022.1월) 48만 9,000원 → (2022.7월) 58만 3,000원 → (2023년) 62만 3,000원 → (2024년) 71만 3,000원

2022년 7월부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2024년부터 ‘생활준비금**’을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습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긴급지원대상자가 생활하고 있어 현금화하기 곤란한 주거용재산에 대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거주하는 주택 1호(戶)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 (2024년 기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2024년 4인 가구 기준 572만 원)

2023년 2월부터 연료비 지원단가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6% 인상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했고, 2023년 12월부터 생계지원의 기본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지원단가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2022년 7월부터 1단계(6개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 7월 2단계(4개 지역)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해 총 10개 지역에서 하루 4만 6,180원,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

모형	1단계(2022년 7월~)			2단계(2023년 7월~)	
	근로활동 불가(모형1)	근로활동 불가(모형2)	의료이용일수(모형3)	근로활동 불가(모형4)	근로활동 불가(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부천, 포항	서울 종로, 천안	순천, 창원	대구 달서, 안양	익산, 용인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하위 50%이하 취업자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됐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8.5일, 약 85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실적 > (2023년 12월 기준)

신청	급여지급	평균지급일수	평균 지급금액
11,117건	9,774건	18.5건	84만 6,000원

앞으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진(2024년 7월~),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해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지급액을 지속 상향하고 재산요건을 합리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 2억 4,000만 원)하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추가 상향하고, 자녀당 최대지급액도 대폭 확대(2022년 70만 원 → 2023년 80만 원 → 2024년 100만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장려금 수혜가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주요내용 > * 지급 연도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년	2023년		2019~2022년	2023년	2024년
단독	150만 원	165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출발이	260만 원	285만 원	재산 요건	2억 원	2.4억 원	2.4억 원
맞벌이	300만 원	330만 원	소득 요건	4,0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시행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법인 식품 제조업·외식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적용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정목표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발표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고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희망이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돌봄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구와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려운 상황임에도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 (2010년)10.8 (2023년)18.4 (2035년)30.1
- 맞벌이 비중 추이(%) : (2020년)45.0 (2021년)45.9 (2023년)46.1
- 1인가구 비중 추이(%) : (2010년)23.9 (2020년)31.7 (2025년)34.3 (2035년)36.8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윤석열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개편해 사회서비스 혁신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2022년 8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3년에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을 완료함으로써 지역 내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사회서비스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서비스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을 4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같은 해 9월에 복지 분야 최초로 총 145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해 12월에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기업에 제1호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2024년에도 총 70억 원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추가 조성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로써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 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22년 3월)>제정·시행에 따라, 2023년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도 수립·발표했습니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 시·도 사회서비스원 혁신 시범사업 수행(예시) >



24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경남)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확충 및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및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을 운영해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사회서비스 분야만의 가맹 공급체계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5월에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를 거점기관으로 공모·선정했습니다. 거점기관들은 표준서비스 모델(장기요양, 집수리서비스 등)을 마련해, 2023년 11~12월에 7개의 공유기관을 모집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은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공급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에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총 10개 시·도별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서비스모델을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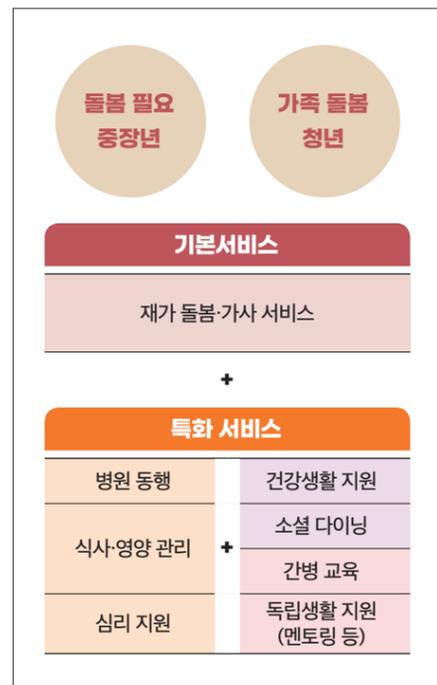
2023년 8월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전국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청·중장년에게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로 2024년에는 사업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및 공급주체 연계·협력 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을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공급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소득기준 완화 및 가격탄력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실업, 가족관계 단절 등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아내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격월(연간 6회)로 위기가구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조사(2022년 1월~2024년 1월, 총 12회)를 통해 발굴한 259만 6,000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조사를 거쳐 129만 2,000명에게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되는 복지 위기정보를 2022년 11월 34종에서 39종으로, 2024년 3월에는 45종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2년에는 세대단위 위기 분석을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의료·고용위기 등 주요 위기변수 특성 활용 모형을 적용해 복지 사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개요(2023년 기준)>



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연락두절 위기가구에 대한 빈틈없는 소재파악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입신고 시 기재된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통신사 보유 이동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인력과 시스템으로 확인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는 복지부-우정사업본부-지자체 협력하에 8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복지등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12월 기준 60개 지자체가 참여, 7만 5,000가구에 복지등기를 배달해 1만 8,000가구에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고독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2년 최초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39개 기초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고독사 위험자 2022년 2만 명, 2023년 11만 1,000명에게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중앙부처 360여 개, 지자체 4,000여 종 사회보장급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고독사 및 복지 사각지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윤석열정부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먼저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멤버십을 통해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등 복지서비스 2,145만 건(2024년 2월말 기준)을 복지로(복지지갑)를 통해 안내했고, 문자 안내 366만 건(2024년 2월말 기준)도 병행했습니다.

앞으로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모형 개발, 인공지능활용 초기상담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개선해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 및 현장전문가 양성 교육도 지속 실시해 지자체 복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전문 조사·연구기관 지정,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높이고 지자체 복지서비스까지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분절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민·관 간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시스템 개통 전 시범(3회), 시험(2회) 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통해 원활한 개통을 준비했으며, 개통 후에도 사용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고도화 사업 진행 및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격차 제고를 위해 교육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고, 2023년에는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선도모델 개발 및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했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복지시설에 ICT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공급 변화에 맞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으로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기술의 실증·상용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했고(2024년, 신규, 총 7억 원)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사회복지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시행(2022년 6월)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2월 첫 회의 후 2023년에도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2022년 93.4%이었던(복지부)인건비 가이드라인(원고) 준수율을 2023년 94.1%, 2024년 95.3%까지 달성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 10월에는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비율을 개선(2.5:1 → 2.3:1)했으며, 2023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승급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8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승급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소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2024년 1월)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올해 하반기 차질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들을 빠짐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보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토대로 모든 국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뿐 아니라 역량 강화, 인력 수급 전망 등 원활한 수급 정책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발전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103만 개 제공하고 지급되는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으며,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023년 12월)’ 발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확산(2023년 28개소 → 2024년 95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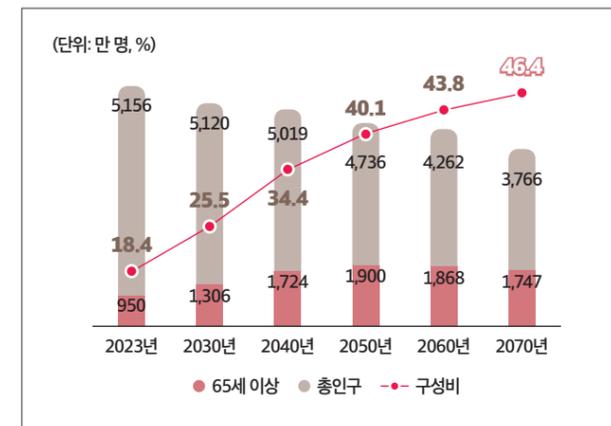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명,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1981년 66.7세 → 2001년 76.5세 → 2021년 83.6세)로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등의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 및 체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능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고도화하고 병원·시설 진입 경계선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병원 및 시설 단계 진입을 지연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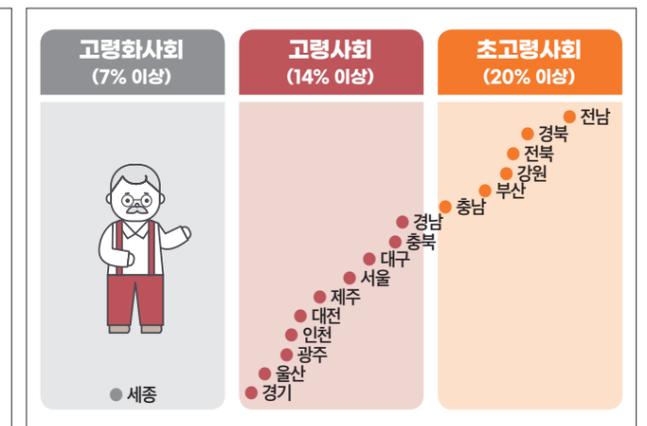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근로능력을 갖춘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인 14만 7,000개 확대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인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급되는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 4만 6,000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고령인구(65세 이상) 추계 >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



<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 예시 >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을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노인일자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법률안의 시행(2024년 11월 예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요양-간병지원체계 내실화

윤석열정부는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종합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반병원-요양병원-퇴원 후 집에서까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간병인력을 양성하면서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는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관리·감독방안 등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입원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3년 말 기준 전국 713개 의료기관에서 7만 6,968병상에서 시행 중입니다. 향후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통한 중증환자 집중관리, 간병기능 강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의료·방문간호 등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2023년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95개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대상자 기준을 완화(기존 : 1~4등급 → 개선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료·요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로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3개 지역에서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증상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관리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2개 시·군·구의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2022년 총 10개소 → 2023년 총 16개소),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집 배포 등 관련 인프라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3년 총 55만 2,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4년에는 중점돌봄군 대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월 16 → 20시간)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 가정 방문(2023.12.21)

2023년 5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 시행,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시범사업을 12개 시·군·구에서 2023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될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와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해당 법률에 기반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조례 제정, 업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돌봄서비스 강화 및 R&D 확대

화재·활동량감지기 등 ICT기기를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기준 총 23만 8,000가구에 설치된 ICT기기를 활용해 연간 총 15만 5,000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설치 가구 수를 총 30만 가구로 지속 확대(2024년 상반기)하고 웨어러블 장비·건강관리어플 개발 등을 통해 고도화된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실적>

구분	대상자 수(가구)			응급상황 등 조치(건)			
	합계	노인	장애인	합계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미감지
2022년	173,842	164,796	9,046	163,268	17,950	6,265	147,558
2023년	238,806	227,328	11,478	155,373	17,954	6,836	130,583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2년 참여기관 88개소, 등록인원 4만 7,068명에서 2023년 기준 141개소, 8만 2,095명으로 서비스 지역과 대상이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모형 고도화,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 및 등록자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초고령사회로 인해 가중될 부양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간병·건강·요양·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0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모급여(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1세 35만 원 → 월 50만 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또한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동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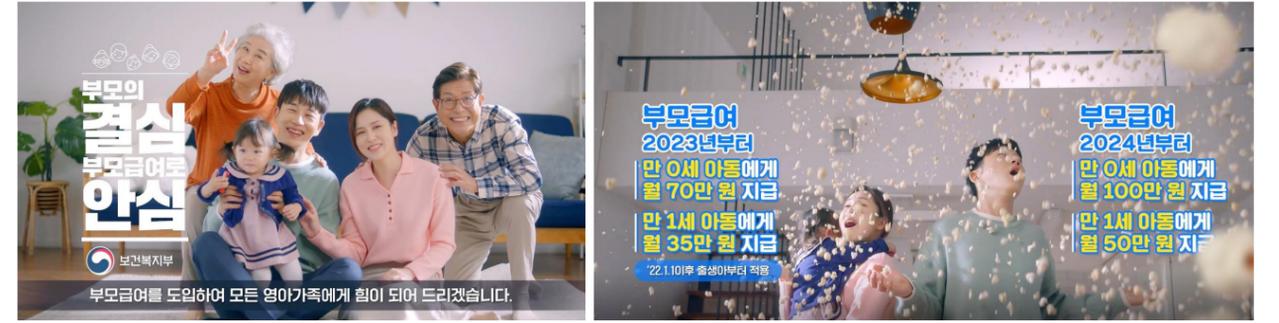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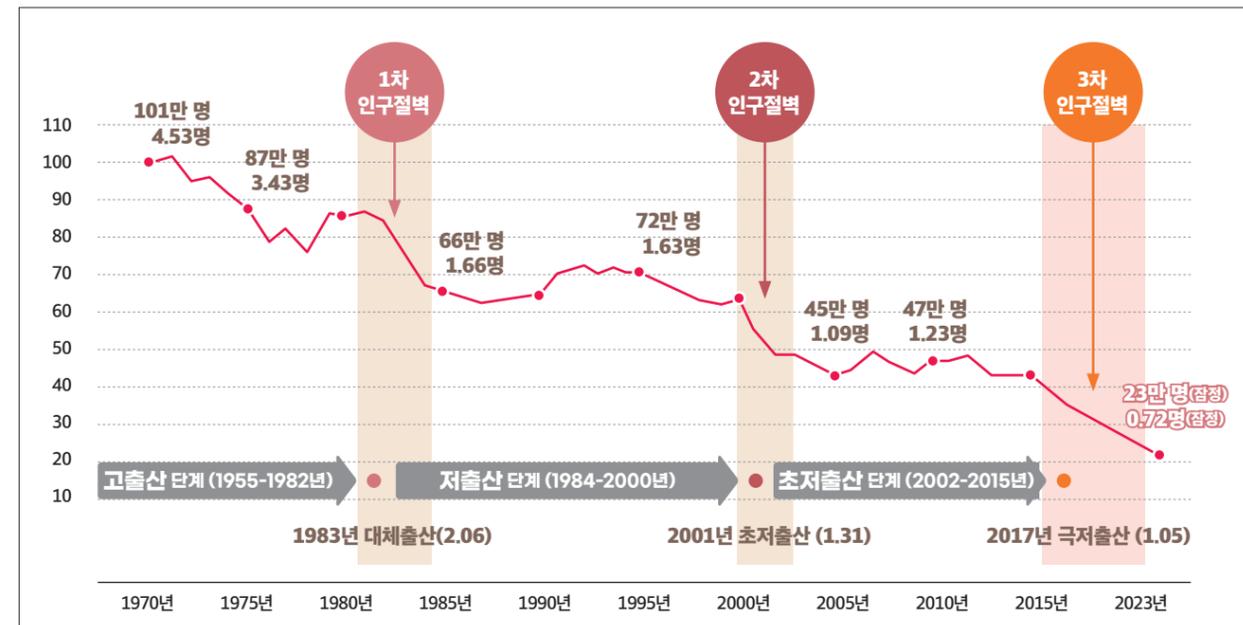
지난 2월에 발표된 2023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잠정), 2018년 이후 계속 1명 미만을 지속해 유례없이 낮은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 ▲임산부·신생아 건강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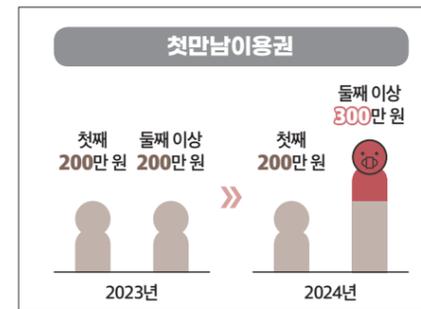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확대를 통한 출산·양육부담 경감

윤석열정부는 아동의 출산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2023년

<합계출산율>



<첫만남이용권>



에 도입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2023년 12월 기준 약 35만 명의 아동에게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2023년도 200만 원). 앞으로도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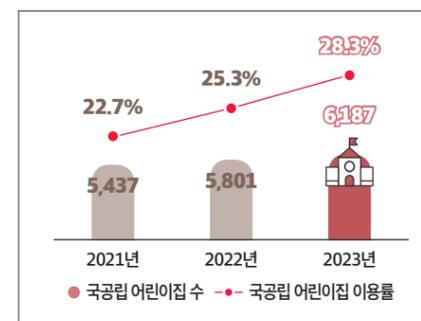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출생아수 감소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걱정을 덜고 영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 기준 1,000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315개 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수 : (2020년) 681개 반 → (2021년) 857개 반 → (2023년) 1,000개 반
-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 수 : (2020년) 1만 187명 → (2021년) 1만 434명 → (2023년) 2만 6,439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3년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3.0%p(2022년 25.3% → 2023년 28.3%)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품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1자녀		2자녀 (2024년 신설)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나	120% 이하	60%	30%	
다	150% 이하	20%	15%	
라	150% 초과	-	-	

가정 및 거주지 인근에서의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2023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지역아동센터 4,23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에서 약 25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하교 및 퇴근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운영시간을 오후 2~7시에서 오후 1~8시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와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2023년 2월)하고, 법안 발의 등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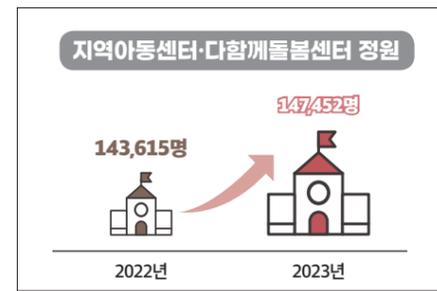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 도입 및 지원 소득 기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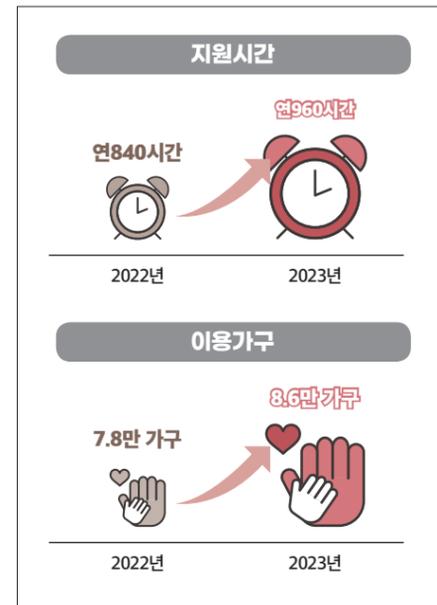
초산연령 상승(2013년 30.7세 → 2023년 33.0세), 고령산모(35세 이상) 비중 증가(2013년 20.2% → 2023년 36.3%) 등으로 난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다둥이 가정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2023년 7월 27일)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게 됐으며 2024년 2월부터는 건강보험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

<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현장의 목소리”
(2023년 5월 18일) 자연분만 네쌍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의견청취
(2023년 5월 25일) 난임·다둥이 임신부 및 전문가 정책 간담회
“결혼이 늦어지고, 난임인구가 증가해 계획 단계에서 내 가임력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지원 등이 필요함.”
(1차) 2023년 5월 19일, (2차) 2023년 6월 2일 난임 지원 관련 복지부·시·도 간담회



네쌍둥이 출산 가정 방문 및 의견청취(2023.5.18)



난임·다둥이 임신부 정책 간담회(2023.5.25)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23.7.27.)

저출산 현행	난임시술 신청자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생아 수 24.9만명 합계출산율 0.78명	2.3만명 (총 출생아의 9.3%)	1.4만명 (총 출생아의 5.4%)

아이 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에 국가의 친목적인 지원 필요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단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지금은 10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앞으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단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이상
지금은 1명, 5~20일	2명, 10~20일	2명, 10~20일
앞으로는 1명, 5~20일	최대 2명, 10~20일	태아 수에 맞춰 최장 40일
- 난임시술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지금은	앞으로
(8개 시도) 중위소득 180% 적용 (9개 시도) 소득 수준 무관 지원	'24년부터 8개 시도 소득기준 폐지 권역 어디거나 소득수준 상관 없이 시술비 지원
- 임신 준비 가임력 검진비 지원**
병동 남자 사육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100만원, 2회)
-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년 4개월
앞으로는 소득기준 철폐('24년)	2년('24년), 예외기간 연장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4년 2월~)

체외수정	개선 전(~2024년 1월)		개선 후(2024년 2월~)	
	신선배아	동결배아	체외수정 (신선·동결 배아 통합)	인공수정
신선배아	9회	7회	20회 (+4회)	5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고 시술 횟수도 총 21회(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에서 총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설·추진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까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지속적인 난임 지원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유령아동’ 예방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및 위기 임신부 지원·보호출산제 시행

윤석열정부는 20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들이 원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의무설치 확대, 기존 시내버스 등 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등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4만 명으로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장애인 구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의료·주거·고용 등 전통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해 ①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며 ②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③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선택권 강화, 소득·고용지원, 건강권 보장 및 돌봄 내실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한 후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8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모의적용 결과를 토대로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의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본격 도입해 장애인의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2024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횟수를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확대했습니다.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제2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1기 시범사



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연계되는 위기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에 임신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 1,870명(2023년 12월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했습니다. 학대 발생 가정의 기능회복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2022년 1,000가정에서 2024년 2,400가정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명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이 태어나면 그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을 돕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양육의 부담은 덜어주어 촘촘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이 커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에 비해 참여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사업 참여 병의원도 15개에서 39개 기관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 연 지정받도록 2023년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30개소에서 11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2023년 구강보건법을 개정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2023년 말 14개소에서 2027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을 통해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9만 7,363명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10여 종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발 보조기 급여 신설, 전동휠체어 급여 기준액 인상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품목을 36개에서 42개로 늘리고 9개 품목의 지원기준액을 인상했으며 교부기준을 연간 1인 1품목에서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1인 최대 3개 품목까지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의료 인프라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23년과 2024년 각각 5.1%, 3.6% 인상하고, 부가급여액은 2024년에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 인상해 최대 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도 2022년 4만 원에서 2023년 6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4년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22년 대비 4,000명이 늘어난 3만 1,54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 보조 등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유형을 개발해 총 45종의 직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11개소(근로사업장 69개, 보호작업장 706개,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를 운영해 2만 1,225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 비율을 '1% 이상'에서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물 생산시설로 2023년 28개를 신규 지정해 현재 790개의 시설이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 장애인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지털훈련센터 신설·부설·전환을 통해 2년간 4개소를 확충, 현재 6개소의 디지털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유형·정도 및 IT 기업수요 등을 고려한 장애인 디지털훈련 적

합 신규 6개 훈련직종을 운영해 2022년 91명, 2023년 194명의 훈련생이 IT 수준별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향후 디지털훈련센터를 확충하고 IT 훈련수요가 있는 사업체와 협업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4차 산업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30개 지자체가 참여해 장애인의 자립의사를 토대로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 등)를 연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연금과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는 등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치료·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돌보기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2023년 4월 시범 도입하고 전국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3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24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자·타해 등 심한 도전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국비 예산 722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24시간 개별(340명), 주간 개별(500명), 주간 그룹(1,500명)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료지원, 행동문제치료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022년 10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대했으며,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등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2022년 6만 9,000명에서 2023년 7만 9,0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안전강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2022년 5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해 50㎡이상인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편의

- 1
- 2
- 3
- 4
- 5
- 6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2만 4,000명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 조성을 위해 교정시설의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 했고, 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근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고립·은둔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와 함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들은 차별과 편견으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 정신건강 상담(청소년상담 1388) : (2018년) 15만 건 → (2023년) 26만 건
- 사회적 고립 청소년(13~18세) 비율 : (2023년) 5.2%
- 2022년 한부모가족 149만 가구, 다문화가족 39만 9,000가구(2022년 인구총조사)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 과밀수용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3년 말 기준 250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89%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돼 연관 산업육성, 동물 생명·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신속 발굴 및 지원 내실화,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조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년 3월)해 학교를 그만 둔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동의 없이 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대상을 의무교육(초·중)단계에서 고등학교단계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2년 220개소 → 2024년 222개소)와 전용공간(2022년 44개소 → 2024년 59개소)을 확대해 학교를 그만 둔 후에도 학업과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검진 항목 확대(17개 → 26개) 등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했습니다.

성을 증진했습니다.

2022년 7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에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12월 편의시설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 및 출입구(문)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24년 1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해 민법상 가족 모두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장애인 주차표지증 발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년) 수립 등에 활용해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 재난안전 가이드 5종(이동, 계단이동 등)을 고도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동영상 제작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마을 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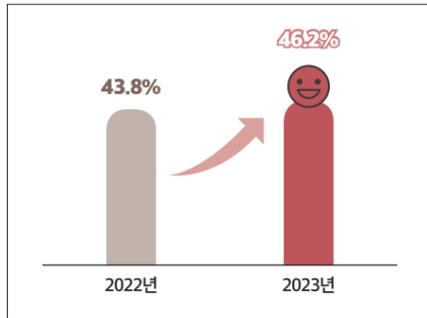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간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운영 및 광역 이동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했으며, 기존에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장애인콜택시를 1대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장애인콜택시를 1대씩 확보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창구(One-number, 앱)를 통해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도록 2025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이동편의시설 현황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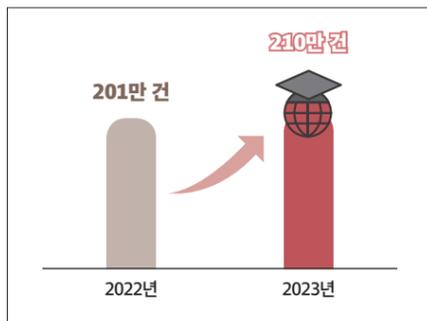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장애와 비장애 간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



< 서비스 지원 건수 >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등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2023년~) 전담인력(105명)을 신규로 배치(2024년)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신규 오픈(2023년 6월)과 대국민 포털 구축(2024년 5월 오픈 예정)을 통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위기청소년종합지원체계가 마련됐으며,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했습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대상 및 기간을 확대*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3년 10월)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구체적 근거를 신설해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지원 건수가 2022년 410만 건에서 2023년 491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자립지원수당]
대상 : (기존) 쉼터 퇴소 청소년 → (확대) 쉼터 퇴소 및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
기간 : (기존) 최대 3년 → (확대) 최대 5년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우리사회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면서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주거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상향(중위소득 52% 이하 → 63% 이하), 지원 단가를 확대(월 20만 원 → 21만 원)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교 재학 자녀(22세)까지 확대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월 35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지원 소득기준을 상향(중위소득 60% 이하 → 65% 이하)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 : (2021년) 18만 8,000명 → (2023년) 21만 2,000명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8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금액을 하향(5,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상)하고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추가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상향(중위소득 50% 이하 → 75% 이하)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양육비 이행률이 상승했습니다.

* 양육비 이행률 : (2021년) 38.3% → (2023년) 42.8%

특히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권이 있어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을 발표(2024년 3월)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한부모 시설 유형과 기능을 개편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했으며 일시지원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모는 부자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춰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했습니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통한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을 확대(2022년 12개소 → 2023년 36개소(11만 8,577명))했고 2024년에는 1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대상별 특화사업을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통합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상향(중위소득 60% → 63%)하고 자녀 1인당 지원금을 확대(월 20만 원 → 25만 원)하는 등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교육을 제공(2023년 16만 9,000여 명)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2023년 49만여 명)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가족센터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후 기초학습(읽기·쓰기·셈하기 등)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이를 지속 확대했습니다.

* 기초학습 지원 (2022년) 90개소 → (2023년) 138개소 → (2024년) 168개소
진로설계 지원 (2022년) 78개소 → (2023년) 113개소 → (2024년) 143개소

아울러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13만 9,000명)에게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2024년부터는 이중언어를 직접 학습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을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

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습기회를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독서실 이용, 교재비 등)를 2024년 중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교정시설 과밀·노후화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 처우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정시설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으로 수용정원 600명, 2023년 1월 거창구치소 준공 및 2023년 11월 대구교도소 이전을 통해 수용정원 660명 등 총 1,260명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의 신축 및 창원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의 이전·현대화, 울산구치소 등 7개 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8년 수용정원을 5만 9,265명으로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그간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정보를 정부 기관 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어 범죄기록이나 세금 납부 여부 등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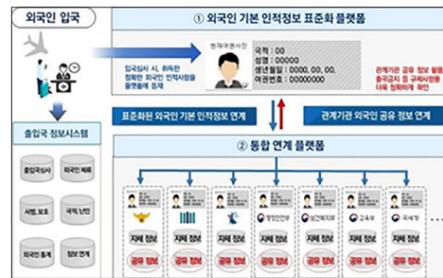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1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범정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연계·관리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류 외국인에게는 필요한 보건·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표준화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해 평가·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



년 9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으로 3개 (통합상태, 통합촉진, 통합기반) 차원 및 16개 지표로 구성(2021년 법무부 연구용역)

2024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 수립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성과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동물복지, 반려동물 산업육성 등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2021년 대비 78.4%(2021년 88억 원 → 2023년 247억 원)로 대폭 증액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인과 국민들의 동물보호 정책 요구에 맞는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의료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비율 조정,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2023년 신규, 2개소) 등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환기·소음·악취방지 시설 설치, 운동장 조성 등) 지원비율 조정
 - (2023년) 국비 20%, 용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2024년) 국비 20%, 용자 20%, 지방비 50%, 자부담 10%

또한 동물보호 및 복지·산업육성 업무를 각각 전담 수행하도록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동물학대·개물림 사고 등 증가하는 동물보호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동물보호업무 담당 인력을 확충(2021년 759명 → 2022년 812명)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즉시 구성(2024년 1월 22일)해 정부지원 및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개 식용 종식 국가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에 방적 정책 확대 및 사후보호 조치를 실질화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표(2022년 12월 6일)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기존 계획과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제3차(2025~2029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One-Welfare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후속 입법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원년인 2023년도에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고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2022년 산업현장에서 사고 사망만인율은 0.43‰로 OECD 평균인 0.29‰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사고 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해 우리나라를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했습니다.

로드맵 과제 이행의 원년인 2023년에는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정책 기조 하에 산재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존의 처벌과 감독 중심의 타율적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보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

2022년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로드맵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고 근로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확산을 위해 전국 설명회(7개월간 166회), 업종·규모별 위험성평가 안내서 7종의 제작·배포, 고위험요인 정보 공개, 위험성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2019년 33.8%에 불과했던 위험성평가 실시율이 2023년에는 71.8%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부터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신설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중심으

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주제를 정해 이를 중점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도 매월 2회씩 운영해 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국 39개 지역에 900여 개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해 안전 메시지를 전파하고 지역 기업 및 축제 등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안전문화 홍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가입 가능한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일반국민 등 가입자 약 5만 명에게 중대재해 속보, 계절별 위험요인, 안전수칙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원인·작업환경·조직문화 등 사고를 초래한 전반적인 상황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술한 ‘중대재해 사고 백서’를 발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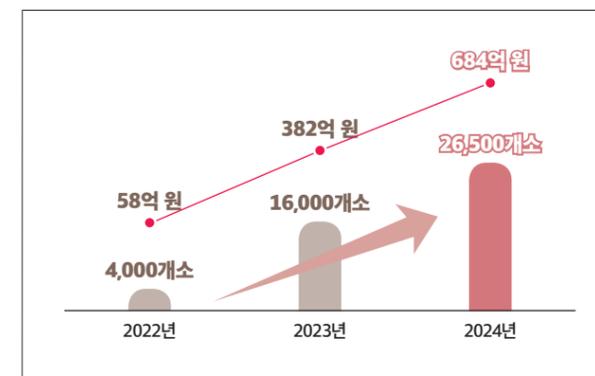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산

2023년에는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대폭 확대·시행했습니다.(2022년 4,000개소·58억 원 → 2023년 1만 6,000개소·382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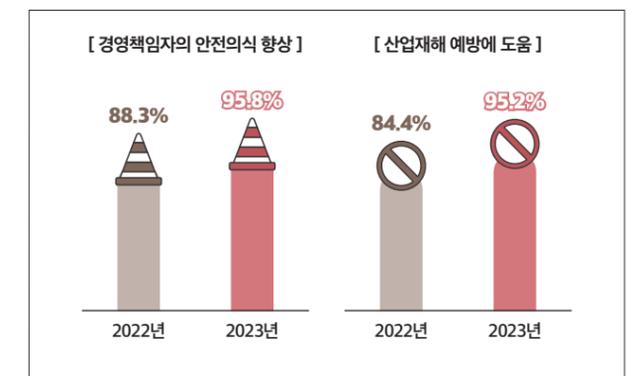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책임자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95.8%)’,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95.2%)’ 등 사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돼 2024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규모 1억 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4만회에 걸쳐 무료 기술지원을 통해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시공순위 200위 밖의 중소건설사 중 안전관리에 취약한 업체 1,077개사를 대상으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컨설팅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확대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



또한, 여름철 등 중대재해 취약 시기에는 장·차관이 수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의 위험요인 대비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는 등 건설업 맞춤형 재해예방 정책을 통해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건설업 사고 사망재해가 11.4% 감소(2022년 402명 → 2023년 356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의 안전보건 역량향상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해 대기업 329개사와 협력업체 3,844개사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컨설팅, 교육, 캠페인, 안전보건 물품 보급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정부와 대기업이 분담 지원해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 등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전년 대비 40% 감소(2022년 0.15‰ → 2023년 0.09‰)하는 성과로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신기술 기반의 산재예방 기법 확산 및 산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2023년 한 해 동안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해 위험기계 1,347대 교체 및 위험공정 2,581개 개선 등 총 2,69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노후·위험 기계·설비의 교체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인공지능 인체 감지 경보시스템 등 13개 품목을 총 1,132개 사업장에 지원해 재래식 안전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근원적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지속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륜차 배달종사자,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 사례, 사고다발구역 알림 등 ‘산재예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배달플

< 사업장에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 >

인공지능 인체감지 경보시스템

장비의 시카메라가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알림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시스템

시카메라와 제어장치를 통해 위험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해 정지

스마트형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무선통신, AI 등을 적용한 지게차 작업자, 관리자에게 충돌위험 경보

랫폼 운영사와 협업해 업무용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배달종사자의 도로교통법 준수 등 안전의식 향상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협력해 플랫폼 운영사가 종사자의 이륜차 운전면허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건강보호체계 구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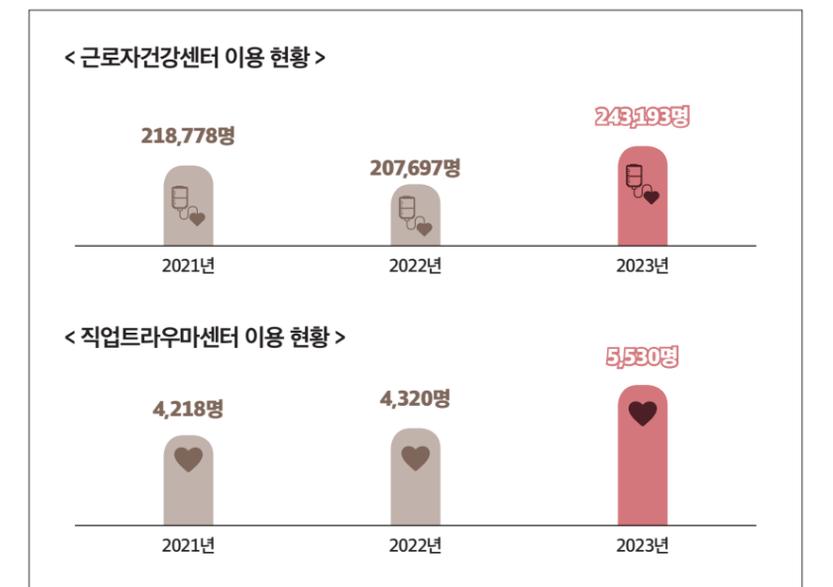
폭염 최절정기(8월)에 비상대응체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해 장·차관 등 주요 간부가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가용인력을 모두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한, 209억 원 규모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이동식에어컨 등을 긴급 지원하고, 옥외 작업 등 취약 근로자 1만 1,791명에게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는 255% 증가(2022년 9명 → 2023년 32명)했음에도 산업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자수는 전년수준을 유지(2022년 및 2023년 모두 4명)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215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1,139개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전국 6개권역·10개 종합병원을 직업병 안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2022년에 81개였던 협력병원을 111개까지 확대해 직업성질병 조기발견과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22개 포함)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 14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충격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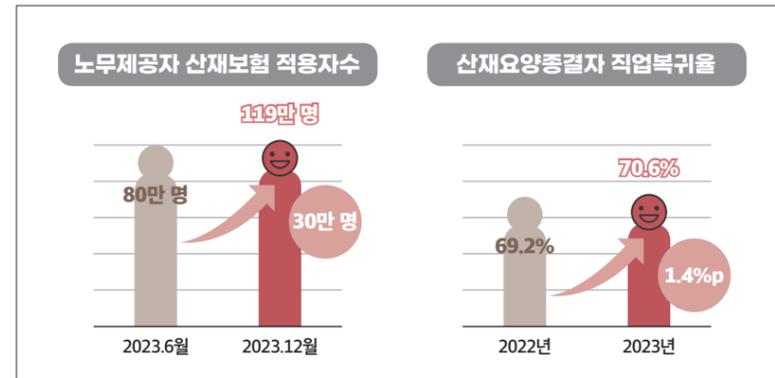


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전문상담을 제공해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2023년 7월 1일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시행을 통해 법 시행 이전 대비 약 36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80만 명 → 119만 명, 2023년 12월 기준)했습니다.

또한, 산재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등을 추천하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2023년 5만 7,917명 이용),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활성화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뒷받침 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후 규정은 현행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규정 정비와 규제 합리화 등 총 41건의 제도개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반도체·화학·건설업 등 주요 업종별로 총 14회에 걸쳐 진행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법령정비추진반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사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혁신과 규정 정비를 지속할 예정으로 업종·작업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지침 등을 마련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현장에서 수용도 높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취약근로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를 지원하는 등 노·사 불문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불투명한 채용과정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불공정채용을 집중 점검하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청년·여성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가 요구됩니다. 윤석열정부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3권과 기업의 경쟁력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의 단체협약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5월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63개의 위법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추진해 2023년 10월, 63개 모든 단체협약이 노사 합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국정과제이자 노동개혁 핵심과제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2023년 5월 22일, 윤재옥 의원 발의) 중에 있습니다. <공정채용법>에는 불공정채용 근절을 위해 채용강요·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강화하는 한편, 구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채용결과 등 채용과정 상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및 면접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건전한 채용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3년 상·하반기 2회 1,2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채용행위를 집중 점검해 행정조치(과태료 25건, 시정명령 25건, 개선권고 418건)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불법·부당행위를 지도하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및 온라인 구인광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시정조치 했습니다.

능력중심 공정채용이 문화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스마트물류, 3D프린터 개발 등 채용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중심 채용모델' 10개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도 공정채용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민간·공공기관 22개소를 발굴해 포상하고, 공감채용 우수사례를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채용 가이드북(핸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채용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취업과정에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채용행위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채용문화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공정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했고, 특히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 IT·플랫폼·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노동관계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437명)·신용제재(746명)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을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고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했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사업'을 통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약 12만 225명의 플랫폼종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현장의 노무제공자들이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분쟁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및 가전제품 방문점검·방문판매 직종의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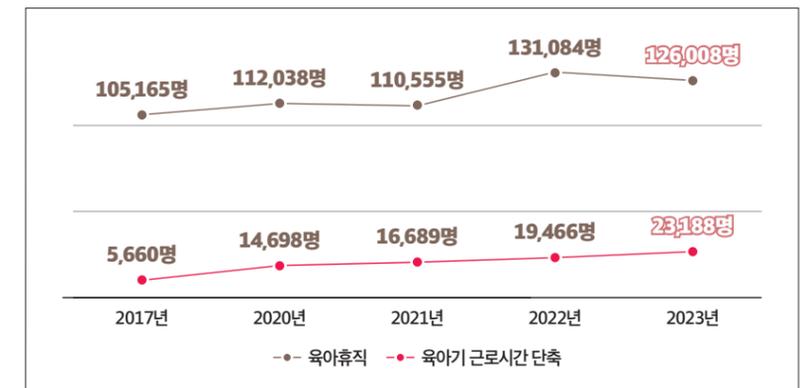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쪼개기·반복계약 및 기타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금융업 14개소, 근로자 1,215명에 대한 약 22억 원 규모의 불합리한 차별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진단 및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350개 사업장의 근로자 2만 576명, 2023년 356개 사업장의 근로자 1만 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으며 특히 임금의 경우 2022년 1인당 연간 91만 5,000원, 2023년 1인당 연간 81만 2,000원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8일 사업장이 스스로 차별 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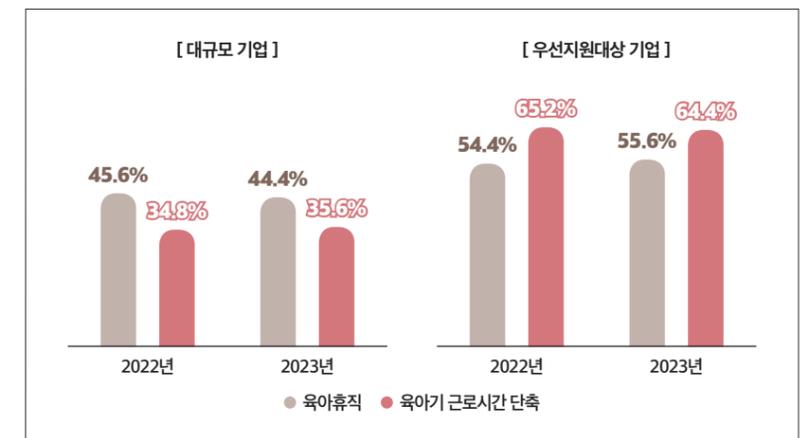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한 결과, 출생아 수 감소(△7.7%, 잠정)에도 2023년 육아휴직자는 소폭 감소(△3.9%)한 12만 6,008명으로 나타나 출생아수 감소 대비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자 수는 2만 3,188명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3,722명, 19.1%)했습니다. 특히 2023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비중은 64.4%로 중소기업에서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접 구제 신청하는 시정제도를 시행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연도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규모>



<기업규모별·제도별 사용 비중>



여성(15~64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 2,000명이 증가했고, 여성고용률도 61.4%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노사분규가 빈발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67개소를 '취약·핵심 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분규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 10일~2023년 12월 31일) 노사분규건수(331건)는 이전 정부 평균 330건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실일수(58만 4,853일)가 대폭 감소해 이전 정부 평균 156만 7,381일의 37.3%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계공시를 원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양대 총연합단체가 회계공시에 참여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정(1953년)이후 70년 만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리한 재정정보 접근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의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5.10~익년 12.31) 노사관계 지표 >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노사분규건수(건)	721	211	174	213	331
근로손실일수(일)	2,390,218	1,261,129	1,265,758	1,352,419	584,853

< 2023년도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공시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전체(A)	공시(B)	공시율(B/A)
합계	739	675	91.3%
한국노총	285	268	94.0%
민주노총	331	312	94.3%
미기맹 등	123	95	77.2%

특히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민 세금을 통한 노조 활동 지원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대상 전문가 회계 컨설팅, 회계감사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실태조사와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했으며,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 및 운영비원조 관련 운영현황과 위법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2015년 이후 약 9년 만에 재개했으며,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54.0%)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윤석열정부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조선업에서 이루어낸 상생협약에 이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업종·지역 단위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는 지난 70여년 동안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급변하는 산업·노동 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고용형태·세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이중구조가 여전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勞使)와 노노(勞勞) 간에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할 모습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제를 2022년 12월 권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해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 이후,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었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11월 13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정책 방향(수요가 있는 업종·직종에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 집중)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은 노사법치의 밑바탕을 다지는 중요한 과제로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03개소 대해 사상 최초로 기획

감독을 실시했고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 3,000만 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잦은 업종 중심으로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99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고 총 5,206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사법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근로감독을 통해 일한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 1,600개소, 2023년 1,355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근무제 개편, 임금체계 개선 등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인프라,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유연근무 도입·활용 방법을 모르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매년 400개소)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정보보안·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했으며, 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모전 등을 실시했고, 기업 스스로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경우 '근무혁신 우수기업'(매년 100개소 내외)으로 선정해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및 원하청 노사협의회 확산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를 위해 설치 절차, 운영 방법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10만 부)하는 등 제도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노사협의회 설치율이 2021년 75%에서 2023년 83%대로 크게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 설치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노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대책의 결실로 2022년 11월 9일 조선5사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 부처(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울산·경남·전남) 등이 참여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됐고 조선업 원·하청 및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원청 5사는 모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2024년 상반기 내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 복지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원하청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성금 제도개선,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타업종으로의 상생모델 확산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9월 26일 석유화학산업에서, 2023년 11월 20일 자동차산업에서 협력사들의 인력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기업이 2·3차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재원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원·하청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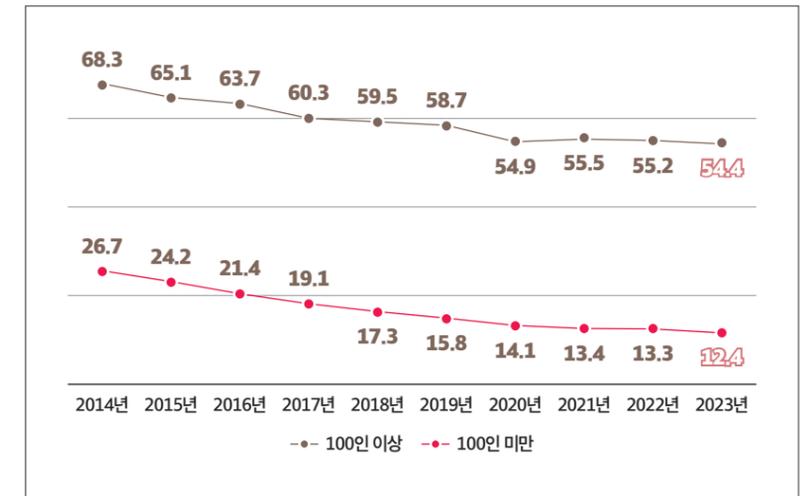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에 발표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9월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 중소기업을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운영 비중은 54.4%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65.1%로, 연공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은 일본(2.27배)보다 큼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컨설팅, 정보 제공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 사업체 규모별 호봉제 운영 현황(%) >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임금·평가체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현장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 통계를 확대·공표했습니다.

* 컨설팅 지원 현황: (2020년) 659건 → (2021년) 696건 → (2022년) 1,251건 → (2023년) 1,346건
직종별 임금 통계 확대: <기준> 124종 → <개선> 183종

또한, 정부는 임금을 매개로 불공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2023년 2월 발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발굴 노력과 현장 지원을 확대해 공정한 임금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인 임금체계 개선 노력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 조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윤석열정부의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267개소를 ‘취약·핵심사업장’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했고,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사전·본·사후 조정 등과도 연계해 실효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등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갈등 예방·해결에 주력했습니다. 그간의 일회적·사후적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예방적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고, 주요 장기 갈등 사업장도 합의가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완성차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으며, 조선·철도 등 국민생활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들도 단기간 파업이 있기도 했으나 비교적 빠르게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기관 간 협업으로 고용-복지-금융서비스 연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일자리사업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 등 노동시장 핵심 현안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인 23만 4,000개로 나타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화됐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시장 내 취업 취약계층,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구직자·구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나 그간 코로나19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 지급 업무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운영되면서 고용서비스 기능이 다소 약화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하에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지원에서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개인·기업 맞춤형 취업·채용서비스 제공,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을 개편해 민간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 구직자에게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6개 고용복지*센터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그간 10~15분에 불과했던 상담시간을 평균 50분 이상으로 끌어올려 선진국(평균 40~60분)수준의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



맞춤형·밀착 고용서비스(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자 소감

힘든 마음을 이해해 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진심으로 도와준 담당자에게 감사합니다. 꾸준히 기술을 익혀 금융거래도 맘껏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께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의 높은 만족도(4.32점/5점 만점)를 고려해 2023년 3월 28일부터 전국 24개 고용복지+센터로 조기 확대하고, 2023년 8월 21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1:1 개인상담과 잡케어를 활용한 경력설계 서비스에 만족해 2023년 참여자 만족도자 4.64점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정책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하고,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48개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재취업 패키지’사업으로 1만 2,101명에게 심층상담을 실시해 구직자 니즈를 파악하고 9,377명에게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3,033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재직 여성에게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기관을 확대(75 → 80개소)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IT·바이오 등 유망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장년층과 여성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구인애로유형별로 ‘진단-컨설팅-맞춤형 채용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9개 고용복지+센터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220개 기업이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참여기업의 81.8%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2023년 3월 28일부터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했고 2023년 8월 21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근로환경, 근무조건 등 구인 애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3,461건)를 제공했고 참여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기업 여건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도 4.18점에서 2023년도 4.44점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2022년 8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내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해 채용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일시적으로 구인난이 심화된 조선업 서비스업 등



맞춤형·밀착 고용서비스(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기업 소감

사업 확장으로 일손이 모자라고 채용에 어려움이 컸는데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로 채용, 직업훈련부터 위험성 평가까지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신규자 직무능력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을 대상으로 집중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 12월까지 총 6만 398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채용 수요를 신속히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산업 권역 단위의 특화 채용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새로이 구축했습니다. 2023년 조신·반도체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해 고용복지+센터-산업별 협회-기업 간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산업 현장 인력수요 모니터링 등으로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덜고 더 나아가 근로여건을 개선해 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그간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여러 사이트를 오가야 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서식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인 ‘고용24’를 구축해 2024년 3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직자, 구인기업 모두 ‘고용24’를 통해 한 곳에서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간 윤석열정부도 다양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취업자 수는 2023년 7만 5,546명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고, 구직자의 보유 직무역량을 분석 후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지원하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 잡케어’ 이용자도 2023년 8만 7,749명으로 전년 대비 179.4%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디지털 수요를 반영해 구인·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세계 일류 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2023년 1월 28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4개소)했고, 2024년에는 2개소를 추

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합네트워크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팀,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협력해 구인기업·구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복지서비스 우수 연계 사례를 발굴·공유해 고용복지*센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서민금융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유관기관의 고용복지*센터 입주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밀착 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단계별 서비스(생계지원 → 취업의욕 향상 → 취업지원)를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여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곳에서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강화군, 고성군, 당진시 등 30개 지역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고용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방문 민원이 많은 실업급여 업무를 모든 중형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확대해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의 구인으로 해소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및 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2022년 6월, 2023년 7월)해,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저성과·코로나19 대응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의 사업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일자리사업을 효율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협업체역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사업 재편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앙-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

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빈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내 고용 및 산업 등의 지표를 분석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월에 시범구축했습니다. 이후 지도에 지역 일자리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역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빈일자리 업종 특성에 맞게 장려금·직업훈련 등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의 지원 요건이나 수준을 우대(PLUS)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2023년 348억 원 규모로 신설했으며, 지역 빈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100억 원)’,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41억 원)’ 사업도 2024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개편을 통해 빈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해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 구직자와 구인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간담회(2023년 9월 22일)

“중앙부처 사업은 대부분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주)

- 1
- 2
- 3
- 4
- 5
- 6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노무제공자·예술인 177만 명, 누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하며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지원으로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 강화, 2차 안전망으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고용불안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최소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고자 지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 10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법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상태의 영향을 최초로 조사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내연차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024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맞춤형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이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산업·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직무전환, 재취업 지원 및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컨설팅을 2023년 1,514건 지원했으며 산업 구조전환에 대응한 특화훈련 등을 통해 3만 1,000

명의 재직자 등의 직무전환을 지원했습니다.

산업·일자리 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산업·일자리 전환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고용상황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자동차 부품제조업 대상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제작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기업이나 근로자에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체계적 대응해 나겠습니다.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조선업·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고용현황과 특징을 파악해 세분화된 고용통계 정보 제공으로 고용불안 최소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 조사대상을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해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 인력수요 동향 파악이 가능하게 됐으며 2023년 산업 소분류별 고용통계를 생산해 세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파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통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상황, 노동이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용안전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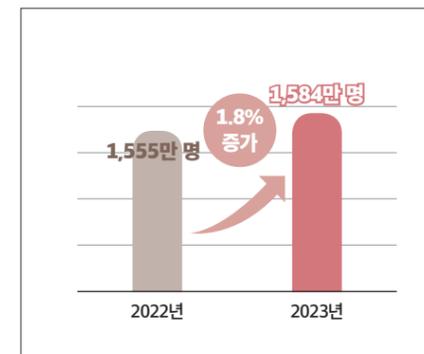
윤석열정부는 산업전환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면서 국민계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19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무제공자·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보험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임신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예술인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2022년 12월),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2023년 1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2023년 말까지 노무제공자 155만 명(2021년말 대비 185.9%↑, 누계 기준), 예술인 21만 명(2021년말 대비 98.4%↑, 누계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국세·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누락자 153만 9,000명(2022년 94만 7,000명, 2023년 59만 2,000명)을 발굴·가입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자영업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영위하던 5,065명이 새로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2023년 말 기준) >



또한, 2024년 7월부터는 농업 경영주 및 5인 미만(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농림어업분야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10인 미만)해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97만 명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월 보수 220만 원 미만 → (2022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 (2023년)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기구직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등에게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취업취약계층을 촘촘히 폭넓게 보호하고,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에는 청년 지원요건을 재산 5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기존 4억 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으로 영구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복지수급자, 서민금융이용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2023년 2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5월 서민금융진흥원, 8월 경기남부경찰청, 12월 보건복지부 등 40개 기관과의 MOU로 복지·금융 서비스 수혜자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급 하고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청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청년 연령 산정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1인 가구 중위소득 60% 한도, 2024년 133만 7,000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해 45만 7,000명에게 521만 건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했고, 2023년도 종료자 취업률도 58.6%(2024년 1월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5.5%p 상승했습니다.

한편,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도입 17년만인 2022년 기준 적립금이 336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는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

직연금 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했습니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퇴직근로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3년 기준 사업장은 1만 3,685개소, 근로자는 6만 5,123명, 적립금은 4,734억 원에 이르고 있고 기금 운용수익률은 6.97%를 기록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도 한시사업 종료·사업규모 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022년 7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발맞춰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간소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했습니다.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잡케어 시범 적용)함으로써 조기 탈수급과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63만 명, 2023년 167만 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해 고령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재취업지원 노력이 함께 결실을 맺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대를 기록했습니다.

* 수급자 재취업률(%): (2016년) 33.1 → (2017년) 29.9 → (2018년) 28.9 → (2019년) 25.8 → (2020년) 26.8 → (2021년) 26.9 → (2022년) 28.0 → (2023년) 30.3%

한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은 철저히 적발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인식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의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수요에 맞게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직무능력은행제를 새롭게 도입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애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신산업·신기술분야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은 모든 국민을 안정된 삶(고용)으로 연결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디지털·저탄소 혁명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급변하고 있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해 지원하며, 특히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이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신산업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맞춰 훈련방식·콘텐츠에도 이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공공 온라인 훈련플랫폼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했고(2023년 12월), 민간 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훈련방식을 확대 보급하는(2022년 372개소 → 2023년 653개소) 등 언제 어디서나 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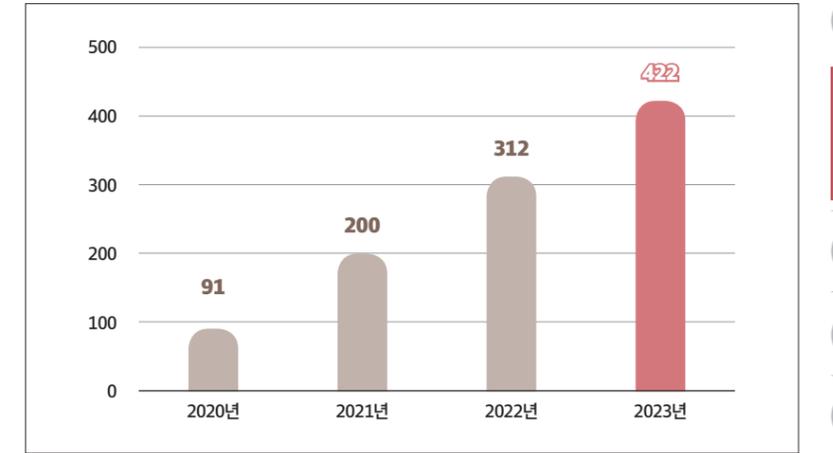
또한, 기업(OJT)과 학교(Off-JT)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 분야를 첨단산업까지 확대하고(2023년 3월), 산업분야별로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표준화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도출하는 산업별 역량체계(SQF)을 개발·확산하는 등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터학습 지원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 맞춤형으로 재구조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반적으로 늘리고, 생애단계별 개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기회를 지원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2020년 1월 도입된 이래, 2023년까지 421만 8,319명이 카드를 발급 받았고, 378만 7,535명이 훈련을 받는 등 대한민국 대표 직업훈련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 >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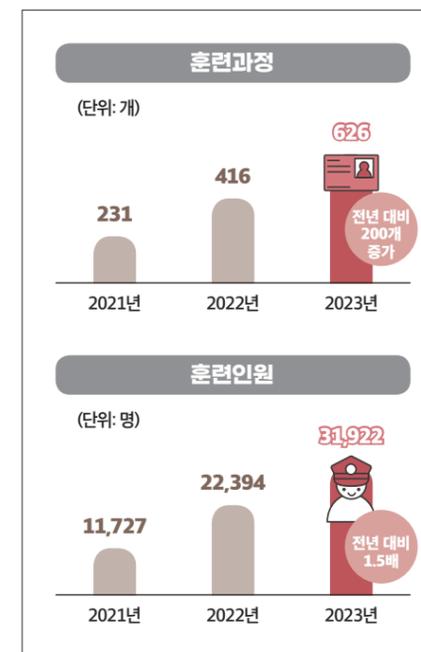
생애단계별 직업훈련을 살펴보면, 우선 '재학단계'에서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자동차정비, 미용 등 49개 직종에서 568개 훈련과정을 선정했고 2022~2023년간 총 1만 2,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4년에는 신기술과정을 새롭게 공급해 고등학교 때부터 첨단·디지털 직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직단계'에서는 KT·삼성 등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2022년 2만 2,000명, 2023년 3만 2,000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의 중·고급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된 심화 과정을 새롭게 신설해 운영했으며, 디지털 분야로 국한되어 있던 훈련 분야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도기업, 우수대학 등 우수한 훈련기관과 훈련생 특성에 맞춘 개별화·맞춤형 과정을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첨단산업·디지털 인재를 지속 양성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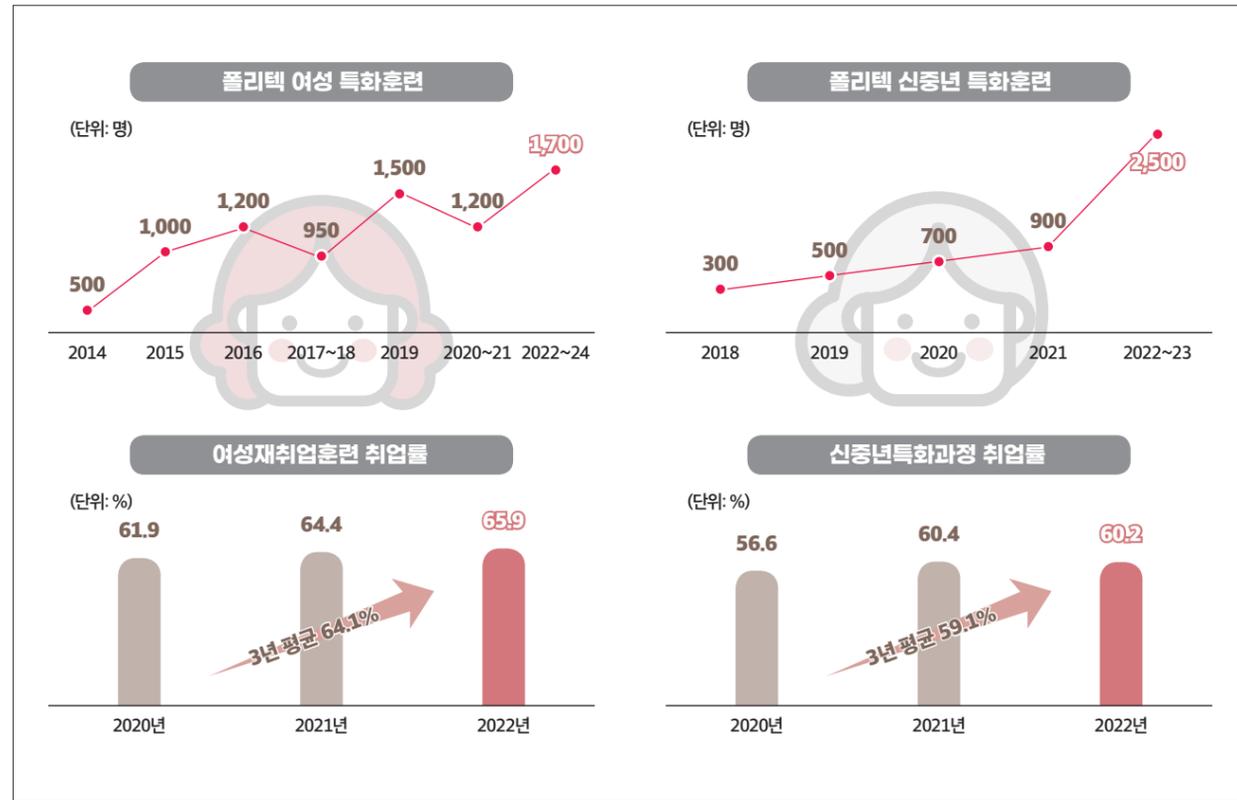
'이·전직단계'에서는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해 산업구조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의 재직자 및 실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을 돕기 위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훈련수요를 분석해 지역별 특화된 지원·육성산업을 선정했고 선정된 지원·육성산업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발굴해 2022년에는 1만 2,000명, 2023년에는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의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외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산업별 훈련수요를 반영한 특화과정을 공급했고,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해 운영기관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재직단계'에서는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재직자 등의 심층 경력

<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한 양성인원 >



<여성·신중년 맞춤형 공공훈련>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을 도입했고 총 612명의 중장년 재직자 등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집체 방식의 경력설계 컨설팅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3년에는 참여 대상을 더욱 확대(만 45세 이상 →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해 3,937명의 중장년 재직자가 1:1 심층 경력설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간 훈련기관을 통해 인력양성이 어려운 분야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공공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제공했습니다. 폴리텍 여성·신중년 특화훈련을 통해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했고,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력설계 통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두 과정 수료생 취업률이 60%를 상회하며 참여자들의 학과 선택 및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DX-아카데미 학과를 개편(2023년 2개과)했고 2024년부터 신중년의 디지털분야 직업전환 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2024년 100명).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했습니다. 2023년 1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해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2023년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이 제출한 ‘직무능력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함으로써 직무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에는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보다 많은 직무능력정보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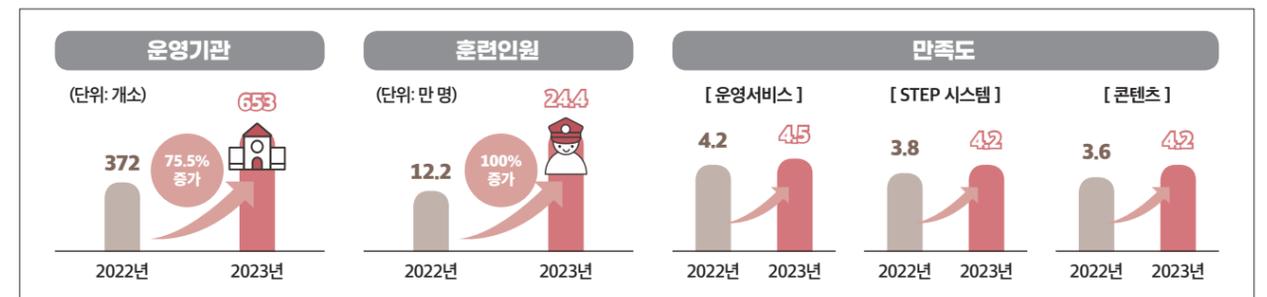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해(2023년 12월) 개인별 최적의 훈련과정 추천,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협업 학습 구현을 위한 PBT 기능 등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높은 개발 비용 등으로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중심으로 훈련콘텐츠를 개발·보급(2022년 433개, 2023년 431개)하는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시·공간 제약 없이 필요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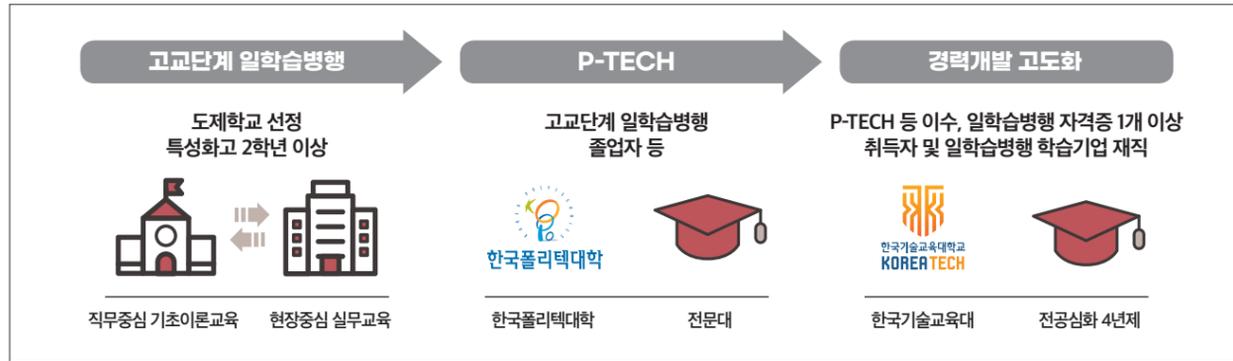
또한, 비대면 훈련 여건이 열악한 민간 훈련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확대 보급해 디지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훈련방식(플립러닝, 블랜디드러닝 등)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LMS를 활용한 원격·혼합훈련 서비스, 콘텐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첨단산업 분야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콘텐츠 6종 개발, STEP 연동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직업훈련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넥스콘테크놀로지(주), 그린자동차직업전문학교 등 8개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훈련 과정 시범운영으로 실제 훈련 현장에서의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의 효과성(교수·학습 상호작용 4.71점)도 함께

<원격·혼합훈련 관련 만족도>



<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



검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산업현장 수요 기반 이터닝, VR(가상현실)·XR(확장현실) 접목 실감형 콘텐츠 등 공공 원격훈련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STEP 인프라 기반 원격·혼합훈련 활성화와 내실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직업훈련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 등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훈련 운영·제공 방식과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윤석열정부는 현장교육(OJT)과 학교교육(Off-JT)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를 고도화해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과정(P-TECH)을 운영 중이었으나,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근로자가 기업에서 근속하며 숙련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4년제 대학 수준까지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한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4월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해, 대림대학교 등 2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개시해 10개 대학에서 98명이 훈련을 실시했고 2024년에는 10개 대학에서 25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에 집중돼 있던 일학습병행훈련을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했습니다.('첨단산업 아카데미'). 현재 첨단산업 아카데미 훈련기관에서는 4년제·전문대 정규학과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종목(반도체·바이오·SW개발 등)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89명이 훈련을 실시했으며, 2024년에는 총 19개 대학에서 400여 명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0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여주는 3대 기업 혁신훈련 확대, 중소기업을 찾아가 여건 진단, 적합한 훈련 처방 등을 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정식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상생훈련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완화,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정식 도입 등을 추진해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1974년 직업훈련의무제로 시작된 기업직업훈련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된 후 재직자 역량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과 행정부담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실제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훈련사업 참여율은 5%대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3대 기업 혁신훈련*을 도입·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훈련을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한편, 자영업자나 플랫폼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기회가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 완화, 맞춤형 훈련 도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도입

먼저, 인적자원개발(HRD) 전담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직무분석, 훈련 상담 및 훈련과정 개발, 현장훈련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을 활성화해 2022년 1,113개 기업에 대해 지원했고, 2023년에는 기업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2,188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 604개 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과정개발, 현장훈련, 현장개선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기업 모두가 '만족했다'고 응답했고, 참여기업의 96%는 '재참여의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2,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61억 원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현장훈련을 한층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여주는 혁신훈련을 도입했습니다. 행정부담 완화, 위탁훈련 자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훈련바우처인 '기업직업훈련카드'를 2022년 8월부터 시범 운영했고,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토대로 2023년 정식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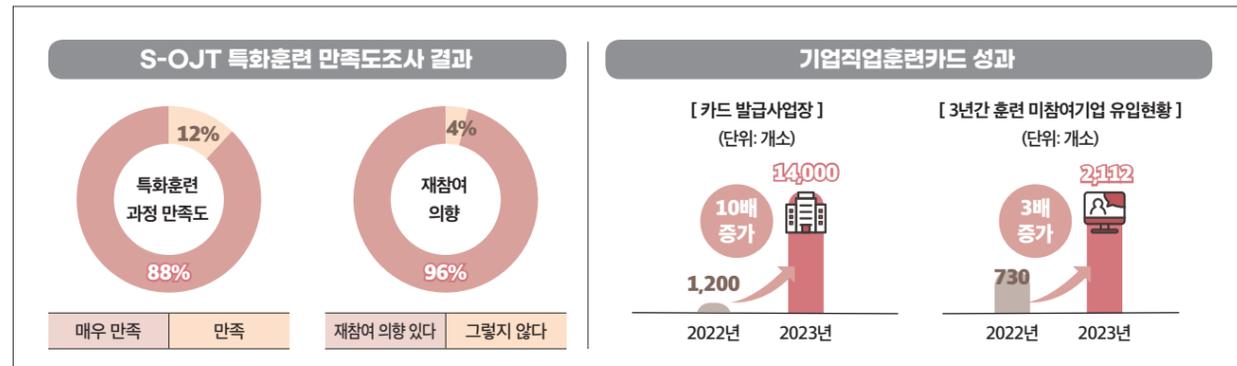
입 문턱'을 낮춤으로서 신규기업을 사업주 훈련제도에 유입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훈련에 참여하지 않던 중소기업 3,000여 개소(2022년 730개소, 2023년 2,112개소)가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훈련기관과 다양한 훈련과정 묶음(패키지)을 일괄 계약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범운영했고, 2022년 1,237개소 5만 7,848명, 2023년 1,229개소 7만 330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정식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원격훈련은 개별 훈련과정을 단위로 해 훈련생당 과정별로 80% 이상 이수해야 훈련비를 지원했다면, 패키지구독형은 훈련과정 패키지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고, 과정수료와 상관없이 기업별 최소 훈련시간을 이수하면 훈련비를 지원하므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취해 수강하는 등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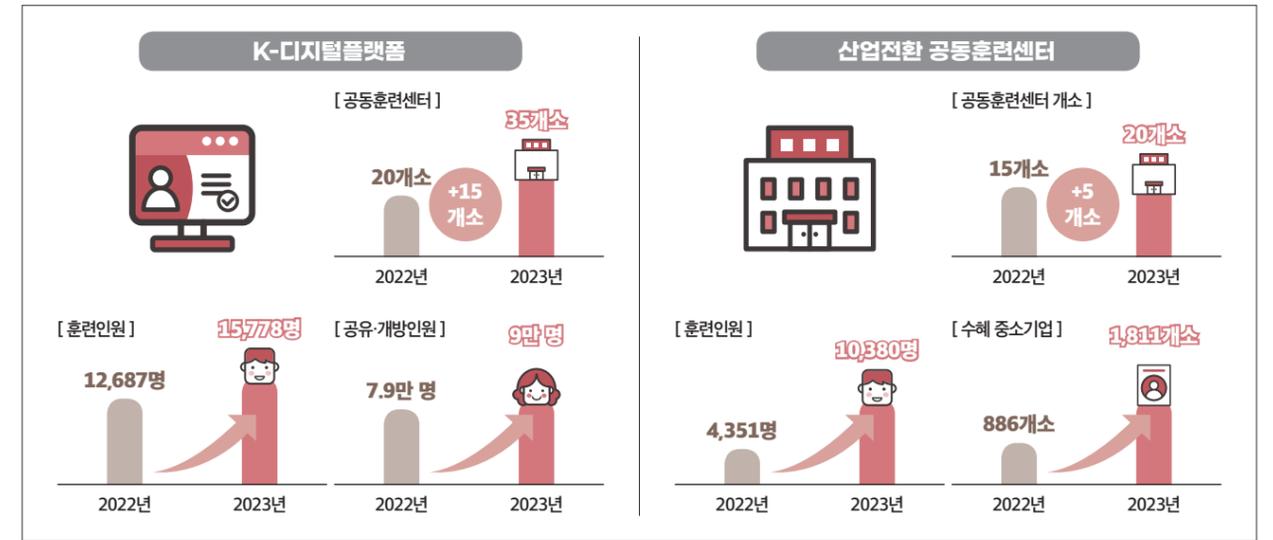
자체 또는 위탁훈련의 여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등이 주도하는 공동훈련 사업(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도 지속 확대했습니다. 디지털·첨단·산업전환 대응 등 중소기업 스스로 훈련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대기업·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시설을 공유·개방하며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의 디지털 분야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공동훈련센터 5개소를 새롭게 구축해 공동훈련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산업분야(자동차·에너지·조선·화학)의 15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22년부터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개 공동훈련센터를 신규 선정해 20개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참여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프라 기반의 공동훈련센터 외에 '콘텐츠' 기반의 공동훈련모델을 도입해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개발·운영하는 훈련프로그램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로 인정해 지원하되, 훈련이수자에 대한 역량평가 및 인증체계와 연계되는 고품질의 훈련프로그램에 대해 훈련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도 >



< 공동훈련센터 확충 >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HRD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찾아가 여건을 진단하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 훈련과정 매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주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2022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2023년에는 전담부서 설치 및 주치의 확대 배치 등을 토대로 정식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을 도입했고, 2023년부터는 동 통합지원센터를 '기업인재혁신부'로 개편, 24개 지부·지사로 확충하고 주치의도 188명으로 확대 배치했습니다(2022년 96명 배치). 그 결과 2022년 1,530개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지원받았고, 그 중 836개소는 사업주훈련, S-OJT,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9,528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6,481개소는 실제 훈련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는데 직업훈련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통합 DB를 구축하고 맞춤형 훈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훈련추천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주치의의 역량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주치의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고(2023년 10~11월), 능력개발지도사 자격보유 등 요건을 갖춘 주치의를 우선 배치하고 우선 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대·내외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훈련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치의가 훈련추천 AI를 기반으로 기업에 맞는 훈련과정을 직접 개발해 지원하고 서울, 대전 등 6개 권역을 중심으로 HR+ 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기업 HRD 성과를 교류하고 기업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 2만 6,000명이 훈련을 받았고 총 269억 원의 훈련비를 지원했고, 2023년에는 3만 1,000명이 훈련을 받고 총 303억 원의 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종사자 수가 급증했으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기회가 부족해 플랫폼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공급했습니다. 시범사업(2021년 7월~2022년 12월) 결과 4개 직종(AI·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총 9만 5,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훈련비 전액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훈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에는 연도별 정기 심사뿐만 아니라 수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2월에 진행된 1차 수시 심사 결과 3개 직종 11개 과정이 추가로 선정됐으며, 4월에 진행된 2차 수시심사 결과 2개 직종 5개 과정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 해동안 14만 명에게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으로, 기존에는 연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와 월소득 300만 원 미만 특고종사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연매출 4억 원 미만 영세자영업자와 월 소득 500만 원 미만 특고종사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

혁신 훈련기관의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훈련 실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심사를 통해 인정을 했다면, 탄력운영제를 통해 기업 단위로 훈련계획에 대한 승인을 함으로써 훈련인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훈련과정별 수수료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 훈련이수시간에 비례해 지원해 경직성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24개 기업, 3,323명, 2023년 198개 기업, 5만 741명이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훈련기관 육성 등 직업훈련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역량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개 기관을 시범 선정해 진입·운영·결과관리 등 훈련 주기별로 훈련기관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훈련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참여기관의 만족도는 4.7점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해 총 100개 기관(신규기관 50개소, 기존기관 50개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포함해 자영업자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023년 4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발표를 통해 '자유'와 '연대'의 기치하에 윤석열정부 향후 5년간의 문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으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문화예술 소비를 확대(문화예술관람률: 2021년 33.6% → 2023년 58.6%, 참여율: 2021년 2.6% → 2023년 3.7%, 교육률: 2021년 3.6% → 2023년 4.6%)하는 등 주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수요는 회복세에 있으나, 소득·지역별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출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소득별) 2019년 1.78배 → 2023년 3.32배 / (지역별) 2019년 1.18배 → 2023년 1.25배

이에 윤석열정부는 문화격차를 완화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약자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향유의 원천자원이자 우리 고유의 문화자원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4월에 발표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은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 국가'라는 비전 아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2022년 연 10만 원, 232만 명/수혜율 95% → 2024년 연 13만 원, 258만 명/90%)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제도를 신규 도입해 전국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수기집 중 '대상' 사례

"오직 문화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나의 현재 상황에서는 쓸이나 달걀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주춤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이 내가 갈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줬다."

<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접근성 증진 콘텐츠 사례 (시·청각, 발달장애인 등 대상)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2년에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497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2023년에 국·공립 박물관 담당자 대상 장애인 접근성 제고 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2023년 9월부터 장애인특화 전시학습공간 '오감'을 운영 중입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청소년 인문교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아울러, 시청각장애인 등의 공공정보 접근성과 문화누림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3년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발표 시 수어통역(436회) 및 점역(266회)을 지원하고, 영화(20편), 박물관(10개 기관) 전시 정보 등의 수어통역 영상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공공기관 요청 건 이외의 문화예술기관 등 타 기관·단체들의 수어통역·점역 수요도 반영해 지원기관과 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6070 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경력 활용을 위해 2023년 이야기 할머니(2023년 3,179명 활동)의 이야기 구연 배틀 소재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8,829개 유아기관(유아 52만여 명 수혜)에 이야기할머니를 파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확대(2023년 8월-)하는 등 사업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으로 문화시민 역량 강화 및 사회의 회복탄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도서관·박물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2022년 29만 명 → 2023년 33만 명)과 세대간 연결을 지원하는 '인생나눔교실'을 확대(2022년 4,966회 → 2023년 6,296회)했습니다. 또한 학교밖·위기청소년 약 1만 명 대상 인문프로그램(70개소)과 6,000여 명 대상 중장년 청춘문화공간(17개소)을 새롭게 운영하는 등 일상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롭거나 고립됐다고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결사회 지역거점'



'꿈의 오케스트라'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 기념 공연 (2023.5월)



'꿈의 무용단' 유네스코 공연(2023.5월)

사업을 운영해 5개 지역거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126개 프로그램에 1만 1,024명(연인원)이 참가한 결과, 사회적 연결성 정도도 개선(47.5 → 45.9, 1.6 감소)되었습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캠페인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72만 명이 참여했고, 2022년 11월에 공직 내 종교차별 근절을 위해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를 개편했습니다. 2023년 9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규정을 격상(문체부 훈령 → 국무총리 훈령(제854호))해 종교차별 신고 건에 대해 사후관리 강화 및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2월 말에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예술단' 분야를 오케스트라, 무용단에 이어 2024년 연극, 뮤지컬 등의 극단으로 확대해 전국 약 100개소를 지원하고, 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한편,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 본격 확대에 따라 전국 215개교, 381학급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대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이 디지털·친환경·무장애시설로 단계별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2023년 6월)했고, 가상국립도서관 체험관을 개관(2024년 3월)했습니다. 또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 위해 2023년 1월 건립부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를 확보해, 2023년 7월 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을 완료한 후 현재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컬처의 뿌리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한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의 연구범위를 2023년에는 바이오 천연염료, 칠보공예의 친환경 현대화 기술 개발 등으로 확대해 전통문화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통문화 분야 청년 창업기업 75개사를 지원해 평균 110%의 매출 성장을 이루어냈고, 2024년에는 지원대상을 창업 4~7년차까지 확대하고, 전통문화 기업(연 40여 개사)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사업고도화 등의 기업수요를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통문화혁신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지원 중입니다.

또한 한류 문화예술인(2022년 김연아, 2023년 배우 수지)과 협업한 한복 화보는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어 한국 고유의 전통의 미를 알렸고, 이탈리아(밀라노, 베네치아, 브레시아 2023년 4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23년 9월)에서 개최된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은 5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이 방문해 전통문화의 매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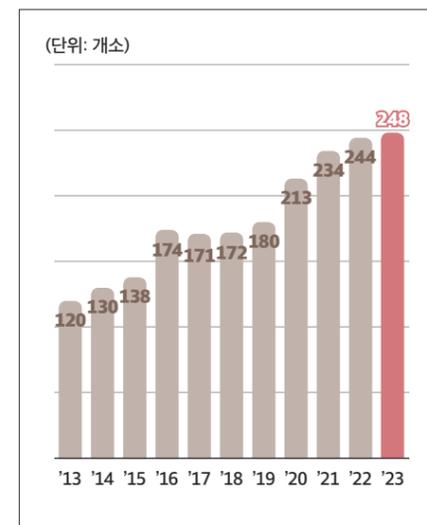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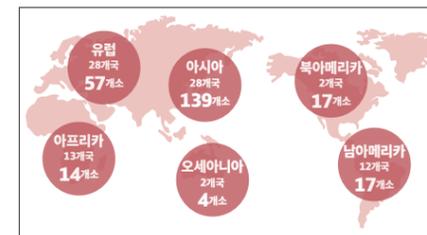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김연아, 수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복 패션쇼)

< 권역별 세종학당 현황(2023년) >



세종학당 수 변화(2013년~)

한국어와 한류의 해외 확산 기지인 세종학당은 최초 개설(2007년, 13개소) 당시 대비 약 19배 규모인 248개소(2023년 지정 기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환경에 대응해 2023년에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정식 운영(2022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적 학습 열기를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한국어 확산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45억 원 증가한 617억 원이 편성된 만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글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등 선정기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한글상품 21종 개발)해, 해외 박람회 참가(3회) 및 재외문화원 특별전 개최(5개국)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에 '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신안(이탈리아 피렌체 그림전)



영덕(만세시장 문화공연)



군위(대구-군위 문화교류 축제)

국어 잘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함께 발전하는 한국 언어문화'를 비전으로 국어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품질 말뭉치 200종 구축 등을 목표로 한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도 한글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인공지능 언어처리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중심 지역균형 발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2022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모 및 평가(2023년 6~12월)를 거쳐 13개 도시의 조성계획을 승인했습니다.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실적 평가를 거쳐 2024년 12월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이 되면, 3년간(2025~2027년)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1~4차 문화도시 사업도 지속 추진해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성과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고자 2023년 3월에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후속 조치로서 2023년 10월 유·무형의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을 포함한 '지역문화매력100선(로컬100)'을 선정해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컬100 홍보대사('키크니' 작가)를 위촉해 특색있는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공공 등이 참여하는 로컬100 지역 현장방문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를 2023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에 집중홍보를 통해 문화예술을 활용해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활동이 침체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국립예술단 공연 등 문화 활력 촉진 패키지를 지원(2022~2023년, 매년 17개소 지원)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혁신도시 및 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고, 전통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어 확산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매력 있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추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21만 명 달성,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및 권리보장센터 개소 등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미술진흥법> 제정을 통한 미술시장 진흥 제도적 기반 구축 및 2023년 미술시장 매출액 6,695억 원, 공연티켓판매액 6,489억 원 달성 등 순수예술의 도약을 이끌고,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을 조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예술의 위기로 불안정한 예술 창작환경 해소와 함께 예술의 불공정 관행과 권리침해 방지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한편 클래식·무용 분야 국제콩쿠르 석권, 해외 문학상 수상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K-아트 문화수출시장의 싹을 틔워주는 신동망이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과 예술로 활력 넘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공연시장의 재도약과 미술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대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제약없는 공정한 예술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행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지역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등을, 충청권에 세종 국립디자인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을, 경상권에 부산 국제아트센터, 전라권에 전주 서예비엔날레관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설계·건립 중입니다.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면 지역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 및 지역예술인의 수도권 유출 문제 해소 등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소멸대응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술인의 생계안정과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을 신설(2022년 7만 명, 추경 2회, 1,012억 원)했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원로, 장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대폭 확대했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업무협약식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착공식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6.4%, '예술 활동 지속에 도움' 90% 응답
- (참여자) 창작준비금은 작품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현실에 매몰되어 예술을 버리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역할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지원 인원 확대 (2만 명, 3백만 원)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3천 명, 200만 원 생애 1회)

예술활동증명이 더 쉽고 빨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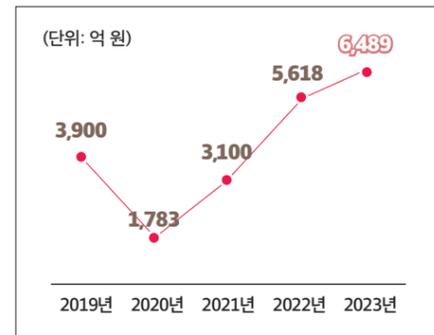
기존

- 코로나19 등과 예술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기간에도 예술활동증명 기간 만료 시 재신청 필요
- 20년 이상 활동한 예술인도 유효기간 만료 시 매년 재신청 필요
- 장르별 활동별로 다르게 규정된 복잡한 유효기간

개선

- 별도 신청 없이도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기간 자동 연장
- 20년 이상 활동한 예술인은 재신청 없이도 예술활동증명 평생 유효
- 장르별 활동별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 2019~2023년 공연예술 티켓판매액 >



으며(2022년 2만 1,000명, 총 600억 원 → 2023년 2만 3,000명, 총 660억 원),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선정 횟수에 따른 배점을 신설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편해 다양한 예술인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재난 기간만큼 자동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023년 9월)해 예술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2023년 공연예술 분야 티켓판매액은 6,489억 원으로, 2022년 5,618억 원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회복세를 넘어 지속 증대 중인 공연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연예술 분야 지원 범위를 ‘창작’ 중심에서 ‘유통’으로 확대해 공연예술 유통 분야 지원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문화예술 전국 창작자 유통 지원’ 사업(2024년 신규, 400억 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우수 공연작품 전국 유통, 국립예술단체의 대형 전막공연 지역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도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우수 공연예술단체 육성 예산(2024년 시범운영, 90억) 확보를 계기로, 지방비 포함 180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공연계 자생력 강화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술진흥법> 제정(2023년 7월)으로 미술분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고제를 마련(2026년 시행)해 미술서비스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술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시행)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트페어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의 동시 개최(2023년 9월)로 관람객 8만 명을 달성하는 등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주요 미술관(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샌디에이고 미술관 등)에서 한국미술 특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등 한국미술 해외 전시가 확대됐습니다.

2023년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이 전업예술인으로서 성공적인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58억 원), 청년예술인들의 현장 안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1,186명, 83억 원) 및 재능있는 청년예술인들의 공공무대 기회를 확장(86명·8개팀, 185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2023년 95명 → 2024년 350명) 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구겐하임 협업전시 《한국 실험미술 1960-70》개최, 뉴욕타임스(2023.10.25) 등 기사 보도

예술×기술 ‘아이디어 실험-테스트베드’를 통한 창·제작, 교류·연구, 창업·성장 등 예술활동과 비즈니스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개관(2023년 10월)했습니다. 또한 예술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233개 기업)해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129개), 투자 유치(360억 원) 등 예술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문학계 첫 국립시설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2023년 설계완료, 2026년 개관 예정, 686억 원)을 추진중이며, 한국문학의 번역을 지원(35개 언어권, 434건)하고 번역아카데미를 운영(3개 과정, 196명 수료)해 문학의 한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및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2023년 1월 19일)해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보험료 지원, 안내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급여혜택을 받은 예술인 인터뷰

- “예술인 고용보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프리랜서 생활속에 단비같은 실업급여”
- “다친 부위의 사진과 의사의 산재보험 소견서, 공연 사진이 있으니까 증명이 어렵지 않았고, 치료비 혜택과 휴업급여를 받으며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큰 도움”

창구 운영 등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험 제도(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만 1,615건 / (산재보험 가입자 수) 1만 2,517건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자 수) 1,561건

또한 2023년에는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발급의 유효기간을 폐지했으며, 하나카드·하나생명과의 협약을 통해 체크카드 기능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예술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전용복지물 및 공연할인물 이용, 상해보험 가입서비스, 제휴기관(편의점 등) 이용 쿠폰 제공 등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25일)에 따라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2023년 1월 26일)했으며, 예술활동 중 발생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특별조사팀을 설치(2023년 3월 29일)해 전면조사를 실시해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조치(2023년 7월 17일)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2023년 8월 16일)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 보호 통합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서울스퀘어)’를 개소(2023년 12월 19일)해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법률상담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들의 국민연금·산재보험료 지원 및 보험사무대행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예술인 신문고’ 기능을 강화해 피해상담, 신고부터 조치, 피해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 접근성을 갖춘 장애예술인 창작거점 마련 등 장애예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의 창작·발표 및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조성(2023년 10월 24일)해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인 접근성 지원 서비스 운영(수어통역, 점자 및 음성·문자 안내 등)과 함께 250석의 공연장 및 부대 공간을 조성해 배리어프리 공연 제작, 해외 장애예술인 작품 초청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모두예술극장



또한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2023년 6월)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23년 12월)을 개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2024년에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2023년 3월 시행)에 따른 유통 플랫폼 구축으로 장애예술 창작물 유통을 활성화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1주년을 계기로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에서 하트시각장애인 춘추관 특별공연(2023년 4월 20일)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2023년 9월 1일~15일)을 개최해 장애·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고 누리는 화합의 장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시각예술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교류, 협업, 교육 및 다양한 형식의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확보된 전문공간인 ‘표준전시장’(서울스퀘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표준전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발표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획전시 지원 등 시각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건수 및 예산을 점차 확대해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양적 및 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23. 7. 17.(월)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결과 >

신고인에게 배분해야 할 애니메이션 투자 수익 미배분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계약 내용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 변경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 운영 등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센터 개소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게임, OTT 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과 1조 7,400억 원의 역대 최대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 간 연평균(2018~2022년) 매출 6.0%, 수출 8.3% 성장했으며, 특히 2022년 사상 최대 매출액(151조 1,000억 원) 및 수출액(132억 4,000만 달러)을 달성해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1조 1,000억 원(2022년)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수출액은 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2억 4,000달러(2022년)를 기록해 명실상부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콘텐츠 분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투자금 유치 등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난 해소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기업 91.9%가 10인 미만, 88.3%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이에 윤석열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등 K-콘텐츠 기반 조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육성,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콘텐츠로 신시장 개척 등 4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짜임새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기반 조성

2023년,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했습니다. 시장 수요조사를 통해 6개 분야** 펀드를 조성하고 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총 7,428억 원의 K-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해 영세한 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에 기여했으며, 드라마 ‘무빙’(디즈니+ TV쇼 월드와이드 1위, 제59회 대종상 4관왕) 등과 같은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4,416억 원 → (2021년) 5,039억 원 → (2022년) 5,405억 원 → (2023년) 7,428억 원

** K-콘텐츠IP펀드, K-문화M&A펀드, K-유니콘펀드, K-밸류펀드, K-문화상생펀드, K-문화일반펀드

올해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인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추진)해 적재적소에 자금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합동발표(2023년 7월)하고,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2023년 10월)하는 등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

인터폴·해외수사기관·경찰청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웹소설 등 국내외 대규모 불법 유통업자·일당(업계추산 피해규모 약 660억 원)을 검거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협의체 구성·운영(2023.3월~)

아울러, 한-사우디 저작권협력 MOU를 체결(2023년 11월)해 중동지역 내 K-콘텐츠 보호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불법유통 콘텐츠의 신속한 정보수집·대응을 위한 언어별(영어, 중국어)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2023년 12월)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사상 최대의 문화예술 저작권 수출액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 문화예술저작권 수출액 (2021년 23억 7,000달러 → 2022년 29억 7,000달러 → 2023년 33억 6,000달러(추정))

향후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공조와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으로 저작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불법복제물 이용률 최근 3년간 지속 하락 (2021년 19.8% → 2022년 19.5% → 2023년 19.2%)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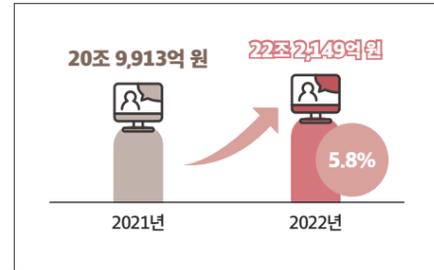
(K-팝) 해외 시장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6개 국을 대상으로 뮤지션 26팀의 쇼케이스 개최(2023년, 관람객 1만 2,000여명)해 비즈니스 상담 265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음악콘텐츠 제작과 대면 공연 적용을 지원(매출액 243억 원 추산)해 음악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했습니다.



해외 쇼케이스(Korea Spotlight) 개최

앞으로도 해외 쇼케이스, 페스티벌 참가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 장르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음악 IP를 활용한 기술융합 음악·공연 콘텐츠 제작으로 신규 IP 발굴을 통해 음악산업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 2022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 >



(게임) 게임인재원을 통해 전문인력(2023년 51명)을 육성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사(2023년 141개사)의 인큐베이팅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게임산업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업체의 게임 제작(총 83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총 124건) 등을 통해 콘텐츠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더불어, 게임이용자 권의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후속조치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규정을 마련했습니다(2024년 1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해설서 배포 및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안내 전담청구를 운영해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2024년 5월) 했습니다. K-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게임이용자 친화적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모태펀드를 활용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해서 실시한 결과* 2022년 대비 영화관람객 수 10.9% 상승 및 한국영화 2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영화 핵심인재 양성의 산실인 '한국영화 아카데미' 실무교육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국내외 우수 영화제, 시상식에 초청되어 수상하는 등 성과(213건 초청, 42회 수상)를 지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총 629억 원 투자(10개 조합, 47편, 96건) / 주요 투자지원작 <범죄도시3> <서울의 봄> <노랑>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이 하루빨리 개봉할 수 있도록 한국



부산 영화 촬영소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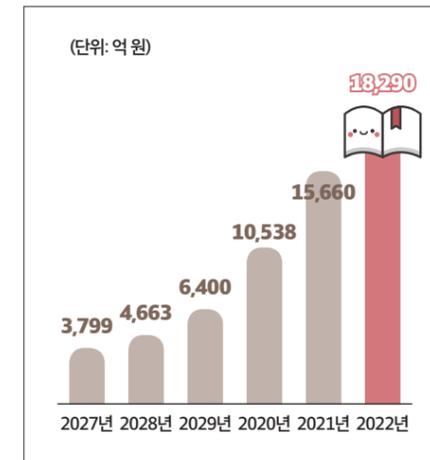
영화 개봉촉진 펀드(2023년 11월, 50억 원 출자)를 통해 미개봉 영화가 개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수요 충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촬영소 건립을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

(드라마) 기획-제작-유통-인프라 등 콘텐츠 전주기 지원을 통해 K-드라마 흥행의 촉매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제작지원 및 후반작업지원 등으로 총 137편의 작품을 지원(2023년)하면서, 글로벌 OTT를 통해 세계에서 흥행한 '힙쎈여자 강남순'(넷플릭스 14개국 1위), '밤에 피는 꽃'(최종화 시청률 18.4%)등 성공사례를 창출했습니다.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를 지원해 2억 3,30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짜장면 랩소디'(KBS, 넷플릭스 등 방영)를 비롯한 26개 과제를 지원해 제작사의 IP 기획개발 및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향후에도 기획-제작-유통-인프라 등 전주기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OTT 등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는 미디어콘텐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웹툰 산업규모 추이 >



(웹툰) 만화·웹툰콘텐츠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2023년 245건) 및 인력양성(2023년 21,234명)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 해외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2023년 8개사) 및 수출작품 번역 지원(2023년 25개사, 48건), 만화 해외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진행하며 수출상당액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등 해외진출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웹툰에 대한 해외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웹툰 소비 인구 확대를 위한 대규모 해외행사를 개최하고, 해외마켓 참가지원을 대폭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로 힘입어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8.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2년 기준 132억 4,000달러를 기록, 이차전지(100억 달러), 가전(81억 달러) 등을 능가하는 주요 수출품목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의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콘텐츠 수출플랫폼 웰콘(WelCon) 내 온라인 전시관(912개사) 구축·운영해 해외 바이어와 상시 상담을 제공했으며, K-콘텐츠 엑스포 개최 권역을 유럽, 북미·중남미, 중동 등으로 확대해 국내 콘텐츠 기업(2023년 93개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확충(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해 수출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K-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 K-콘텐츠 연계 연관 산업(식품, 소비재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했고, 창원시와 대구광역시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폭증하는 통신분쟁 조정 및 통신분쟁상담을 접수·처리해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으로 온라인 상 다양한 피해에 대한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해져 이용자 권익증진에 앞장섰습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복잡·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으며,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강화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유아(105개 기관), 청소년(792개교), 성인(1,304개 강좌), 노인 및 소외계층(239개 기관)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운영한 결과, 2023년 참여인원은 49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8,285명 증가했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도 또한 2022년 수강 전 75.6점에서 수강 후 80점으로, 2023년에는 수강 전 77.6점에서 수강 후 82.4점으로 6.18% 향상됐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8월, 대전), 장애인 미디어 축제(8월, 부산) 등을 개최해 다양한 계층이 미디어 교육·체험·공모전 등을 통해 사회와 소통·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협력했고, 이를 통해 2024년 3월 28일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교육의 5대

<장애인 미디어 축제 현장>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등) 동반 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부처 협업 K-박람회를 개최(2023년 11월, 태국)하고, 해외홍보관 운영(인도네시아)과 해외 호감도가 높은 K-콘텐츠(드라마 등)를 활용한 한류마케팅을 추진(40개 제품)해 연관산업과 한류 콘텐츠의 동반성장을 추진했습니다.

한류의 쌍방향 문화교류 및 문화이해도 증진을 위한 주한 외국인 대학생(24개국 72명) 대상 한국문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류 팬의 관심을 한국 생활문화로 확대하는 '모꼬지 코리아'(2023년 10월, 멕시코)를 개최하는 한편, 한국-베트남 청년 2,500여 명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 행사(2023년 6월, 베트남)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 수출지원과 연관산업 동반진출 확대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K-콘텐츠로 글로벌 신시장 개척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기술융합콘텐츠 신생기업 원스톱 통합 지원 기관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신기술 관련 입주사를 관리하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2022년 15개사 → 2023년 41개사)했고, 기업의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 지원(2023년 18개 과제)을 통해 대표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문화기술(CT) 분야 선도적 R&D를 추진해, 2023년 기준 특허 469건, 547억 원의 사업화 실적을 달성했으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창작·향유환경 조성,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빠르게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운영(2023년 2~12월)하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2023년 12월)했습니다. 안내서에서는 생성형 AI 사용 시 사업자, 저작권자,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여부 및 저작권 등록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후반작업 지원 등 새로운 플랫폼에 특화된 지원을 통해 '이재, 곧 죽습니다'(아마존프라임비디오 글로벌 2위), '내 남편과 결혼해줘'(아마존프라임비디오 57개국 1위)와 같은 흥행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상향(3~10% → 최대 15~30%, 2024년 시행)해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과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유통·투자를 활성화하고 대내외 기술변화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기술 R&D 정책 수립 및 투자를 확대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신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간담회



AI-저작권법 워킹그룹

<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경남·대구) >



< 미디어나눔버스 >



시각·청각장애이용TV 보급 안내



발달장애이용 맞춤형 콘텐츠 제작

원칙(보편성·체계성·포괄성·전문성·협력성)을 정립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화해 비대면 시대에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에 새로 개관한 경상남도 창원시(12월 6일)와 대구광역시 수성구(12월 22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포함해 총 1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확대(2대 → 8대, 2022년 9월)해 미디어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2022년 285회 → 2023년 483회) 향후에도 미디어 접근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맞춤형TV 3만 5,880대(2022년 1만 5,300대, 2023년 2만 580대)를 보급했으며,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전체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방송에서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 → 7%)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을 축소(30% → 25%)하는 내용의 장애인방송 고시를 개정(2022년 12월)을 통해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의 기본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장애인용 콘텐츠로 재제작해 약 9,010편을 보급(2022년 4,600편, 2023년 4,410편) 했으며,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 91편을 제작(2022년 43편, 2023년 48편)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향후에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지난해 1기 협의체(2022년 5월)에 이어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기 협의체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2023년 8월)해 포털뉴스 서비스 알고리즘 및 제휴심사 방식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및 뉴스제휴평가기구의 설치·운영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생산·소비·유통되는 정보의 가치와 진위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대상별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을 실시(2022년 수료인원 1,444명, 2023년 수료인원 2,006명)했으며,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 팩트체크 콘테스트'(2022년 11월 시상)와 허위정보 예방 시민 참여 공모전(2023년 6월 시상)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했고 각각 82.9%와 89.6%의 해결률을 기록하는 등 분쟁 해결률을 매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 1만 건의 조정상담도 진행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 관련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위원 수 증원(10명 → 30명) 및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어(2023년 1월 3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2023년 8월) 및 추가위원(2024년 2월)을 위촉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및 국민불편 해소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사각지대·신(新)유형의 피해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협약을 체결(2022년 12월 29일)했으며, 온라인피해365센터에 개소(2022년 5월 31일)이후 접수된 피해사태를 기반으로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4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을 개선(2022년 7월)해,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손해배상 기준금액을 10배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2023년 10월) 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 생활에 필수서비스로 자리잡은 플랫폼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앱 개발사 및 앱 마켓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VOD서비스를 중단한 글로벌 사업자인 트위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앱 마켓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신고접수 체계를 갖추고 피해자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실시해 2022년 전체 5만 4,994건을, 2023년에는 전체 6만 6,929건을 시정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인터넷사업자를 확대(2020년 97개 → 2023년 163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2022년에 9,448건을, 2023년에는 1만 1,404건을 삭제·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의 단초인 불법스팸을 감축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범정부 대책’(2022년 9월)을 발표했으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스팸 신고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개방, 수사기관과 대응협력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융기관·지인 사칭 문자 등 보이스피싱·스미싱 의심 전화번호 총 9,552건을 경찰청에 제공해 신속한 번호 차단을 추진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등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해 실제 도박사이트 4,083건을 차단해 도박 피해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전송단계에서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2024년 3월)하고, 2024년 6월부터 대량문자 재판매사업자(약 1,175개)를 대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해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 향상했습니다(2021년 60.8% → 2022년 61.2% → 2023년 62.4%).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민·관합동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는 지난 10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를 비롯해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전개 및 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 체육인 복지 강화 및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체육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포츠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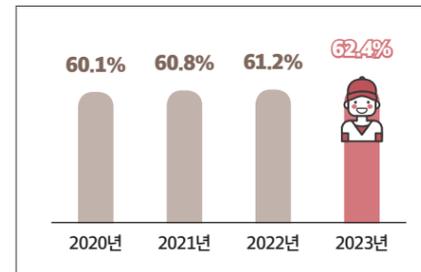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해 전 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애주기(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 등)에 따른 맞춤형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폭 확대(2022년 9만 명, 월 8만 5,000원 지원 → 2024년 14만 명, 월 10~11만 원 지원) 등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2023년 늘봄학교 시범도입(214개교)에 따라 스포츠 단체, 지정스포츠클럽 등과 협력해 190여 개 학교에 티볼,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기조에 맞춰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1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초1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약 150개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스포츠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약 16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3월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스포츠 참여 활동 증가와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에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윤석열정부는 스포츠정책 거

< 생활체육 참여율 >



버닝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제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스포츠정책을 수립하고 스포츠의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과 지도자 수당을 인상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파리하계올림픽에 대비해 국외전지훈련 지원을 확대했고, 출전 선수들이 현지 적응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사전훈련캠프를 파리 인근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아울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해 한식 도시락 등을 제공합니다.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대학운동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사업(2023년 20개 학교)을 신설해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재검토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권고안 대비 대폭 확대(2023년 초 0일, 중 0일, 고 10일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했고, ‘학생선수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을 통해 대회·훈련 등에 따른 학습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참여 증가는 전문체육 역량 강화와도 밀접히 연계됩니다. 2023년 12월에는 공익목적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운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해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9,947명이 참가한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선수들이 그간 흘렸던 땀과 노력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메달리스트 중심에서 전문체육인으로 확대된 체육인 복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3~2025년).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 처리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사건의 경각심 제고 및 사전예방을 위해 체육인 징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해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대표 훈련시설 확충 >



평창동계훈련센터 개관



진천선수촌 전천후육상트랙 준공



MTB 코스 조성

* 2022년 대비 2023년 사건처리 건수 53% 증가(398건 → 609건), 당해연도 접수 건수 중 당해연도 처리율 49.1% → 54.9%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스포츠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체육센터 39개소를 신규 선정해 총 736개소의 건립을 지원 중입니다. 건립지역 선정 시 서비스 불편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시니어친화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을 신설해 지역의 인구구조와 수요를 고려한 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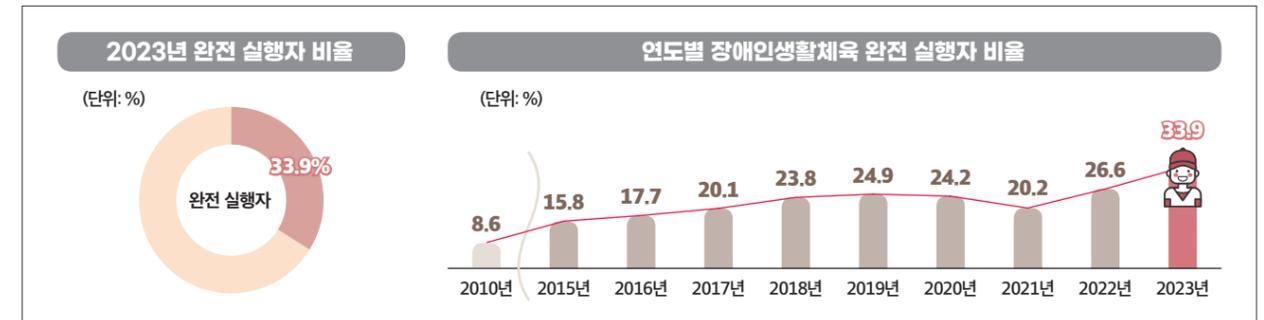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지원(2023년 누적 총 89개소)하고 있으며, 2022년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신설하고 2023년에는 참여 종목과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장애인체육 종목별 리그전에 생활체육 부문을 도입하고 단계별·수준별 리그를 확대(2022년 3종목, 171경기 → 2023년 5종목, 543경기)하는 등 지속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통해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은 역대 최대인 33.9%(전년 대비 7.3%p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지역 스포츠 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예비·초기 기업에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소 스포츠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새롭게 추진(2024년 40개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19억 원의 용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했으며, 투자시장 위축에도 스포츠산업펀드(2023년 1개 184억 원 결성)와 스포츠출발펀드를 결성(2023년 2개 80억 원)해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4월에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으며, 2028년까지 스포츠산업 시장을 105조 원 규모로 확대(2022년 78조 원)하겠다는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3대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 연도별 추이 >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



전략 및 9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발표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에서 더욱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동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생활체육 분야 국제종합대회인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해 71개 국가에서 1만 4,000여 명이 참가했고, 2024년 2월에는 부산에서 종목 최고권위 대회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스포츠기구에서의 입지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김재열 국제빙상연맹(ISU) 회장이 2023년 IOC 총회에서 73표 유효표 중 찬성 72표를 얻는 압도적 지지로 IOC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한국은 국제스포츠 최고권위 기구인 IOC에서 3인의 위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4년 1월에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어, 청소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78개국 1,800여 명의 선수가 강원도에 모여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100% 활용해 신규 경기장·기간 시설의 건설 없이 치러졌습니다. 대회 경기장과 K-컬처의 저력을 보여준 개·폐회식 및 페스티벌 사이트에 총 50만 명 관람객이 방문해 청소년 올림픽 역사상 유례없는 흥행을 달성했으며, 완벽한 대회시설과 운영으로 IOC 및 내외신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K-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해 태권도 사범을 해외 54개국에 파견하고, 현지 맞춤형 태권도 사업을 확대·지원(2023년 40개국 → 2024년 59개국)하는 한편, '2023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2023년 12월, 여수)해 동북아시아 주요 3국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스포츠 중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스포츠가 늘 국민 속에서 함께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반응) "동계청소년올림픽 50만 명 방문, 흥행도 취지도 빛났다"(MBC), "14일 간의 열전 끝, 강원2024 성적도 흥행도 모두 성과"(경향신문) 등 다수
 (해외반응) "최초의 올림픽 메타버스 출시,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올림픽대회"(멕시코, 클라로 스포츠), "폭설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대해 '역경에 맞서는 회복탄력성으로 올림픽의 정신을 빛나게 하고 있다'"(홍콩, B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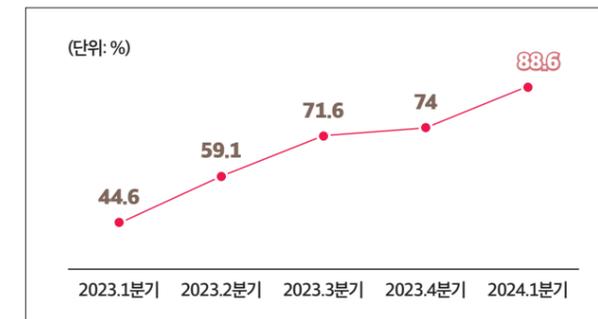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2024년 2월 1일)
 "강원 2024의 모든 측면은 기대 이상이었고,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스포츠대회에 있어 아주 강력한 개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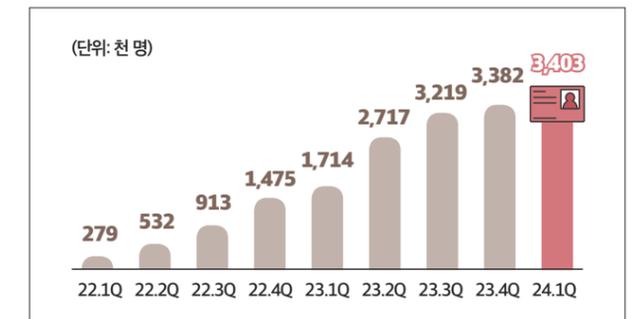
K-컬처에 대한 인지도·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2023년 외래객 1,000만 명을 달성하고, 2023년 12월 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 관광대국 도약' 비전을 제시해 국제관광시장 선점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 중입니다.

국제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6년 반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등 대외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성 확대, 국내·외 관광수요의 개별화·다양화 등으로 국제관광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2027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관광수출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융합·고부가 관광산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2019년 동기 대비) >



< 2022-2024년 외래관광객 분기별 현황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으로 방한관광 회복 견인

윤석열정부는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80여 개의 기업·협회가 참여한 K-관광협력단을 출범시키고 국내·외 외국인 대상 K-컬처 메가이벤트를 추진했습니다.

K-컬처 체험·판매 공간인 'K-컬처 팝업'에 20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했고, K-뷰티 특별프로모션 '코리아서머뷰티세일', 방한 항공권 구매 외국인 대상 '코리아버킷리스트', K-POP 콘서트 'K-Link 페스티벌' 등에 외국인 총 2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쇼핑관광 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해 2024년에는 역대 최대 1,653개 기업이 참여해 항공, 쇼핑, 숙박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17만 명





코리아그랜드세일



여행가는 달 포스터

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으로 문화·예술, 뷰티, 콘텐츠, 음식 등 K-컬처와 관광이 융합된 색다른 체험과 지역에서 즐기는 관광 콘텐츠 개발로 방한 수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관광진흥체계 정비

윤석열정부는 관광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년간 총 9,190억 원 규모의 관광자금 용자를 시행했습니다. 2022년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에 3,141억 원을 지원하고, 호텔업 등급평가와 카지노업의 납부금을 유예했습니다. 향후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7,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관광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6월 ‘여행가는 달’로 2022년 67만 4,000여 명, 2023년 103만여 명이 숙박·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누렸고, 지역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024년은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합니다. 아울러,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통한 여행 정보 제공으로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한 ‘걷기여행주간’을 개최해 코스별 완보 인증 25만 9,000여 건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신규 허가(2024년 1월, 인스파이어) 했고,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카지노·비(非)카지노 부문 경쟁력 확보를 조건으로 카지노업을 재허가해 사계절 복합레저 관광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휴양업 등록을 위한 식물원·수족관 등 개별시설기준을 완화했으며 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 및 1개월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장려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10만 원)을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2022년 10만 1,000여 명, 2023년 14만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162개소를 선정하고,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강릉시)’ 사업을 통해 권역 내 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관광취약계층 나눔여행으로 900여 명에게 여행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여행을 돕는 투어케어 전문인력 680명을 양성하는 등 관광 향유권 제고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PATA(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관광협력기구) Awards 2022’ 사회적책임 분야, 모두를 위한 여행 부문 수상



열린관광지

개인의 취향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교통, 먹거리 등 테마 상품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를 4개소 선정했습니다.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위해 2023년 시범지원(1,500여 명)을 시작으로, 2024년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오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박 문화’ 활성화에 따라 전국 HD현대 오일뱅크 주유소(10개)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해 캠핑 편의를 도모하고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2023년 국제관광시장의 회복에 따라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한국 방문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회복 및 방한 국가 다변화(외래객 70%가 2019년 5개국 → 2023년 8개국)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확대(68개국), 단체전자비자 제도 신규 도입(베트남·필리핀·인니), 비자신청센터 신설(베이징·마닐라 등 6개소) 등 주요국 관광객의 입국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6년 반 만에 재개된 중국 단체 관광객 본격 유치를 위해 2023년 9월 범정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4년 1분기 방한 중국 관광객(유커)은 101만 5,000명으로 2019



뉴욕 로드쇼



“ ‘유커 없이 되살아난 명동..인도·동남아 관광객 발길 이어져’(2024.4.1. 머니투데이)
 ‘유커가 돌아왔다..방한 관광객, 중국이 1위’(2024.3.29. 이코노미리뷰)
 ‘보따리상 줄었지만 찐 손님 늘었다..화장품 면세 채널 회복 기대’(2024.3.27. 머니투데이) ”

년 대비 76.1%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 시장인 중동 관광객 유치에 2024년 2월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발족하는 등 중동 특화 방안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세계 주요 25개 도시에서 한국 관광 로드쇼를 공격적으로 확대 개최하고, 장·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가 간 관광 교류 협력과 국제사회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업계 및 부처 협업으로 교통·쇼핑·안내 등 접점 분야의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즉시 환급 사후면세 한도 상향(총250만 → 500만 원),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연계 고속버스 예약·결제 서비스 구축, 관광안내물 외국어 번역·감수 및 오류 수정(4,263건) 등을 통해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2024년 2월에 출범한 ‘여행산업 공정상생 협력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덤핑관광 등 여행산업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에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관광코스로 개발·홍보했습니다. 동계 스포츠를 즐기러 방한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관광 상품을 홍보했으며, 관광산업 회복세에 발맞춰 고급, 의료·웰니스, 공연·한류, 크루즈 등을 연계한 2023년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에 24개국 해외 바이어 106개 업체와 국내 1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000여 건의 B2B 상담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목소리와 함께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 자원 개발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 자원화해 관광객이 지역에 더 즐겁게, 더 오래 머물며 소비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사업체인 관광두레의 창업 지원으로 2022년 100억 원, 2023년 143억 원의 매출규모를 달성했으며,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으로 2023년 생산유발효과 152억 4,000만 원, 취업유발효과 158명 등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2022년 2개소, 2023년 15개소 운영) 관광지, 쇼핑, 숙박, 식음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호남 연계 ‘문화예술·휴양·치유·일상’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계획*을 발표(2023년 12월)하고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그 밖에도 밤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10개 도시)해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



야간관광



웰니스 관광

다. 2024년에는 대규모 외래객을 유치할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해외 마케팅과 수용태세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 먹거리 개발, 유통 채널 구축 등으로 축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스마트 관광산업 및 인재 양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2023년까지 9개소) 조성으로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개인화되는 관광수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한국관광데이터랩)를 제공 중입니다. 통신·카드사의 데이터와 관광통계, 국내·외 동향 등으로 시의성 있는 관광 이슈를 발굴해 민간·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400개의 혁신 관광기업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순방 시 최초로 관광기업 4개 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중동진출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싱가포르와 2023년 12월 일본 도쿄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관광기업의 해외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국제회의업과 국제회의시설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코리아유니크메뉴를 지정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치유’와 ‘행복’을 주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추천 웰니스 관광지’ 64개소를 선정했고, ‘치유관광 페스타’를 통해 약 24만 명이 웰니스 관광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자체를 최대 3년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 혁신을 주도할 미래 관광인재 육성을 위해 산·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 ICT 융합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방한 흐름에 맞춘 경쟁력 있는 K-관광 콘텐츠로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를 차질없이 구현해나갈 것입니다.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해 미래가치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청와대가 재탄생하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설립으로 우리 유산의 가치 제고와 향유권을 확대했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관리체계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유형유산 이외 무형유산, 자연유산, 근현대유산,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등 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의 한계로 인해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전승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로 국민 불편이 상존하고 문화유산을 둘러싼 보존과 개발 간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담은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정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대 분야(현상변경 허가, 매장유산 조사, 문화재지역 주민 지원)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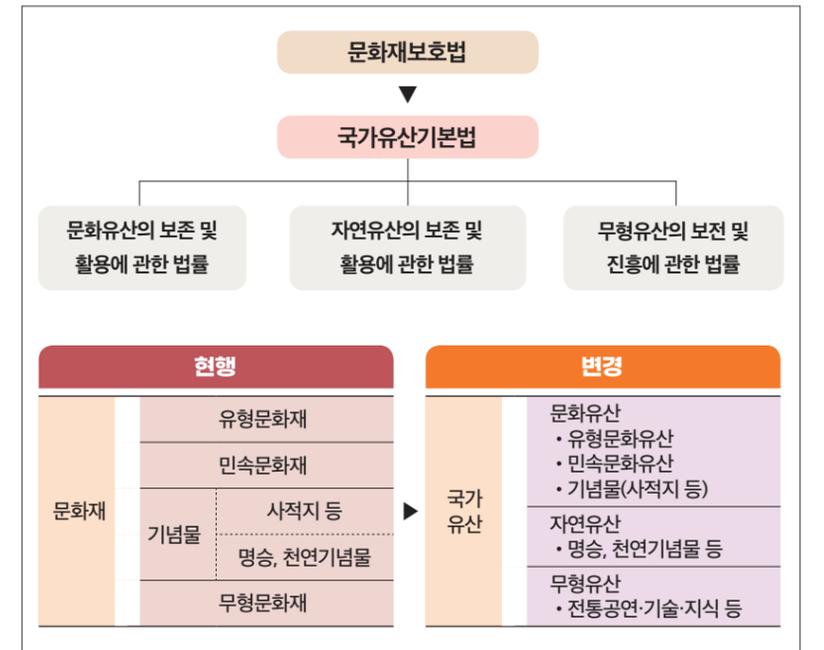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

변화된 문화유산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재정립하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과 유형별(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법체계로 개편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자연유산법>이 2023년 3월 21일 각각 제정·공포됐으며,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된 <문화유산법> 등 10개 법률이 2023년 8월 8일 개정·완료됐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이라는 국가유산 미래비전을 수립해 2023년 12월 8일에 선포하는 등, ‘국가유산’ 체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향유,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 등 정책영역을 확대해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단일 문화재 위주의 보존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별로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2023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년 1월,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해 총 9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육성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각 역사문화권별 유·무형유산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약 1만 5,000여 건의 역사문화자원 목록을 집대성했으며, 역사문화권 중요유적에 대한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마한·탐라 문화권 12개소, 총60억 원)를 실시해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역사문화권 가치규명과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을 통해 지역 관광을 견인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9개 권역)

** 2024년부터 3년 간 지역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경남 함안 등 4개소) 추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9월에 제정되어 제작·형성되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도 미래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적정하게 평가받고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훼손·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권역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사라져가는 미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포괄적·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전수조사 및 목록화: (2022년) 부산·울산·경남·충북·충남권(1만 7,217건 DB구축), (2023년) 광주·전남·제주권(1만 1,855건 DB구축)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 조성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을 담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행사를 추진해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행했으며, 개방 이후 2024년 2월까지 500만 명이 청와대를 다녀갔습니다. 국민 품에 안긴 청와대는 이제 거대한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와대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청와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노거수 군(6주)을 2022년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해 청와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 공간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이루어지고, 더욱 풍부한 교육·해설 콘텐츠가 국민에게 제공되어 청와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권의 증진

국가유산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는 1,69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전수조사하고 378건의 행위규제 내용을 국가유산별 특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했으며, 2023년에는 행위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조정*했습니다.

* 부산 구포동 당숲 등 12개 국가유산 규제면적 총 45% 축소 및 완화(9.66km² → 5.31km²)

또한, <문화유산법> 개정(2023년 10월 31일)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해 허가(협

의)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2024년 2월 13일 제정·공포되어 2025년 2월 14일 시행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 이하)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했으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년 12월)해 2023년에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의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에 대한 지원(30억 원)을 시행했고, 2024년부터는 지원액을 50억 원까지 증액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국가유산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주민지원 상생정책을 확대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전승기반 확충

<문화유산법> 개정(2022년 5월)을 통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유산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23년 5월부터 사찰 64개소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람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문화유산 관람료를 둘러싼 오래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관람료 감면 정책평가

- 관람료 감면 이후, 사찰을 찾은 관람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
- 감면비용 지원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 관람객 증가에 따른 관광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통사찰 내 미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5년 2월 14일 시행)해 국민의 안전한 종교문화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발굴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확대(총 21종목, 2023년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지정)해 나가고 있으며, 전승공동체의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중 수요 부족 등으로 전승 활동이 열악한 25개 종목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재선정(2023년 3월)해 전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추진하는 등 고령화·지역소멸 가속화로 단절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지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마약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및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했습니다.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대량 마약류 밀수 및 국내 마약범죄 급증,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마약범죄에 범정부 수사역량 총결집,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확대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 추진,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2023년 4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마약사범 총 2만 7,611명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총 998kg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4개 국제기구, 23개국이 모여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3월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 및 수수범죄와 마약류 대량 취급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2만 6,039회(전년 대비 9.5% 증가), 전문가 연계상담 2,922회(전년 대비 19% 증가) 실시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통해 2023년 마약 사범 보호관찰 재범률을 3.3%로 억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약사범(명)	4,222	10,304	9,732	18,050	16,153	18,395	27,611

속가능한 전승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전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023년) 16개 사업, 11억 원 지원 / (2024년) 21개 사업, 11억 원 지원

**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정책: (2024년) 270여 명 대상, 개인당 연 600만 원, 총 16억 원 지원

일제강점기 일본에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과 의궤를 되찾아 110년 만에 본래 있던 곳에 오대산사고본 원본과 환수 의궤를 보관·전시하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강원도 평창군)을 2023년 11월 12일 개관했으며, 실록과 의궤의 조사·연구·전시·활용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예정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국가유산 복원의 패러다임이 공간적 복원에서 디지털 복원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2023년부터 ‘역사도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라왕경에 대한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전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황룡사지의 건축물을 디지털로 복원하기 위한 고증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복원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 원형복원을 위해 경상·제주·전라·충청 지역 국가 지정·등록유산 대상 2,190건의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했으며, 국가유산 정보를 일반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50만 파일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디지털콘텐츠 활용 및 국민 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네이버 지식백과’ 내 ‘3D 국가유산 서비스’를 통해 90건의 3D 국가유산 서비스를 제공했고,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 보급을 위해 국가유산 3D 모델 집합체(라이브러리) 906건을 제작했습니다. 향후 축적된 3차원 정밀기록 및 국가유산 3D 모델 집합체의 공개·개방으로 일반국민 누구나 국가유산 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토록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충청권에 추가 개소해 중독 수준에 맞는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중독자 누구나 어디서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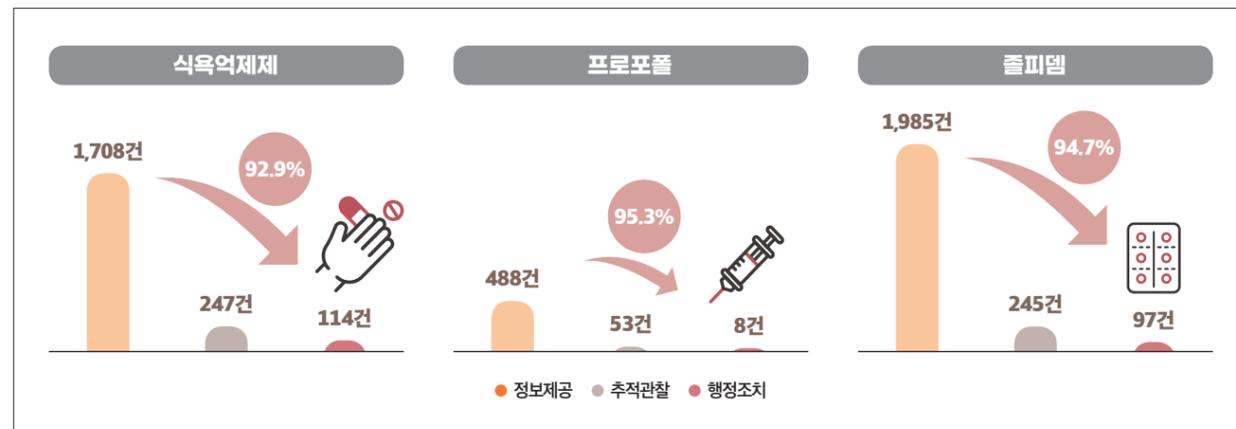
2023년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법무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이 협력해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효과 분석 및 보완 과정을 거쳐 2024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를 2024년 3월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전화번호 '1342'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중독심리상담부터 오남용 예방 상담, 치료병원과 중독재활센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펜타닐(마약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부터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한 후 처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에 대한 사전알리미* 제도 및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으로 식욕억제제(92.9%↓), 프로포폴(95.3%↓), 졸피뎀(94.7%↓) 모두 의사의 과다처방·오남용 의심 처방사례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 제공하고, 추적관찰 후 서면경고, 현장감시·처분 등 시행

한편, 청소년의 마약류 관련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2023년 2,072건, 10만 9,406명)을 진행했으며, 특히 청소년이 선호하는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4월 성폭력방지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단축(3개월 → 1개월)했고,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의무기관을 확대하고, 2022년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등 폭력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 시설위탁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해 감호위탁 시설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 검사가 가해자 처분 및 피해자 지원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적극 개최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상자는 현장 중심의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피해아동 대상 대면·전화 통화 등의 방식으로 재피해 여부를 확인(월 2회 이상)하는 등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회의(분기 1회)를 통해 보호관찰 상황 공유 및 고위험 가정 공동출장으로 아동의 재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23년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지도 1만 5,610회, 피해아동 대면 등 확인 7,576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례관리회의 2,241회 및 공동출장 450회, 지자체 이행상황통보 1,003회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인권을 제고할 것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나 '살인예고' 등이 빈발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현행법 적용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당정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흉악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2023년 10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2023년 10월 제정했습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등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자장치 훼손·도주시 조기 검거를 위해 2023년 1월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신속수사팀 역량을 강화해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확대 보급과 차세대 전자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①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②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개인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③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④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⑤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스톱킹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스톱킹 행위자 접근 시 접근사실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무연고·무의탁 흉악범죄자의 출소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와 재범방지를 위해 2023년 7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단계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주거제한, 외출제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 위해 2023년부터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정부는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등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화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022년 10월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만델라 소년학교) 운영 등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 범죄피해자 대응 강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는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2023년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크게 늘어났으며(전년 대비 495 → 622명, 25.7% 증가), 위증 구속 인원도 증가(전년 대비 9 → 13명, 44.4% 증가)했습니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1월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현 합동수사부)을 복원해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자본시장 교란사범 351명(구속 94명)을 기소하고, 약 2조 원에 가까운 범죄수익을 추정·보전하는 등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우려)자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2023년 총 3,249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고, 검사·수사관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범죄수익환수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환수 활동을 전개해 관련 역량을 강화한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950명의 자금세탁범죄 사범을 인지·기소했으며, 몰수·추징보전한 재산가액은 4,464억여 원에 이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국내 단일 기관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수사 지원이 절실히 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69명을 입건하고, 12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법정 선고형이 낮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3년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및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신종 범행 수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를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지원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0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민이 법률구조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법률구조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총괄해 관리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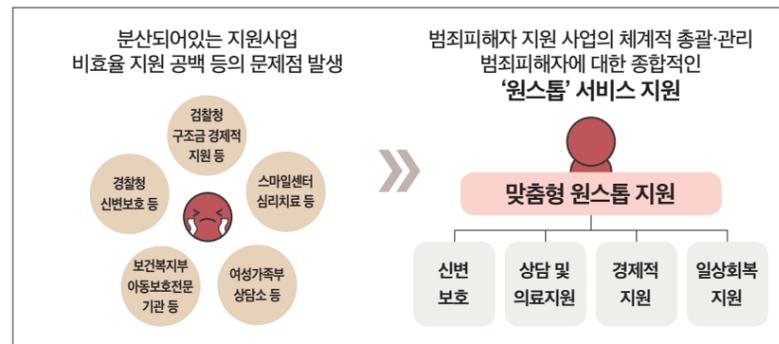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및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범죄피해자 유관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회의(8회)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1월 센터의 설치·운영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부-서울특별시’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7월경 서울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범죄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와 이러한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한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심리치유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신분노출의 우려, 시간·장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심리치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범죄 피해자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2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개발교육 및 통합형 사례자문교육을 실시하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전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심리치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많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잇힐 권리 보장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성 있는 수사를 위해 각 지방 검찰청(18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권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전담부서를 확대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사범,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사범 등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디지털성범죄 사건 접수 인원은 1만 7,879명으로 전년도 대비 16.6% 감소(2만 1,453명 → 1만 7,879명)했습니다. 반면, 2023년 디지털성범죄 사범 중 671명을 구속 기소해 전년도 대비 51.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잇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 협의회(4회) 및 민간사업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범죄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 민간 참여 확대와 각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제도 마련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12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6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피해로부터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①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②법원·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 의무 명시 ③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 부여에 대한 특례 신설 ④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13세 → 19세 미만) ⑤법원이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신문사항 사전 확인 ⑥영상신문시 최초 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실시하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을 통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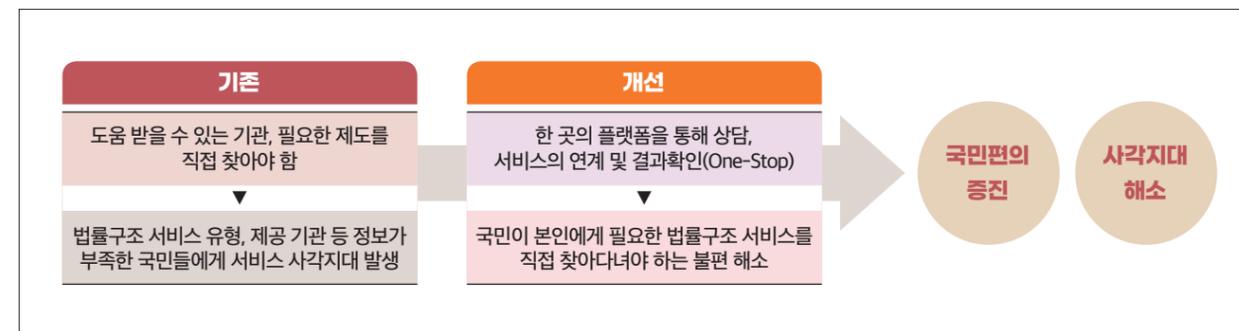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구조 지원 및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연계·제공하기 위해 2023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35개 기관과 연계 방안을 협의하는 등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인하고 상담, 접수부터 진행 과정 및 결과 확인까지 One-Stop으로 제공

2024년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25년 말 서비스 개시를 통해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에 따라 국민 편의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의 협업을 통해 법률지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



원단을 구성·운영해 대형사고·재난 등의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년 9월)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2022년 11월)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지원단(2023년 7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단(2024년 1월)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2024년 2월) 등 구성·운영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스토킹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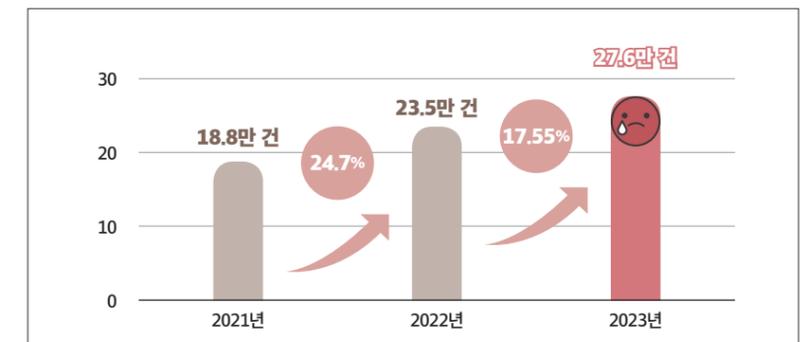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주거(17개 시·도), 치료회복프로그램(16개소)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2021년 7개소 → 2024년 14개소)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14종)해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2024년부터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 유형에 관계없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2024년 54개소)와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윈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2024년 5개 시·도)을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학기술·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위험을 예측·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재난피해 지원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역대 1위’를 경신하는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는 것은 물론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도래 등 변화된 재난 환경으로 인해 대형·복합재난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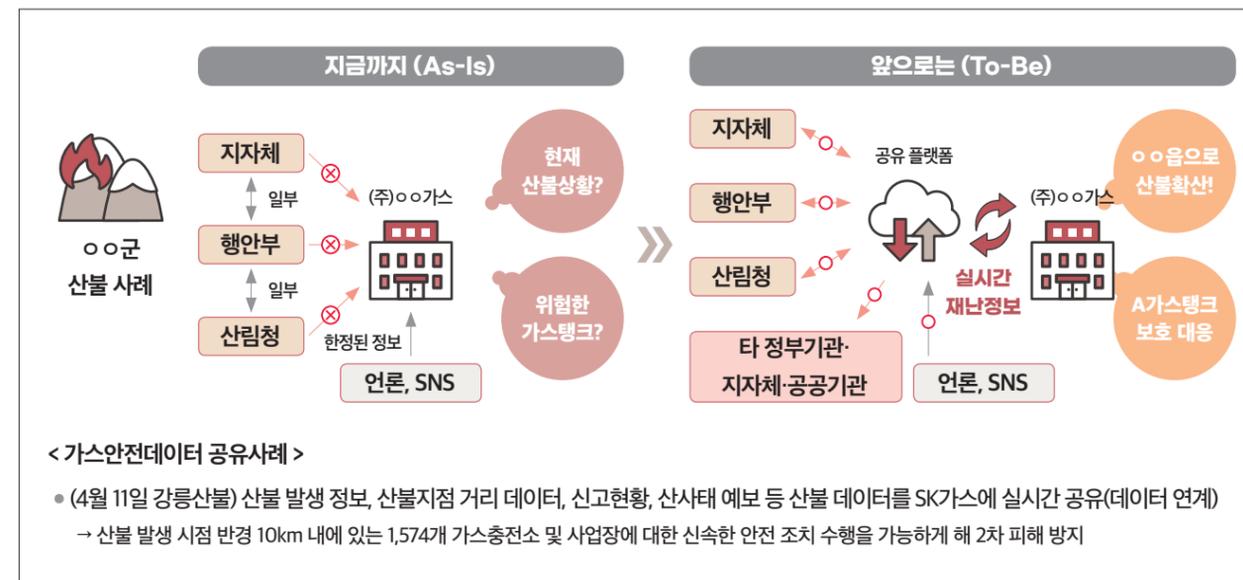
- (2023년) 여름철 강수량 / 강수일수 역대 1위(29mm/day) 기록
- (2022년) 서울(141.5mm), 포항(111.0mm) 1시간 최다강수량 역대 1위 기록
- (20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중부 54일 등), 장마철 강수량(701.4mm) 역대 2위 기록

윤석열정부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AI·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현장·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 실질적인 피해지원체계 마련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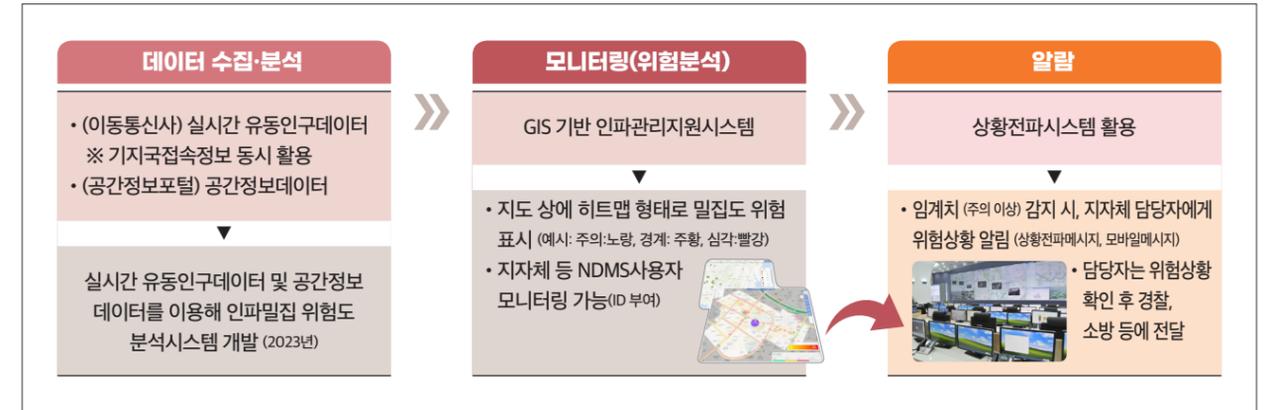
AI-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각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산재된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합·공유하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공유 >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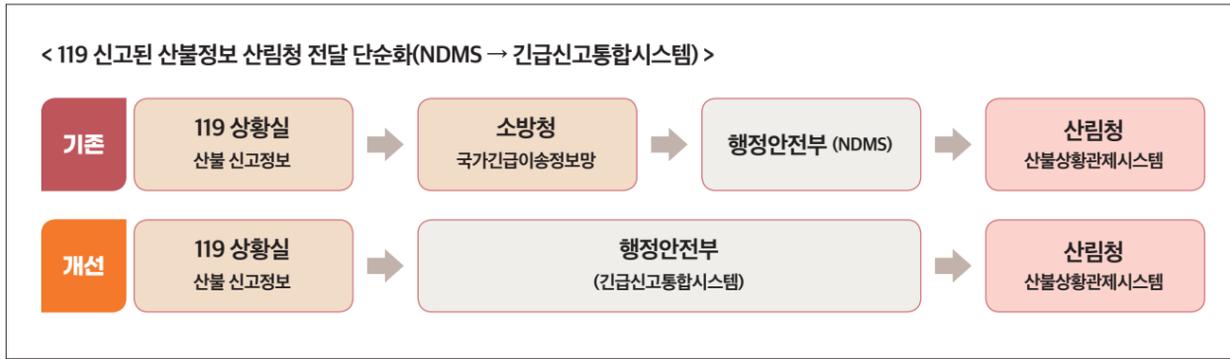
2023년 3월 1단계, 2023년 12월 2단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용 웹페이지(www.safetydata.go.kr)를 통해 가뭄, 한파, 가축질병 등 30종의 데이터 유형을 공개하고 있으며 3단계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총 57종의 재난유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오픈 API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개방하므로, 재난 피해 예측과 분석 등 재난안전서비스 앱(APP)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와 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작년 12월부터 전국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파의 밀집정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주고, 경찰·소방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경찰, 소방이 힘을 합쳐 사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재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서 잠재재난위험 분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새로운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 1차 보고서(2023년 10월): ▲전기차로 인한 화재·붕괴 ▲내륙지방 용오름(토네이도) 발생
- 2차 보고서(2024년 2월):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위험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산불 등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위험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과 공유함으로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각종 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112·119 긴급신고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소방·해경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소방 간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 출동정보를 현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고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은 반드시 현장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2023년 9월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에서 산림청까지 전달되는데 평균 4분이 걸려 신속한 산불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신고시스템을 통해 산불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36개 상황실 신고접수시스템에 접수된 산불신고정보는 긴급신고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으로 전달되며 기존 전달체계 대비 2분 30초 정도 단축시켜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그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을 최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농작물 등의 피해액도 법적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주택피해 지원금을 상향해 주택 전과 시 기존 1,600만 원에서 연면적에 따라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예방적 재난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23년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2023년 12월 5대 전략*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5대 전략) ① 기후위기를 고려한 위험지역 관리 강화 ②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험기상 대응체계 마련 ③ 재난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④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⑤ 폭염·한파, 대설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등록된 급경사지 1만 개를 추가로 발굴하고, 210개 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지하차도(937개소)에는 2명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제기준도 명확히(15cm 침수시 전면통제) 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범람 우려가 높은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44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하천 인근 저지대 도로에 하천수위계와 출입차단기, 경보 안내시설을 연계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스템 90개소를 설치해 침수 감지 시 자동으로 도로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20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해 2023년 6월 범정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등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인천, 광주 등 7개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며, 추가로 2028년까지 7개소를 순차적으로 건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유치원생 등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됐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성인까지로 대상을 확대 운영해 안전 체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교육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3대 전략, 19개 과제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습니다. R&D 기반이 취약한 재난안전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화 재난 유형별 지역 거점 확보를 위해 최초로 침수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전국 소방헬기 국가 단위 통합출동체계 구축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국가 통합출동을 시범운영을 완료했습니다.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도의 출동 1건당(편도기준) 출동시간은 평균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됐으며 총 610분 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통합출동 지역을 확대하고, 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까지 확대해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과 하늘의 경계를 허무는 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항공 운항체계 혁신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좀 더 신속하게 다가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해,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인력수급 곤란 및 지역의료기관 의사 구인난 심화에 따른 공백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자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1년 가계 직접 부담 비율 : 한국 29.1% > OECD 평균 18.5%
-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6.2%,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49.6% (2022년)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필수의료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医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만 ‘필수의료 지원대책’(1월)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2월), ‘소아의료 보완대책’(9월), ‘필수의료 혁신전략’(10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2024년 2월 제8차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를 통해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



중증 응급질환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최근 5년 동안 전국 하루 평균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수는 5,106건으로 119구급서비스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 대비 심혈관질환 환자는 1.6배 증가, 뇌혈관질환자는 0.8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 비율은 21.0%로, 심정지 환자는 1.6%, 심혈관질환 환자는 10.5%, 뇌혈관질환 환자는 8.2%, 중증 손상(외상) 환자는 0.6%였습니다.

이러한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문 약물 투여 등 초기 처치가 중요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 119구급대원들의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인수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해 본격적 논의가 가능해졌으며 2023년 12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구급서비스 향상으로 생존율 향상에 필요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



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 기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파견의사 130명, 공중보건장학 간 호사 40명)이 파견·배치되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2023년 3월)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 44개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8 →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3대 중증응급질환자(중증외상, 뇌혈관, 심혈관)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목표 >

<p>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p> <p>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p> <p>6.2% (2022년)</p> <p>>5.6%</p> <p>(2027년까지 약 10% 개선)</p>	<p>신속하고 적절한 이송</p> <p>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p> <p>49.6% (2022년)</p> <p>>60%</p> <p>(2027년까지 약 20% 개선)</p>	<p>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p> <p>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p> <p>미 실시 (2022년)</p> <p>> 실시</p>
---------------------------------------------------------------------------------------------------------------------------	--------------------------------------------------------------------------------------------------------------------------------	---------------------------------------------------------------------------------------------

수를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 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희귀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7개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 거주지 중심의 진료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축(210 → 150일)하는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습니다.

* ① 지원기준 완화(연소득 15% → 10%), ② 대상질환 확대, ③ 지원한도 상향(연 3,000만 원 → 5,00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만성질환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증소아 환자는 재택치료와 단기입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통령 직속 혁신위원회 구성으로 정책추진력을 확보했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으로 488억 원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렸고, 능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 등 백신 안전성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미래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후적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정신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 진입 예상(통계청)
- 만성질환 진료비는 39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95조 4,000억 원의 41% 차지(2021년, 건강보험공단)
-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년,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 27.8% / 자살률 : 26.0명(인구 10만 명당)

이에 윤석열정부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마음건강 투자 확대 및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가 결합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모형을 적극 개선했습니다. 교육상담료나 환자관리료와 같은 지속관리 수가를 올리고, 문자 위주의 단방향 수단 대신 전화나 메신저와 같은 쌍방향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 관리의 질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환자가 서비스 단계를 이행하고, 걷기 등 스스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 원)' 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했습니다. 현재 109개 시·군·구 지역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택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다 두터운 의료비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2022년 9월)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 인하했습니다.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500~1,350만 원 → 5,000만 원), 소득 정률제 도입, 자동차 부과 대상 축소(4,000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 : 72만 대 → 15만 대)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공제 후 부과
(피부양자 소득요건) 연 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시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 (보험료 부담완화 시행) 피부양자 재산요건 현행 유지(공시 9억 원),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경감(80 → 60 → 40 → 20%)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2022년 9월)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단기·즉각적인 조치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2023년 2월)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2023년 12월)했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2023년 6월)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2023년 12월)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2023년 9월)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요료를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자의 임상지표 개선 주요결과(2023년 4월 기준, 건강보험공단)
 - 혈압 조절률 71.5% → 82.4%로 개선
 - 당화혈색소 조절률 25.1% → 27.0%로 개선
 - 시범사업 참여자의 복약 순응도는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1.5배 높음

아동 진료체계 강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의 성장, 발달부터 심리, 소아비만, 질환 관리까지 포괄적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2023년에 5,355명의 영유아가 6,212회(아이당 평균 1.2회) 심층상담을 제공받았으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아동 성장·발달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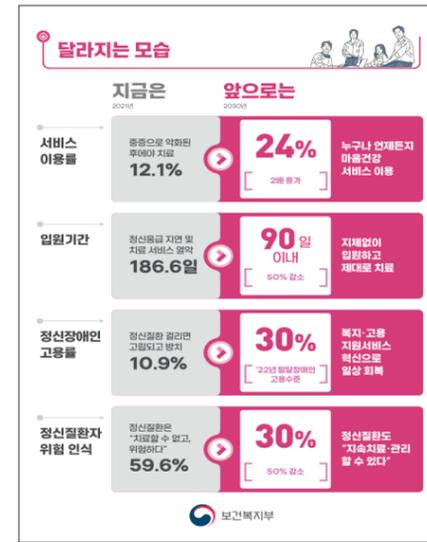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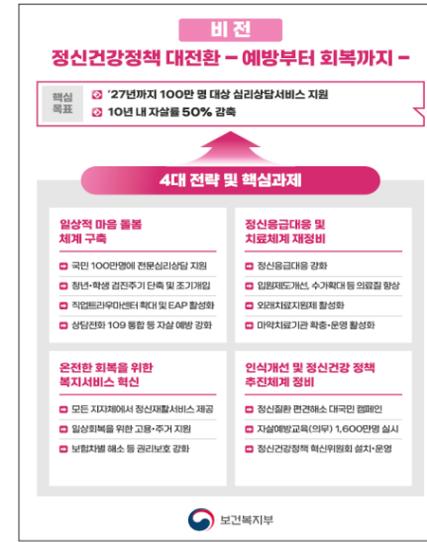
중증소아 환자 진료 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공 기간을 확대해 18세 이하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24세 이하까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는 ‘중증소아 단기 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의 휴식과 중증소아의 단기 입원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보상과 인프라도 강화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해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부터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분야와 대상별로 분산되어 안내되던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2024년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세 자리 번호 ‘109’로 통합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2023년 12월 5일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대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추진력 있게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 1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 2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 3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4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가 위기 단계 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자를 중심으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건강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현황(기간: 2023년 6월 ~ 2024년 1월)>

구분	기관수(개소)	환자수(명)	진료건수(건)
총계	7,379	694,465	1,115,853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6일부터 각 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2023년 9월 14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약 6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성과와 현장의견,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습니다.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



현장간담회 참석자 의견(2023년 12월 15일, 홍성군)

"홍성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아플 때 비대면진료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

비대면진료 시기에 잘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 2. 23. ~)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STEP 1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STEP 2 비대면진료 신청

STEP 3 사전문진
 - 증상·주인동무력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 의료 기관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STEP 4 비대면진료 실시
 - 환자 진료 필요 정보 제공
 - 의사 화상진료가 원치 않음 시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 진찰

STEP 5 처방전 발급 & 전송
 - 필요시 처방전 발급 (하루 90일)
 - 의사 처방전 전송
 - 약국 지점
 -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STEP 6 조제 & 의약품 전달
 - 조제 가능한 약국은 중앙제약관리국(www.gtram114.co.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조제가능여부 확인
 - 환자에게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병원 또는 제대 수령)
 - 의약품 조제
 -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제약지도
 - 의약품 전달

* 본인 및 대리수령이 가능(대인, 친척) 거주지,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취약계층자는 제대수령 가능(대행)에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2조의2를 준용함

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환자의 경우도 대면 진료 경험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의료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위장관염의 주요 원인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2023년 3월 6일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영아 19만 5,000명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2023년 예방접종을 완료한 전체 영아 수 또한 2022년 대비 1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전 가계당 비용 부담이 평균 25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2023년 약 488억 원의 가계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실시!

Q 로타바이러스란?

- 영유아에서 흔하게 감염성 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겨울철에 집중되어 주로 발생함.
- 바이러스로 오염된 대변이 손에 묻어 입을 통해 감염되거나, 식품·주방기구·젖병·장난감·오염된 물 등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사업안내

사업대상	생후 2개월~4개월 영아	지원대상	로타바이러스 2회, 로타텍 3회
접종방법	접종기	접종기관	지정예방기관* 및 보건소
주요내용	①생후 15주~20주까지 첫 번째 접종 완료 ②생후 4개월이 되기 전 모든 접종 완료		

* 예방접종도우미(www.kdca.go.kr)

Q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왜 필요한가요?

A.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쉽게 퍼질 수 있고 감염되면 심한 설사,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 안전성: WHO(세계보건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안전하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WHO, 2009)
- 예방효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으로 인한 감염으로부터 90% 이상 보호 (WHO, 2009)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체제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주도로 BCG·인플루엔자 백신을 일괄 구매해 접종기관에 적정 공급되도록 했으며, 백신 비축 품목을 확대해 유사 시에도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능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접종자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 이상반응 감시체계에 더해 접종자의 의료이용 정보를 분석해 능동적으로 이상반응을 감지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 백신 공급을 위해 비축 백신 증장기 확대 계획 등을 마련해 과학적 분석 결과에 근거한 예방접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예방접종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식품의 신속검사와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한 검사체계를 운영하며, 법안 발의 10년만에 「담배 유해성 관리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피해 구제를 확대했고, 국민 안전은 확보하면서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후 관련 법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 소비환경에서 먹거리 안전망 강화 필요성과 건강 위해요인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고, 고령화, 1인 가구 등으로 증가하는 급식·외식 인구에 대한 국가적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 및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요도 높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

국민들의 식품 소비 습관 변화에 발 맞추어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와 배달음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설치(2023년 11월)해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까지 신속검사*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 위기 발생 시에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2024년 1월) 했습니다.

* 검사 소요시간 : 4~5일 → 4시간

부적합이 반복되는 제품은 영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 방사능 정밀 분석을 위한 신규 장비를 지속 도입하는 한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함께 국제 기준의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방사능이 극소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국내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통관 검사체계 강화해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검사관이 수행하는 서류심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물 대상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 24)를 본격 시행(2023년 9월)해 365일·24시간 자동심사·수리하는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검사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 단축으로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를 본격 시행해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이행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의 먹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안전 | 국민안전 | 국민안전

1. 동아시아 8개 현 15개 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함께 국제 기준의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함께 국제 기준의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방사능이 극소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국내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통관 검사체계 강화해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 검사관이 수행하는 서류심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물 대상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 24)를 본격 시행(2023년 9월)해 365일·24시간 자동심사·수리하는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검사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 단축으로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2024년 1월 1일부터는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를 본격 시행해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이행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의 먹거리

4. 2024년 1월 1일부터는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를 본격 시행해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이행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의 먹거리

오직 국민, 안심입니다.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한국의 축·수산물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은 일률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세포배양식품 등과 같이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을 한시적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2023년 5월)하는 등 대체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성은 확보하는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최근 친환경을 표방하며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 및 종이제 식품 용기 등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중금속 등) 이행 결과를 조사한 결과, 우리 몸에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2024년 3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알맞은 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적극적 통관검사와 함께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며, 신기술 적용 식품 및 기구·용기에 대해 안전성을 지속 검토해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

전국 68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2023년 11월)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소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심한 영양 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 지원센터 46개소를 추가 설치해 더 많은 급식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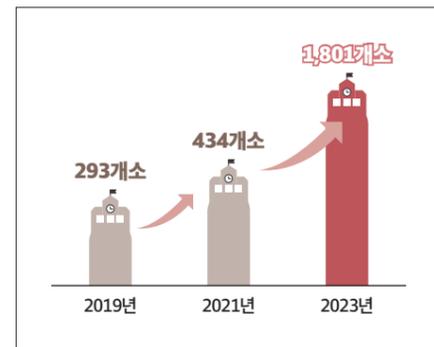
‘청년 식생활 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개시(2023년 3월), ‘치매 위험 성인 대상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2023년 11월) 및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연령별 영양성분 섭취 수준 평가’(2023년 12월)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식생활 진단 및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질환별 환자용 식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 환자용, 수분·전해질보충용, 폐질환자용 식품의 기준 개발을 완료(2023년 12월)했습니다. 향후,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등 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추가 개발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의 점자 등 자율표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3년 6월)했으며,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급식관리 기반을 마련해 따뜻한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 식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혜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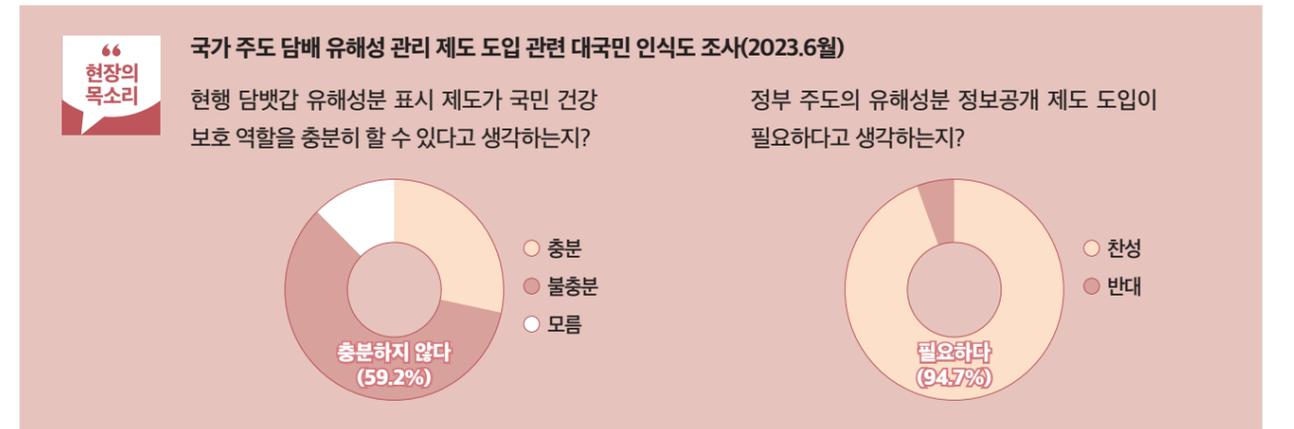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 체계 확립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 52종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해수준을 통합평가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프탈레이트(7종) 및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2024년 4월 예정)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입법 노력으로 관련 법안 발의 10년 만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23년 10월)됐고, 이를 통해 담배 유해성분 대국민 공개 등이 가능해져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비인체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와 협업 인력을 보강하고, 안전관리 협업회의체를 마련했으며, 항생제 내성 국제컨퍼런스를 개최(2023년 9월)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과 국제협력을 통해 항생제 내성 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담배 유해성분 DB 구축 등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통합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찾아가는 환경보건 서비스

윤석열정부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배출시설 밀집지역 등 난개발지역 52개소에 대해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지역 지자체와 공유해 지역 주민 건강 모니터링,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를 유도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건강영향조

사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밀집지역 등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 대상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 대해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컨설팅(2022년 1,902개소, 2023년 1,767개소)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 실내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등에 대해 환경복지서비스 민·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2022년 17개, 2023년 16개)의 물품후원을 통해 도배·장판 교체(2022년 541개소, 2023년 624개소) 등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어르신의 진료비를 지원(2022년 226명, 2023년 267명)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에 기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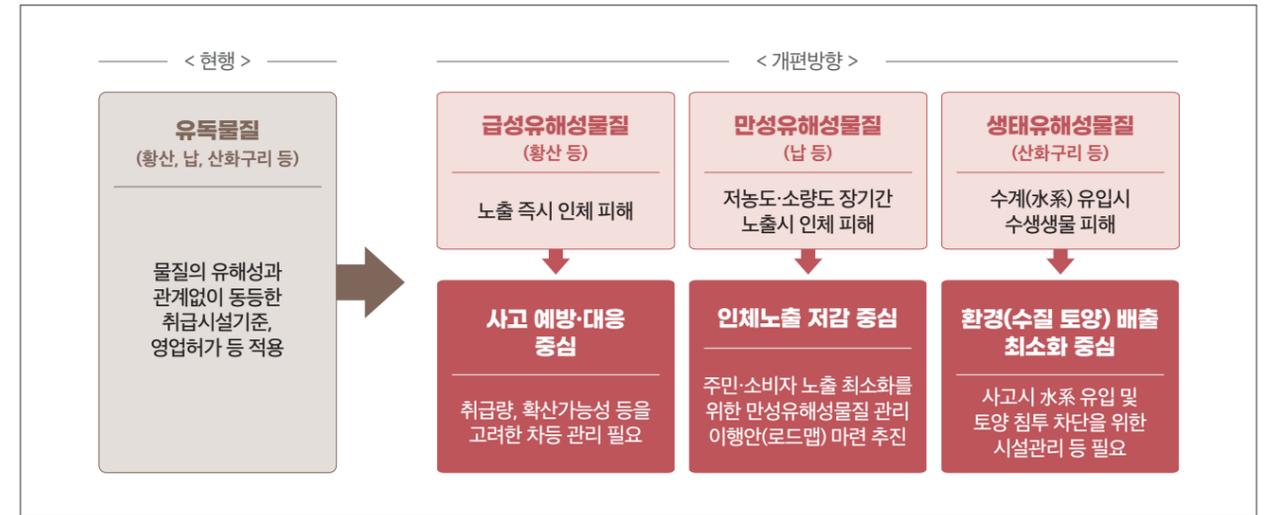
또한, 환경보건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추진 근거법을 마련(환경보건법 개정, 2024년 3월)했습니다.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해 2025년부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계층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거주주민 등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건강·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편 추진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는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기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해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해 왔습니다. 한편,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중한 제도 운영으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관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의 원칙에 따라 국민안전에 담보하면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2022년 12월에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해 화학물질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 지정·관리체계 개선방안 >



<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 >



2023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부터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특성에 따른 차등적, 맞춤형 관리 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만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해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위해 치안산업 진흥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건설·건축현장 안전 확보,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의 향후 5년간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2022년 9월 수립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2023년 3월 수립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집중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2023년 10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 2024년 10월 25일 시행)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운영을 확대했으며,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차량에 대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2023년 1월 22일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2023년 7월 4일 시행)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업 확대 등으로 이륜차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배달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이륜차 위법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확대,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신설 등 이륜차 안전대책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에 전년 대비 6.2% 감소(2,916명 → 2,735명)한 데 이어 2023년에도 2,551명으로 6.7% 감소했고, 보행사망자는 2022년에 8.3%, 2023년에 5.0% 감소했습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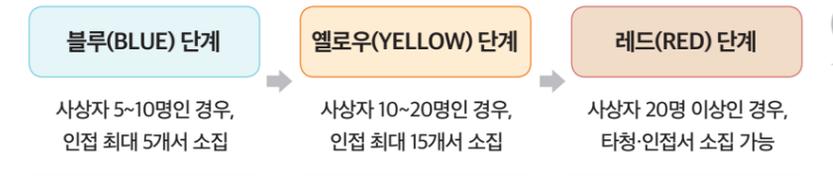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일상확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고위험 성폭력 전과자 특별관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범죄피해자 대상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지원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기존 과태료(500만 원) 사안이었던 임시조치 불이행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 개정 이후 임시조치 건수가 증가(14.8%↑)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잠정조치 3호의 2)을 신설해 경찰단계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주기적 점검 등 일반 관리뿐만 아니라 특정 고위험 범죄자의 경

우 거주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 ▲민간경호 ▲지능형CCTV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등 주거이전 등 안전조치를 강화(전년 대비 4.6%↑)했고, 피의자 구속·양형 등 형사 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와 학교폭력·이웃 분쟁 등에 대화모임을 통한 갈등 해결과 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중요사건 발생시 ‘광역 피해자지원팀’을 구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소년범죄 검거인원은 코로나 19이전을 상회하고 있으며, 저연령화·유형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범죄로 여겨졌던 마약·도박 범죄의 청소년 유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 : (2019년) 8,615명 → (2020년) 9,176명 → (2021년) 1만 1,677명 → (2022년) 1만 6,436명 → (2023년) 1만 9,654명(19.6%↑)
- **범죄소년** : (2019년) 6만 6,204명 → (2020년) 6만 4,584명 → (2021년) 5만 4,074명 → (2022년) 6만 1,220명 → (2023년) 6만 6,642명(9.0%↑)
- **마약** : (2022년) 201명 → (2023년) 790명(293.0%↑)
- **도박** : (2022년) 74명 → (2023년) 171명(131.3%↑)

이에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마약·도박 등 범죄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소년범죄 조기 발견 및 선도·보호 강화를 위해 전일 소년 사건 전수점검·첩보수집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SPO면담·선도제도 연계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그간 경찰 미래연구의 경우 총괄 전담부서 부재 등으로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2015년부터 시작된 치안 분야 R&D사업의 체계적 추진도 어려웠던 만큼, 2022년 12월 장비·시스템·통신망 등 유지·관리 중심의 ‘정보화장비정책관’을 R&D·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재편해, ‘과학치안 정책 → 연구개발 → 실증 → 구매·보급 → 치안산업 진흥·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치안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9월 ‘경찰 미래비전 2050’을 수립해 72개 실행과제에 이어, 2023년 12월에는 ‘경찰 미래 비전 2050’을 전면 반영한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과학치안의 지속 가능한 이행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수사지원 기술’,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112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기술’, ‘4족 순찰로봇’, ‘불법드론 대응 기술’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59개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결과물을 실제 사용하는 현장경찰과 R&D 과정을 공유해 연구성과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건의 R&D 과제에 대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23년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이며,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해 2023년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 총 3,380건 현장조치 했으며(전년 대비 26%↑), 집회 소음 측정시간을 단축시키고 데시벨 기준을 현행보다 5 또는 10데시벨 낮추는 등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집회 신고단계부터 폭력행위 등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619건(2023년 기준)을 금지통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 제고 등 제도개선과 집회 신고 엄격 관리 등 현장 대응 강화 방안으로 이뤄진 ‘집회시위 문화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불법·폭력 집회 우려 시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하고 주요 관서별로 집회·시위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집회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에는 해당 방안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피해가 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 측정방식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는 등 집단적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검단아파트 붕괴사고(2023년 4월)이후, 2023년 8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개월간 선제적으로 전국 민간 무량판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전에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해 단기적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12월 건설산업 전반의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고, 건설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3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위주로 지능형(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년 12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된 올해에는 130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받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0.357%)은 일반 건설현장(0.461%)보다 22.5% 낮아 사고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에서도 스마트 안전장비가 자율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산출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축물을 유지하고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져 감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2021년 56개소, 2023년 102개소 지원을 거쳐 올해는 총 1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건축사 등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안전한 국토 조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충당금 운용규정을 제정하고,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5종 기반시설 약 48만 개의 정보를 조사해 데이터 기반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반지하 공공임대(3천 300호) 및 반지하 주거급여 수급가구(571호) 대상으로 차수관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도시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공간지도 고도화 및 탄소중립도시 공간계획 수립 지원 플랫폼 개발, 실증 등을 위한 R&D를 착수(2023~2027년, 210억 원)했고, 탄소공간지도의 데이터 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 운영기관을 지정(2023년 6월, 한국국토정보공사)했습니다. 도로교통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수소차 등)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항공기 연료의 친환경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지반탐사를 수행하고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로 이어지는 지하 빈공간 탐측을 지원해 도로·인도 등 524개소, 총 1,665.28km 탐사 완료했으며, 특히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공간 178개, 지반 표층 침하 44개를 확인해 지자체 통보 및 긴급 복구 요청해 사전에 지반침하사고를 예방했습니다.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공간재구조화법(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 제정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IC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숲으로 갈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 이용체계 부재로 난개발이 심화되고, 정주여건 악화 및 일자리·생활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복지안전망 확충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해 국가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상시적인 재해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치유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92개소와 지역서비스공동체 30개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등 농촌 주민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해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경북 성주, 전남 화순, 충남 홍성)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촌돌봄마을 개념도>



또한 농식품부는 2023년 8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약칭)이 시행되면(2024년 8월 17일 예정)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농업인 연금보험 수급액(2022년 1인당 34만 9,000원 → 2023년 37만 3,000원) 및 수급자 수(2022년 51만 6,000명 → 2023년 53만 9,000명)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강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2022년 7월-)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5개 영역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해 농작업성 질병 발생을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에는 11개 시·군에서 7,458명이 검진을 받았고, 2023년에는 18개 시·군에서 8,381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50개 시·군대상 3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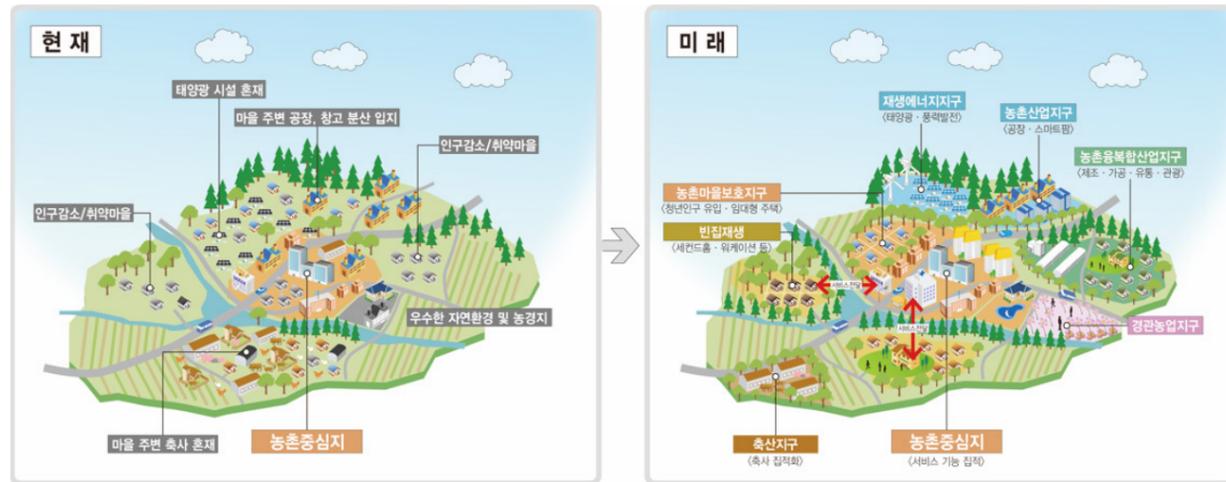
윤석열정부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4년 3월 29일 시행)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이 ‘농사를 짓는 곳’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융복합산업지구, 경관농업지구 등 7개 농촌특화지구 도입해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주택, 산업시설 등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등 지구별로 지정 취지에 맞는 시설이 원활히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와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농촌공간계획하에서 정부는 농촌공간의 체계적 이용·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에서 특색있는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면, 해당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앙-지자체 간 재정 통합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합니다. 2023년까지 농촌협약을 체결한 53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협약했으며, 기초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에 복합 생활 서비스 시설 등을 확충해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촌협약의 연계 분야를 다양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촌협약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공간 계획>



아울러, 농촌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철거·이전)하고 정비 부지를 재생사업으로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2021년 4개소에서 2023년 68개소(누계)로, 관련 예산은 2021년 25억 원에서 2023년 7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향후 농촌의 난개발 요소 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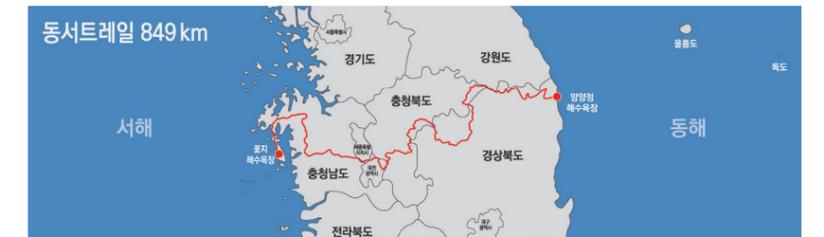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1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수혜임가당 평균 243만 원(6.4%↑, 2022년 대비 2023년 12월 기준)의 소득이 향상됐으며, 2023년에는 서류 간소화, 종사일 수 완화(90일 → 60일) 등 제도를 개선해 임업직불제 수혜자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극한기후로 인한 냉해, 호우, 태풍으로 임산물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임업인의 조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2023년 기준 49.7%)을 높이고 임업인 용자지원(2022년 976억 원 → 2023년 1,214억 원, 24.4%↑)을 확대해 임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 309건을 발굴해 200건(65%)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국민에게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복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2023년)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2023년 6만 명까지 확대 발급했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임업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치매관리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해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 인프라도 1,138개로 확충했고 숲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장거리 트레일(849 km)인 ‘동서트레일’을 조성(2022~2026년)해 국민에게 새로운 숲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981만 명 방문)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145만 명 방문)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선정하는 등 숲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산림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지역 맞춤형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 하고 불량 가로수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을 개정(2024년 1월 2일) 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소각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산림청·농촌진흥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하고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는 등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지, 국가기반 시설 주변으로 AI 기반의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32개단)을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과학화·고도화하고 있으며, 산림재난 간 상호 연계되어 대형 피해로 확산되는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역대 최초로 산불진화대원 70명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산불대응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등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구축(2024년 하반기 완공)하고 있으며,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 구현 추진전략(2023~2027년)’을 통해 마련된 맞춤형 조림지도, 산림물지도 등 디지털 산림주제도를 국민과 임업인이 산림경영과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2023년 기준 71.6%)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산림데이터를 제작·가공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임업의 실현을 위해 2023년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림을 제외한 산림경영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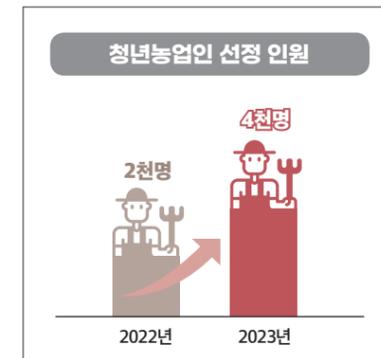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3년 91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3.0%↑),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29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1.2%↑)를 달성했습니다.

그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했으나 농가 고령화, 첨단 기술 활용 부족 등으로 농업을 혁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청년농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자금·교육·주거 등의 정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2년 2,000명, 2023년 4,000명을 선발·지원했으며,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등 청년 맞춤형 농지공급 방식을 신규 도입했으며,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농촌보증자리를 확대(누계, 2022년 5개소 → 2023년 9개소)하는 등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의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적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394단지)를 재편(중점 144만ha, 일반 58만ha)해 산림자원 순환경영 체계를 마련했으며,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목재수확 제도를 도입·시행(2023년 6월 28일)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 산림경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대표적 탄소통조림인 목재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 등)과 목재이용·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 10월 13일)하고 목재친화도시(10개소),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39개소), 목조건축 실연사업(11개소)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목재친화도시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산림분야(11%)가 반영됨에 따라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해외산림탄소흡수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을 제정(2023년 8월 16일)했으며,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2023년까지 26건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등 정책 이행을 위해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2023~2027년)’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12월)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해 DMZ 등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04ha를 확대(3%↑, 2022년 대비 2023년 12월기준) 지정했으며, 산림유전자원이 풍부한 전통사찰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산림생물다양성 보호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을 지정·발굴하고 산림보호구역내 산주 권익 보호를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국민들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7월에는 스마트농업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상주, 김제, 밀양, 고흥) 및 청년농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온실을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2022년 누적 6개소 → 2023년 9개소)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노동집약적인 관행농법 위주 노지 재배방식을 주산지 중심 데이터 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단지 3개소를 선정(태백, 괴산, 의성)해 스마트 영농 확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온실 7,695ha(누적, 전년 대비 6.3%↑), 축사 7,265호(누적, 전년 대비 21.0%↑)의 스마트농업을 보급했고, 과거 관행적인 농법에서 스마트팜 확산에 따라 자가노동시간도 절감했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국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을 2023년까지 14개소를 구축했고, 2027년까지는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판매자와 구매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3년 11월 출범시켜 유통단계 단축 및 10% 수준의 유통비용 절감 등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탄소중립,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중심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지를 집적화·규모화하는 친환경 생산 집적지구(2022년 1,935ha → 2023년 1,954ha)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면적을 확대



(2022년 818ha → 2023년 2,396ha)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체험·교육·문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인식제고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유기 복합 서비스단지 2개소(전남 구례, 충북 청주)를 추가 개장하고 신규 1개소(경북 울진)를 선정하는 등 친환경농업 복합공간을 확산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를 벼·사료작물에서 시설하우스, 과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개선(그간 품질 좋은 액비를 옷거름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규정이 없어 현장 액비 살포기준에 저촉)했으며, 악취발생이 적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처리방식인 가축분 바이오차(Bio-Char)의 시범생산을 본격 개시(2023년 6월, 영덕·의성)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으로 은행 등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한 기술 투자(4억 7,500만 원) 활성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설 지원과 함께 축산환경 전문가·생산자단체와 협력한 ‘악취개선 TF’를 통해 맞춤형 현장 진단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와 민원인이 협업한 결과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은 50% 감소했으며, 전국 30개 지자체 악취개선 주민 만족도에서는 체감 만족도가 향상(2022년 67% → 2023년 74.7%)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한우대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최초 도입해 시판행사를 했고, 한우 사육기간 단축, 적정 분뇨처리 등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농가 50호를 육성하는 등 환경친화적 축산을 확산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축산분야의 환경부담 완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축산업의 저탄소·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으로 우리 일상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에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2023년 2월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성장세인 세계 식품산업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 등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류난 등 어려움은 전용선박·항공기 운용으로 적기에 대응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 결과, 2023년도 농식품 수출은 91억 6,000만 달러(전년 대비 3.0%↑)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29억 8,000만 달러(전년 대비 1.2%↑)를 달성해 K-Food+(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에 민·관 협의체인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가 출범했고, 2023년도 2월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식품부-기업간 업무협약식 (2023년 11월 14일)

기아, 신한은행은 정부가 시설비용을 지원한 경북 의성군 바이오차 생산 시설의 운영비 등을 10년 간 지원,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
→ 정부,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업 구축



‘K-Food’ 수출 확대전략’을 발표해 2024년에는 K-Food*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R&D, 벤처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농림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농식품 R&D 5대 중점분야에 2023년 1조 3,456억 원을 편성했고,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과 민간 수요 기반의 문제해결형 R&D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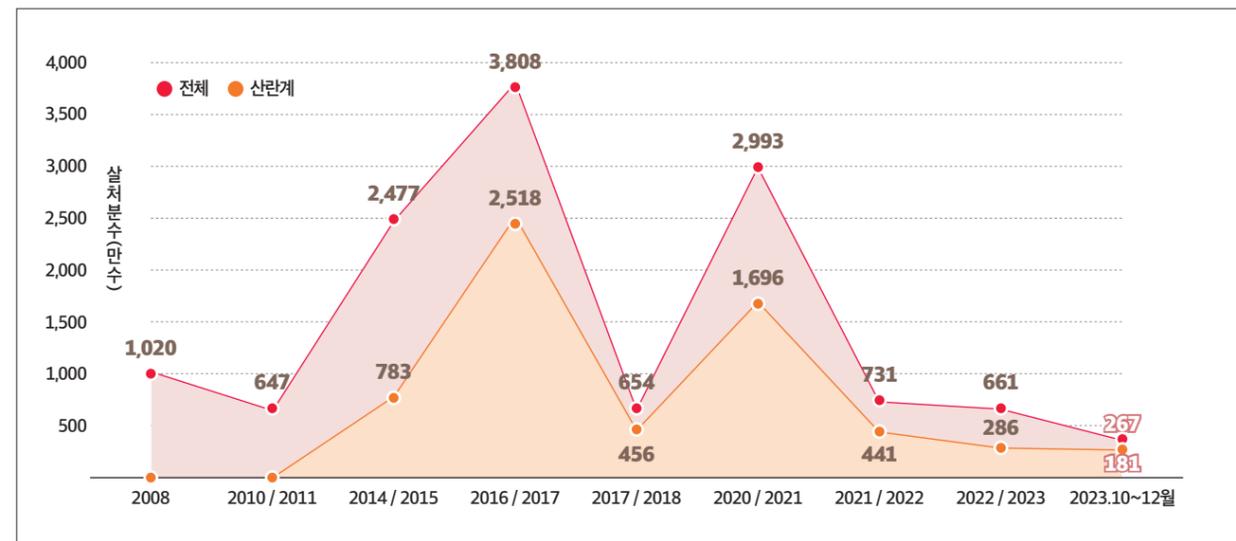
2023년도에는 민간연구 활성화를 위해 고비용 R&D 연구시설을 개방,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및 농업과 학기술통합법 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식품 R&D 상용화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향상(2022년 57.1% → 2023년 58.2%)됐습니다.

질병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사전 대비 및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추진, 민간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산란계 밀집단지 및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집중 관리, 계열화사업자별 자체 자율방역프로그램 등과 함께 과학 기반의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해 2022년 이후 가

<연도별 시 살처분 규모>



금 살처분 규모는 지속 감소(2021년/2022년 731만 수 → 2022년/2023년 661만 수 → 2023년 10~12월 267만 수)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산란계 살처분 가금 수는 최근 10년(겨울시즌, 미발생 시즌 제외) 내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으로 계란값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2022년 3월 평균 소비자가격 6,464원/30구 → 2023년 3월 6,205원)했습니다.

2023년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한 림피스킨의 경우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 최초 발생 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여 만에 안정화 시켰습니다. 림피스킨 발생에 대비해 2022년 백신 사전 비축 및 2023년 긴급행동지침 마련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10월 림피스킨 발생 시 전국 백신접종을 위해 400만 두분의 백신을 신속히 도입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모든 소 농가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기관 등에 질병검사, 소독·방제 등의 방역업무 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 및 빅데이터 기반 KAHIS(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방역조치를 효율화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농촌에 청년농 유입 촉진 및 K-Food*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업 신성장 분야 육성 및 관련 산업 R&D를 적극 지원하고, 축산 분뇨악취·탄소중립 등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정부는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습니다.



20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식량안보 문제는 더욱 구조화·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식량주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식량안보의 외연을 넓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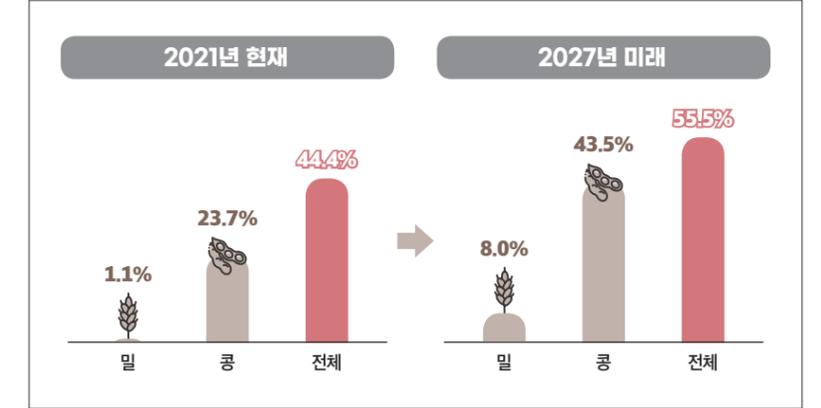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소비는 많지만 자급률이 낮은 주요 식량의 자급기반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밀·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해 국내 생산이 전년(2022년) 대비 대폭 증가(밀: 3만 5,000톤 → 5만 2,000톤, 콩: 13만톤 → 14만 1,000톤)함에 따라 정부비축도 확대했습니다. 가루쌀은 재배면적 확대(2천ha)와 함께 제품 개발을 지원(40억 원)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 이행면적은 12만 5천ha로 목표대비 99% 달성했으며, 2024년도는 전략작물직불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1,865억 원, 전년 대비 744억 원↑)했습니다. 또한 위기 시에도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망 확충을 위한 용자 지원사업(500억 원 규모)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략작물(밀·콩 등) 비축·생산을 확대해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 밀 생산단지(누계) : (2022년) 51개소(7만 6,000ha) → (2023년) 73개소(1만 1,000ha) / 비축 (2022) 1만 7,000톤 → (2023) 1만 9,000톤
 - 콩 생산단지(누계) : (2022년) 121개소(10만 1,000ha) → (2023년) 159개소(11만 7,000ha) / 비축 (2022년) 1만 9,000톤 → (2023년) 3만 3,000톤
 - 밀 자급률 : (2022년) 1.3% → (2023년) 2.0%
 - 콩 자급률 : (2022년) 28.6% → (2023년) 33.6%

2022년 12월 수립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계획에 따라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까지 높이고, 해외 곡물 유통망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2023년 128만 5,000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018억 원을 지급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익직불법 상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완화해 기본직불 지급 농지가 확대(2022년 105만 8,000ha → 2023년 110만 9,000ha)됐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도 전년 대비 2.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농가 : (2022년) 112만 9,000명 → (2023년) 128만 5,000명
- 농업직불제 예산 : (2022년) 2조 4,265억 원 → (2023년) 2조 8,035억 원
- 전략작물직불 예산 : (2022년) 462억 원 → (2023년) 1,121억 원

윤석열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중소농 경영 안정을 위한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120만 원 → 130만 원)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 농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전망 구축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유류·사료비 지원, 금융·조세 부담 완화, 고용인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지자체·농협과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2023년 2,667억 원 규모, 2024년 768억 원)하고 있고, 시설농가에 유가보조금을 지급(2023년 96억 원, 2024년 70억 원)하는 한편,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용자(2022년 1조 5,000억 원, 2023년 1조 원, 2024년 1조 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요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농업인에 대한 2023년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하는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냉해 피해 예방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를 면세유 이용 대상에 추가하고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는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확대(적재량 1톤 이하 → 적재량 1.2톤 이하)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일몰 예정이던 농업분야 조세특례 41건(2022년 22건, 2023년 19건)의 일몰기한을 최대 3년간 연장해 농업인 등의 조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인력부족 해소 및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분야에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로 배정(2022년 2만 6,000명 → 2024년 6만 2,000명)하는 한편, 농촌인력증개센터(2022년 154개소 → 2024년 189개소)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2022년 5개소 → 2024년 70개소)을 확대하면서 2023년 2월부터는 '도농인력증개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총 2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농어업고용인력법이 시행(2024년 2월)됨에 따라 농업분야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3년 1월에 수립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맞춰,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2022년 67개 품목 → 2024년 73개)하고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품목도 확대(2022년 47개 품목 → 2024년 56개)했습니다. 2023년 6~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복구비 보조율 상향(50 → 100%) 및 지원단가 현실화, 특별외로금 지급, 농기계·설비 피해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규모 산정'시 농작물·가축 피해를 포함시키고, 복구비 지원액이 보험금보다 클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농업인이 경영위험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비 부담 완화, 인력부족 해소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합리적 영농의사 결정과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 생산을 위해 항공촬영(드론)을 활용한 재배면적 조사 확대 등 관측정보 수집확대, 마늘·양파 분석 모형개발 및 자문위원 의견수렴 등 품질관리체계 개선으로 농업관측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관측 통계정보시스템(OASIS : Outlook&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주요 채소류 생육 실측조사 결과와 항공촬영을 통해 수집한 품목 분포도 등 농업관측 데이터를 공개해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주요 채소·과일류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생산자단체-지자체-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농협-정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산지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자조금의 기능을 강



화했습니다. 특히 가격변동성이 큰 마늘·양파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4년도 적정 재배면적을 추정함으로써 산지폐기 등 사후 대응이 아닌 생산자 중심의 선제·자율적 수급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농가 참여를 확대(2022년 48.8% → 2023년 50.0%)하고, 비축물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하는 출하조절시설을 지속 확대(2022년 7개 → 2023년 8개)하고 있습니다.

* 채소가격안정제 : 2023년 공급부족 시기 도매시장 출하 장려(배추 1,386톤, 무 778톤)를 통해 가격 안정에 기여(2023년 8월 하순 가락시장 상품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비 23.5% 하락한 4,207원/포기, 무는 전년비 14.1% 하락한 1,955원/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각각 15개 시·군·구, 약 4만 7,000가구, 18개 시·군·구, 약 6만 6,000가구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확대해 24개 시·군·구, 약 9만 7,00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과정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해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거나 병흔이 남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 담당자가 일반농산물과 동일한 검수기준을 적용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요 친환경 농산물의 품위기준과 Q&A를 마련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을 제작·배포해 학교급식 담당자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유인할 수 있도록 유기농데이(2023년 6월), 흙의 날 행사(2024년 3월)를 개최하는 등 가치 소비 확산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에 대비해 주요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관련 가축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산물 PLS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PLS시행반(2022년 10개 시·군 → 2023년 29개 시·군)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유도했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급식 분야에 국산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친환경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본격 도입하고,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해 견고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김 수출 영토 확장을 통해 2023년 수출 1조 원(122개국)을 돌파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 등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복잡하고 중복된 어업규제를 개선해 어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수산업과 어촌은 안정적 식량 공급, 고용 기회와 소득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취약한 생활서비스 등 수산업과 어촌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연근해 어업생산량(천톤) : (2005년) 1,097 → (2010년) 1,134 → (2020년) 932 → (2023년) 956
- 도시/어촌 고령화율(%) : (2005년) 7.1/18.8 → (2010년) 9.1/23.1 → (2020년) 14.6/36.0
- 어가인구(천명) : (2000년) 251 → (2022년) 91(2000년 대비 △63.7%)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해양바이오·해양관광 등 해양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 어촌에 풍요로움을, 해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친환경 스마트 생산 확산

산출량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되,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하고 완화해 어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3년 9월에 ‘연근해 어업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업인이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2021년 12종에서 2023년 15종으로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2027년 이후 총허용어획량제도를 모든 어종과 어업에 전면 도입해 1,500여 건의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해 바다숲 2023년 25.41km를 신규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바다숲 총 447km와 산란·서식장 2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식장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2023년 12월 완도에 연간 5,760톤 규모의 어린전복 전용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넙치 양식을 위한 배합사료 제주 생산 공장의 증축도 지원해 현재 연간 1만 2,000톤의 생산 규모를 2025년 1만 8,000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양식 확산의 거점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부산, 전남 신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제주 등에 조성합니다. 2024년 3월에 준공된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포함해 연어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강원, 포항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026년부터는 연간 약 5억 달러 규모의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K-블루푸

드의 국내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넙치를 주요품목으로 하는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사육정보의 데이터화, 최적 사육조건 도출, 질병 저항성 강화로 넙치 생산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중소규모 위주의 수산식품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산권과 전남권에 가공·R&D·수출 기능을 집적화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전북권과 경북권에 IoT·AI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관계 부처 합동 국제박람회와 K-씨푸드관 입점 확대, 공동물류시설 확충 등 현지 수출 마케팅과 수산식품 수출 인프라를 강화해 2022년 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초 30억 달러를 돌파한 31억 6,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우리나라 김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전남 신안·해남, 충남 서천)를 지정하는 등 지원을 통해 2023년도 한국 김 수출은 수산식품 단일 품목 최초 1조 원을 돌파한 7억 9,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2024년에도 김산업 진흥구역 2개소(전남 장흥·진도)를 추가 지정하는 등 김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수산식품 수출실적(억 달러) : (2019년) 25.1 → (2020년) 23.1 → (2021년) 28.3 → (2022년) 31.6 → (2023년) 29.97
- 김 수출실적(억 달러) : (2010년) 1.1 → (2021년) 6.9 → (2022년) 6.5 → (2023년) 7.9

국민이 믿고 찾는 신선 수산물 유통·소비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2023년 국내 수산물 전 품종을 대상으로 목표치 8,000건을 초과한 1만 2,012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1만 8,00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확한 정보제공 등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전년보다 확대한 4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1일부터는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등록 대상을 기존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의 가두리·축제식과 수산종자 양식장까지 확대했습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실내온도 10℃ 이하 저온유통을 목표로 ‘저온·친환경 위판장’ 11개소의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위판장의 나무 어상자 약 80만 개를 재순환(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하고, 저온차량 6대도 올해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노후위판

장 100개소를 저온·친환경 위관장으로 개선해 전체 위관물량의 80%를 저온 환경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수산물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역대 최대규모의 정부 비축예산 2,065억 원과 할인지원 예산 1,338억 원을 확보해 정부 비축물량의 상시 공급과 매월 할인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 생활수준 향상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생활서비스·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어촌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3년 65개소, 2024년 35개소 등 2년간 어촌 100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은 도시 수준으로 향상되고, 어촌생활인구는 2020년 940만 명에서 1,15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16명에서 2027년까지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전국 각 지역에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12개소와 귀어학교 8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귀어인의 집 6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자금 지원대상(2022년 225명 → 2023년 227명 → 2024년 290명)과 월 지원금 상한액(2022년 100만 원 → 2023년 110만 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어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22년부터 청년어업인이 어선주에게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중개하고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양식장에 대해서도 임대제를 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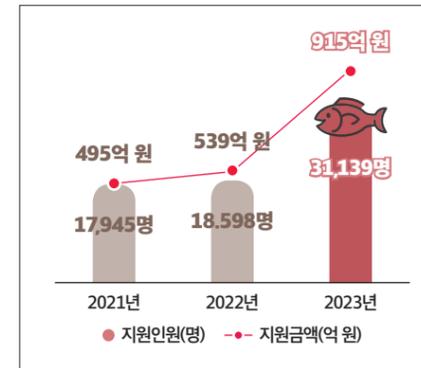
수산자원·해양환경 보전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세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로 직불제 수혜대상이 2022년 1만 8,598명에서 2023년 3만 1,139명으로 67.5% 가량 대폭 확대됐습니다. 2024년에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를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3,000만 원 → 5,000만 원)와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한도(조합원당 최대 3,000만 원)를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2024년 2월에 개정했습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유형 >

-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경제 기반 확충 + 생활서비스 공급
-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형 소득원 확대 + 어촌 생활편의 지원
- ③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
생활환경 개선 + 교통편의 증진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로 소득안정망 구축 >



<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한 경영지원 >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년)’을 2022년 7월 수립했습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남도 서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를 포함해 동·서·남해에 권역별 산업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뱅크를 확대 운영해 2023년부터 항생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 1,120점에 대해 효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실물자원도 분양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지원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제주 추자도)에서 파력발전 전력 시범 생산과 실증 운영에 성공해 2022년에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조류발전은 국내 해양에너지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2022년)를 획득해 관련 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올해에는 해양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해양그린수소 생산기술’의 육상성능시험과 실해역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양신산업 분야 창업자에 대해 창업도전-집중보육-자금확보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창업기획자(4개사)를 지정·운영해 전문적인 창업기업 보육, 사업화 컨설팅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컨설팅, 투자기관 대상 기업 IR(연 4회),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했습니다. 해양수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블루푸드테크펀드 등 593억 원 이상 규모의 해양·수산 펀드 3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

세계 해양관광은 2030년까지 연 5.7%, 5조 달러 규모의 고성장이 예측되며, 최근 웰니스, 크루즈 등으로 국내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2023년 11월 국내 최초로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고 100일 만에 방문자 1만 8,000여 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동북아 최초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크루즈의 입항 재개를 결정해 27만여 명이 관광객이 방문, 약 2,7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을 2023년 3월 수립해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중장기 비전 하에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해안 지역에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해양관광지와 전국 바닷길을 잇는 거점형 마리나, 소규모 계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추진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어촌·수산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해양레저·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